

6·15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 지속과 변화

연구책임자 | 허문영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6·15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 지속과 변화

연구책임자 | 허문영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형태 : 지속과 변화

인 쇄 2005년 12월

발 행 2005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연구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5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7,500원

© 통일연구원, 2005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형태 : 지속과 변화 / 허문영 책임연구. — 서울 : 통일연구원, 2005

p. ; cm. — (연구총서 ; 05-14)

ISBN 89-8479-338-8 93340 : ₩7,500

349.11-KDC4
327.519-DDC21

CIP2005002872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

지속과 변화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문제 제기	1
II. 협상에 대한 이론적 논의	5
1. 협상 개념	7
2. 협상행태 구성요인	9
3. 협상행태 결정요인	17
4. 협상행태 특징	22
III. 6·15 공동선언 이전 대남협상행태	29
1. 남북회담 개요 : 남조선혁명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	31
2. 협상행태 결정요인 : 특수협상관	37
3. 협상행태 : 전사적 협상	42
IV. 6·15 공동선언 이후 대남협상 행태	57
1. 남북회담 개요 : 主 실리추구, 從 통일전선 사업 모색	59
2. 협상행태 결정요인	110
3. 협상행태 특징 : 상인적 협상	131

V. 6·15 공동선언 이전과 이후 대남협상 행태 비교	151
참고문헌	158
최근 발간자료 안내	175

표 목 차

<표 II-1> 협상자 관계 및 협상태도와 협상전략 모델의 연계 ...	13
<표 II-2> 협상성격의 분류	25
<표 II-3> 협상성격과 협상전략	26
<표 IV-1> 남북 당국자회담 횟수	62
<표 IV-2> 남북장관급회담 합의내용(2000. 7~2005. 10)	85
<표 IV-3> 6·15 공동선언과 주요 합의내용 비교	93
<표 IV-4> 남북합의사항 이행여부	97
<표 IV-5>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주요 합의내용	102
<표 IV-6> 1~10차 경추위 주요 합의사항 이행여부	104
<표 IV-7> 군사회담 주요 합의내용(2003~2005)	107
<표 V-1> 북한의 대남협상행태 비교	157

그 림 목 차

<그림 II-1> 협상전술	17
<그림 II-2> 협상행태 결정요인	19
<그림 IV-1> 통일전선부 기구도	127
<그림 IV-2> 민경협 기구도	129

I

문제 제기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5년 10월 말 현재까지 남북한은 총 159회의 당국 및 준당국 회담을 개최하였다.¹ 남북대화는 9·11 테러사태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무기개발의혹문제, 이라크전 등 여러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진행되었다. 회담 횟수 또한 2000년 26회, 2001년 8회, 2002년 33회, 2003년 38회, 2004년 25회로, 2005년 10월 말 28회로 확대 추세에 있다. 남북대화는 정례화 되는 동시에 실무화·전문화 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논쟁을 지양하고 실질 협의 중심의 회담 운영방식 또한 정착하는 모습이다.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시(2003. 10. 14~17, 평양) 북측 대표 또한 “90년대 초 회담이 어디 회담입니까? 싸움박질이지. 지금 회담하곤 다르지요”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도 남북회담의 실질적 변화 필요성을 인정하는 모습이다.

그러면 북한의 대남협상행태는 과연 변화하고 있는 것인가? 혹은 탈냉전 상황의 도래로 인해 북한의 협상행태도 변하고 있다고 본다.² 반면에 상당수 전문가는 분단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협상행태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주장한다.³ 아니면 근본적 변

¹ 통일부,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5), p. 35; <www.unikorea.go.kr>.

² 김도태·제성호, 핵관련 북한의 협상전략전술 분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임동원, “남북고위급회담과 북한의 협상전략,” 곽태환 외,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 관계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7), pp. 119~121.; 홍양호, “탈냉전시대 북한의 협상행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pp. 52~53.

³ 이동복,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협상전략: 과거 대북회담을 기초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제4기 고위정책과정 강의 자료집 (서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0), p. 216; 송중환, 북한 협상행태의 이해 (서울: 오름, 2002); Chuk Downs, *Over the Line: North Korea's Negotiating Strategy*, With a Foreword by James R. Lilley (Washington, D.C.: AEI Press, 1999), 송승중 옮김, 『북한의 협상전략』 (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9), p. 404.

화는 아닐지라도 약간의 변화가 보이는, 지속과 변화의 측면이 함께 있는 것인가?⁴

이 같은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행태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대응이 요청된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정상회담이후 김정일정권의 대남협상행태 특징을 이전 김일성시대 대남협상행태와 비교해서 그 지속과 변화 여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협상에 대한 일반적 개념정의를 살펴본 후, 북한의 대남협상행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성격 규정 지을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김일성시대 북한의 전통적 협상행태 특성을 정리한 후,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협상행태 특성을 남북정상회담이후 진행된 각종 남북회담(특히 남북장관급회담을 중심으로)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동영 통일부장관 면담 시(6. 17) 그 동안의 남북회담이 “5분 정도의 덕담이 끝나면 주먹질하고 말씨름하고 소모적인 회담을 해 온” 것으로 특징지우고 바꿀 것을 약속하였다. 중앙일보, 2005년 6월 18일.

II

협상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협상 개념

협상(Negotiation)에 대한 개념정의는 매우 다양하다.⁵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 교환 또는 공통되는 이익(common interest)의 실현에 관한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명백한 제안이 표면상 제시되는 과정”⁶
- “나와 상대방이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상반된 이해관계에 처했을 때 합의를 보기 위해 밀고 당기는 대화”⁷
-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있는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그들 사이의 거래에서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가를 합의하는 상호작용”⁸
- “두 당사자가 하나의 공동 결과물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개인이나 집단 또는 국가가 절충과 타협을 통하여 서로 상충되는 이익을 조절 또는 공통된 이익의 획득을 위하여 추진하는 상호작용의 한 형태”⁹

⁵ Chas. W. Freeman, Jr., *The Diplomat's Dictionary*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2001), pp. 177~196; Graham Evans & Jeffrey Newnham, *The Penguin Dictiona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Penguin Books.Ltd., 1998), pp. 355~358.

⁶ Fred Charles Ikle, *How Nations Negotiate* (New York: Harper & Law Publisher, 1964), pp. 3~4, 이영일·이형래 공역, *협상의 전략* (서울: 한일 문고, 1972), pp. 14~16.

⁷ Roger Fisher & William Ury, *Getting to Yes: Negotiating Agreement without giving in* (Boston: Houghton Mifflin, 1991), p. xi, 박영환 역, *Yes를 이끌어내는 협상법* (서울: 장락, 1994), p. 7.

⁸ Jeffrey Z. Rubin and Bert R. Brown, *The Social Psychology of Bargaining and Negoti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1975), p. 2.

⁹ I. William Zartman, “The Structure of Negotiation,” in Victor A. Kremenyuk

- “둘 이상의 당사자 간에 가치의 교환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암묵적 혹은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흥정(bargaining)이고, 이 흥정이 공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협상(negotiation)”¹⁰
- “공동의 문제를 안고 있는 둘 이상의 의사결정주체가 임의로 복합적인 이해사안을 주고받는 교환을 통하여, 다른 형태의 행동 결과보다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상호 전략적 조우 과정”¹¹
- “공통되거나 상충되는 이익을 동시에 갖는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그들이 함께 결정한 방식을 통하여 현재보다 좀 더 진전된 것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적 영향력의 상호작용 과정”¹²
- 협상(negotiation)은 상거래에서 손익계산만을 따지는 흥정(bargaining)과 다른 것으로서, “개인과 집단 또는 정부가 명시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공통적 이해관계를 조정, 타협해 나가는 상호작용의 한 형태” 또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당사자들이 타협을 이루는 과정”¹³

이상의 개념정의들을 종합해 볼 때, 협상이란 “둘 이상의 당사자 간에 상충하는 이해관계가 존재할 때, 대화를 통해 이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¹⁴

ed., *International Negoti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1991), p. 65.

¹⁰ Joshua S. Goldstein, *International Relations*, 4th. (New York: Longman, 2001), 김연각 외 역, 국제관계의 이해 (서울: 인간사랑, 2002), pp. 91~93.

¹¹ 이달곤, 협상론 (서울: 법문사, 1995), p. 21.

¹² 양무진, “북한의 대남협상전략 유형”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p. 10.

¹³ 함참전략기획본부, 북한의 협상형태 (서울, 1993), p. 7.

¹⁴ James A. Wall Jr., *Negotiations: Theory and Practice* (Glenview : Scott,

2. 협상행태 구성요인

협상행태(negotiation behavior)¹⁵는 협상자가 협상과정에서 표출하는 협상목표·협상전략·협상전술로 구성된다. 따라서 북한의 협상행태 변화는 협상목표, 협상전략, 협상전술 상의 변화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겠다. 이 글에서는 협상목표·전략·전술 등 모든 차원에서의 변화를 근본적 변화(fundamental change)로, 협상전략·전술 차원에서의 변화를 부분적 변화(partial change)로, 협상전술 차원에서만의 변화를 피상적 변화(superficial change)로 규정한다.

가. 협상 목표

국제협상에서 각 국가들이 갖는 목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¹⁶

① ‘연장협상’(Extension agreement) : 관세협정의 연장·해의

Foresman and Company, 1985); David Churchman, *Negotiation Tactics : Process, Tactics, Theory* (Bost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3); 김도태, 남북한 협상행태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김도태·차재훈,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송중환, 북한 협상행태의 이해 .

¹⁵ 홍양호는 협상목적과 구조(goal and structure)·협상환경(environment)·인식(perception)·행동패턴(pattern)·태도(attitude) 등이 협상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홍양호, “탈냉전시대 북한의 협상행태에 관한 연구”, p. 8 김용호는 협상스타일을 ‘협상행태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의 총합’으로 정의함으로써 협상스타일을 협상행태의 상위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용호, “공산주의 국가의 협상 스타일 비교: 북한, 중국, 구소련,”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서울: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95), pp. 327~331.

¹⁶ Fred Charles Ikle, 협상의 전략, pp. 38~54; Graham Evans & Jeffrey Newnhan, *The Penguin Dictiona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 356.

군사기지 유지권의 갱신과 같이 현존 협정의 시한을 연장함으로써 정상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협상.

- ② ‘정상화협상’(Normalization agreement) : 정전(cease fire)을 통해 전투를 중지시키거나 외교관계를 다시 수립하거나 전후의 불명확한 관계를 강화조약을 통해 정식화하는 것 같이 비정상적 관계를 종결짓고 묵시적 합의를 공식화하려는 협상
- ③ ‘재분배협상’(Redistribute agreement) : 영토·정치적 영향력·경제 및 군사적 자산 등을 새롭게 분배함으로써 현상을 변경시켜 공세측(offensive)에 유리한 양보를 수세측에 강요하는 협상
- ④ ‘혁신협상’(Innovation agreement) : 새로운 제도(국제연합, 국제원자력기구 등)를 창설하거나 협상국간에 새로운 관계나 의무를 설정하여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협상
- ⑤ ‘부수효과협상’(side-benefits) : 합의에 상관없이 부수효과를 얻기 위해 진행되는 협상

나. 협상전략

협상전략 또한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¹⁷ 협상전략은 먼저 성격에 의해 크게 2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하나는 능동적 수단으로서의 정의이고, 다른 하나는 수동적 이정표로서의 정의이다. 전자는 ‘상당한 혼조가 예상되는 상호작용과정에서 (상대방을 변화시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일련의 결정과 정책

¹⁷ Dean G. Pruitt, “Strategic Choice in Negotia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27, no. 2 (Nov. 1983), pp. 172~185.

방향¹⁸을 의미한다. 후자는 ‘협상자가 협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상목적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협상을 이끌어 가는 기본태도¹⁹를 의미한다.²⁰

이 같은 협상전략은 협상자 태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전략과 응용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²¹ (<표 II-1> 참조)

(1) 기본전략

첫째, 문제해결전략(협력전략: problem solving strategy, collaboration strategy)은 합의도출 가능성이 높거나 협상의제 해결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적극적 전략이다. 고협력-고갈등 관계에 있는 협상자 간에 선택된다. 이 경우, 협상은 상호 이익을 기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기본적으로 공동이익을 극대화시킨다는 동기에서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긴다(I win, You win)’는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 전략²²이다. Non Zero-Sum 적 특성을 가진다.

둘째, 경쟁전략(대립전략: contending strategy, competitive strategy)은 협상의 목적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일방의 입장을 타방에 설득시키는 전략이다. 고갈등-저협력의 협상자 사이에 나타난다. 대결과 제압적 자세로 인해 합의도출이 어렵다. 상대방의 이익을 희생하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동기에서 ‘나는

¹⁸ 이달곤, 협상론, p. 32.

¹⁹ 홍양호, “탈냉전시대 북한의 협상행태에 관한 연구,” p. 13.

²⁰ ()안의 구절은 필자의 보완이다.

²¹ Dean G. Pruitt. “Strategy in Negotiation,” in Victor A. Kremenyuk ed., *International Negotiation*, pp. 78~89; Roy J. Lewicki and Joseph A. Litterer, *Negotiation* (Homewood, Illinois: Irwin, 1985), pp. 116~121.

²² Roy J. Lewicki and Joseph A. Litterer, *Negotiation*, p. 120.

이기고, 당신은 진다(I win, You lose)’는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 전략²³이다. Zero-Sum적 특성을 띤다.

셋째, 양보전략(순응·굴복전략: yielding strategy, accommodative strategy)은 고협력-저갈등 경우에 선택된다. 양보의 정도가 클수록 협상 성공가능성은 높아진다.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한 동기에서 자신의 목표를 상대방의 목표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당신은 이기고 나는 진다(You win, I lose)’는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 전략이다. 충돌비용이 엄청나거나, 재난이 예상되는 시한이 임박했을 때 선택된다.

넷째, 무행동전략(inaction strategy)은 회피와 무시를 통해 잠정적으로 협상을 중단시키는 전략이다. 저협력-저갈등 경우 많이 선택된다. 이 경우, 시간의 낭비가 많으나 불리한 입장에 있는 협상자가 국면전환을 위해 또는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시켜 유리한 양보를 얻으려 할 때 채택된다.

네 가지 전략 가운데 문제해결·경쟁·양보 전략은 합의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점에서 대처전략(coping strategies)으로도 명명된다.²⁴

(2) 응용전략

첫째, 혼합전략(mixed strategy)은 경쟁전략, 문제해결전략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복잡한 협상에서 선택된다.²⁵ 혼합 전략은 상대방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 경쟁전략을 사용해야

²³ *Ibid.*, p. 120.

²⁴ Dean G. Pruitt, “Strategy in Negotiation,” p. 167.

²⁵ 허만호 외, 북한의 군사협상전략과 기술분석 및 대비방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3), p. 29.

할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양 당사자 모두에게 좋은 새로운 대안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어서 문제해결전략을 위한 협조도 필요할 경우에 사용된다.

둘째, 맞대응전략(TFT : tit for tat strategy)은 상대방이 자신의 전략선택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여 스스로 행동변화를 일으키려는 협상전략이다.²⁶ 상대방이 협조적 태도를 취하면 같이 협조자세를 취하고, 상대방이 적대적 자세를 취하면 같이 적대자세를 취한다.

셋째, 그리트전략(GRIT: gradual reciprocation in tension reduction)은 화답을 통해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전략이다. 적대관계에서 상대가 착취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양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상대를 화답하는 과정으로 유도하고, 이러한 일련의 상호작용을 통해 갈등수준의 침체화를 막고 갈등을 해소하려 한다.²⁷

<표 II-1> 협상자 관계 및 협상태도와 협상전략 모델의 연계

협상자 관계	협상태도	협상전략
고협력 - 저갈등	양보, 유화	양보전략
저협력 - 저갈등	회피, 무시	무행동전략(그리트전략)
고협력 - 고갈등	타협, 공모	문제해결전략
저협력 - 고갈등	대결, 제압	경쟁전략(맞대응전략)

²⁶ Robert Axelro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1984).

²⁷ Charles Osgood, *An Alternative to War or Surrender*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2); S. Lindsfold, "Trust Development, the GRIT Proposal and Effect of Conciliatory Acts on Conflict and Cooperation," *Psychological Bulletin*, Vol. 85 (1978), pp. 772~793.

(3) 위기관리전략²⁸

국가들은 각각 협상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기 위하여 전략을 선택하는데, 위기상황에서는 두 전략 간의 상호작용이 타협, 협상의 성격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은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알렉산더 조지(Alexander George)는 위기관리전략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²⁹

첫째, 변화의 목표추구를 위한 공세적 전략(offensive crisis management strategy)이다. 공세적 위기관리 전략유형으로는 ① 위협·공갈, ② 제한적이며 전환이 가능한 시험적 행동, ③ 통제된 압력, ④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통한 기정사실화, ⑤ 게릴라 활동이나 테러리즘과 같은 ‘소모적 전략’ 등이 있다.

둘째, 현상유지를 위한 방어적 전략(defensive strategy)이다. 여기에는 ① 강압적 외교, ② 상대방의 위기확산을 억지하면서 ‘제한된 위기확산 시도’, ③ 상대방이 위기확산을 못하도록 억지하면서, 도발에 대한 ‘신중히 계산된 응징’, ④ 상대방의 확산억지와 능력시험, ⑤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 강한 대응을 초래하는지 확인시켜 주는 ‘한계선 획정 전략’, ⑥ 협상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끌기 전략’ 등이 있다.

²⁸ 전인영, “북한의 대미 협상행태의 특징,” 북한의 협상행태와 한국의 대응방안 (서울: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95), p. 8.

²⁹ Alexander L. George, “Strategies for Crisis Management,” in Alexander L. George(ed.), *Avoiding War: Problems of Crisis Management* (Boulder: Westview Press, 1991), pp. 372~393.

다. 협상전술

협상전술은 협상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기술 및 방법을 가리킨다. 즉 협상전략이 협상의 목적에 따른 기본방침인 반면, 협상전술은 협상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기술 및 방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협상이 진행되는 한 협상전략은 기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나, 협상전술은 협상상황 또는 협상조건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다.

첫째, 월(James A. Wall)은 합리성 개념을 적용하여, 협상전술을 합리적 전술(rational tactics)과 비합리적 전술(irrational tactics)로 구분한다.³⁰ 전자는 협상자 협상조건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술을 선택하여 협상상대로 하여금 협상목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전술이다. 후자는 협상상대의 반응이나 협상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이나 입장을 고수하여 협상자가 최대의 협상이익을 포기하게 되는 전술을 지칭한다.

합리적 전술 안에는 일방적으로 상대의 태도를 바꾸려는 흥정전술(bargainig tactics)과 쌍방합의를 도출하려는 논쟁전술(debate tactics)이 있다.³¹ 흥정전술 안에는 공격적 전술(aggressive tactics)과 비공격적 전술(nonaggressive tactics)³² 그리고 태세적 전술(posturing tactics)이 있다. 공격적 전술은 위협(threat)³³이나

³⁰ James A. Wall Jr., *Negotiations: Theory and Practice*, pp. 65~67.

³¹ 흥정전술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상대의 태도를 바꾸게 하여 합의를 도출하려는 전술을 가리킨다. 논쟁전술은 합의도출을 목적으로 하되, 토론, 설명, 설득, 중합, 제안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협상자간 공동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다. *Ibid.*, pp. 50~58.

³² 타협의 수단으로는 명분의 확보, 사과, 양보, 협상목표 표출 등의 방법이 있고, 보상의 수단으로는 상대 체면 세워주기, 대화창구 개설, 사전 약속, 상대지위 보장, 기타 가치있는 재화의 제공 방법 등이 있다. *Ibid.*, pp. 55~58.

실제의 강제력(coercive)³⁴을 수단으로 사용한다. 비공격적 전술은 타협(conciliatory)과 보상(reward)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태세 전술은 강경전술(tough)³⁵과 온건전술(soft)³⁶ 그리고 중도전술(neutral)³⁷로 구성되어 있다. 공격적 전술은 주로 경쟁전략의 전술로 구사되고, 비공격적 전술은 양보전략의 전술이 된다.

한편 논쟁 전술 안에는 협상구조에 대한 논쟁,³⁸ 문제해결을 위한 논쟁,³⁹ 경쟁적 논쟁⁴⁰이 있다.

둘째, 처치맨(David Churchman)은 협상이 개시된 이후 협상대표들이 사용하는 협상전술로 수용에 필요한 시간(acceptance time), 의제(agenda), 모호성(ambiguity), 나쁜 협상자와 좋은 협상자로

³³ 위협이란 협상상대가 자신이 요구하는 응하지 않는 경우 상대에게 손해를 입힐 의도를 표출하는 것으로, 강요와 저지, 공갈과 경고 등을 통해 상대의 양보 요구, 보복사용, 인내의 한계 표출, 긴장 조성 등이 구체적 실천방법이다. *Ibid.*, pp. 50~51.

³⁴ 위압전술로도 해석되며, 실질적 손실을 가하지 않는 위협전술과 달리 실제로 상대에게 손실을 입히는 전술이다. 협상의도 은폐, 무응답, 지연, 약속요구, 살라미 양보, 협상계속 강요, 우선양보 요구, 주도권 장악, 진빠기, 협상조건 제시, 선강경 후절충, 협상중단, 일전불사, 불가사항 요구, 요구 확대, 타결사항 무시 등이 있다. *Ibid.*, pp. 53~55.

³⁵ 강경전술은 상대의 의도를 알고 이를 미리 봉쇄하기 위해 사용되며, 협상회기 연장 거부, 협상상대 무시와 놀라게 하기, 협상시한 무시, 위협, 기대보다 부풀린 상대 양보요구와 상대 거부에 대한 보복의사 표출 등이 있다. *Ibid.*, pp. 59~61.

³⁶ 상대에 대한 존경 표시나 협상시한의 존중, 협상의 우호적 태도가 얼굴 표정, 자신의 겸손, 요구사항의 변경, 정중한 의상 착용 등의 방법이 있다. *Ibid.*, p. 61.

³⁷ 협상에 필요한 인내심,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계속적 논의, 협상상대 자격 시비 회피 등이 그 방법이다. *Ibid.*, pp. 6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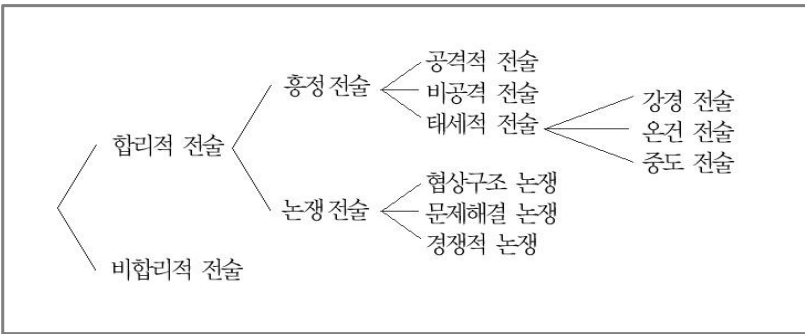
³⁸ 협상대표 자격이나 협상 규칙 또는 협상 의제 등을 주로 다룬다. *Ibid.*, pp. 62~63.

³⁹ 의제에 관련된 제안, 상대의 반응을 고려한 토의, 문제와 해결책 제시, 협상상대의 위치 확인, 상대 떠보기 발언 등을 하게 된다. *Ibid.*, p. 64.

⁴⁰ 제안의 설명, 관련정보 제공, 논리적 설득, 상대의 반응 파악 및 대응, 협상대안의 제시, 거짓정보의 활용 등을 수행한다. *Ibid.*, pp. 64~65.

역할 분담한 협상대표단 구성(bad guy/good guy), 허세(bluffing), 불와리즘(Boulwarism),⁴¹ 시한(deadline), 전제조건(precondition), 살라미(Salami slicing), 극단적 요구(Sibylline books), 침묵(silence), 위협과 최후통첩(threats and ultima tums) 등 51가지의 다양한 전술을 제시한다.

<그림 II-1> 협상전술



3. 협상행태 결정요인

협상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다. 소여(J. Sawyer)와 게츠키(H. Guetzker)는 협상목적과 협상여건(negotiation setting) 그리고 협상당사자의 다양한 문화적·개인적 배경자료 등을 사용하여 협상과정과 그 협상결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바 있다.⁴² 이달곤 또한 협상행태는 문화적 가

⁴¹ “처음이자 마지막 제안(First and Final Offer)”이란 말로 이 전술은 특징화된다. 협상자들이 마지노선 가격을 내어놓고 어떤 양보도 거절할 때 사용하는 전술로서, 제네랄 전기(GE)의 협상자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David Churchman, *Negotiation Tactics : Process, Tactics, Theory*. pp. 33~34.

치·사회적 여건·개인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한다.⁴³ 송중환은 각국이 각기 다른 협상행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각국의 문화·역사·정치체제와 그 나라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들고 있다.⁴⁴ 그는 구소련의 경우 역사의 유산, 혁명적 이데올로기, 실용주의, 외교정책 결정의 비밀주의와 과두체제가 협상행태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의 협상행태 결정요인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다. 전인영은 북한의 대미 협상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목표·상황·협상능력을 들고 있다.⁴⁵ 홍양호는 협상관, 협상목적, 협상구조, 정치체제, 협상자 상호관계, 문화배경이 북한의 협상행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스코트 스나이더(Scott Snyder)는 빨치산 게릴라 전통,⁴⁶ 사회주의 혁명모델 도입, 일본 식민통치의 역사적 경험,⁴⁷ 유교 규범,⁴⁸ 주체사상, 김일성 우상화

⁴² 이달곤, 협상론, p. 54에서 재인용

⁴³ 위의 책, pp. 54~55.

⁴⁴ 송중환, “구소련과 러시아의 협상행태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0집 3호 (2000), p. 248.

⁴⁵ 전인영, “북한의 대미 협상행태의 특징,” p. 8.

⁴⁶ 스나이더는 북한이 압도적 힘을 가진 일본제국주의 앞에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정면공격과 직접적 저항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리고 북한은 최소양보를 통한 최대양보 확보 기술, 연합전선 구축기술, 우회기술과 같은 비정통적 기술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본다. Scott Snyder, *Negotiating on the Edge: North Korean Negotiating Behavior* (Washington D.C.: USIP, 1999), 안진환·이재봉 역, 벵랑끝 협상 (서울: 청년정신, 2008), pp. 50~57.

⁴⁷ 스나이더는 주권상실 경험이 북한으로 하여금 가시적인 중·장기 이익보다 비가시적인 국가의 주권과 독립을 더 고려하게 만들고 있다고 본다. 위의 책, pp. 62~67.

⁴⁸ 유교 사상은 의리(올바름과 원칙)와 충효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결과 북한은 협상원칙에 대해 양보 안하고 절대 사수하며, 또한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의 도덕적 청렴성을 지키려 한다는 것이다. 위의 책, pp. 67~71.

등이 협상행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⁴⁹ 그리고 송중환은 그의 학위논문에서 혁명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협상관, 북한의 정치문화, 환경적응과 실리추구를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II-2> 협상행태 결정요인

$$Y = a X(x_1, x_2, x_3) + b$$

Y (협상행태)
 y_1 (협상목표), y_2 (협상전략) y_3 (협상전술)

X (협상행태 결정요인)
 x_1 , (협상관) x_2 , (협상상황) x_3 , (협상능력)

이와 같은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협상행태와 협상행태 결정요인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협상행태는 북한지도부가 협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북한이 처해 있는 국내외 정세 및 상대방 국가의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북한의 협상대표들의 인적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에 의해 영향받는 것이라 하겠다.

⁴⁹ 따라서 북한은 협상테이블에서 주권이나 내부체제에 대한 비판을 듣게 될 경우,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만 최고책임자가 허용하거나 충분하고 확실한 이익이 보장될 경우, 규율무시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Scott Snyder, *벼랑끝 협상*, pp. 44~84.

가. 협상관

협상관은 협상의 의의에 대한 기본인식을 의미한다. 협상관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⁵⁰ 하나는 긍정적 의미의 ‘일반협상관’이다. 이는 협상을 타협과 양보를 통해 상충하는 이해를 조정하여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 같은 협상관은 외교를 평화적 상업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익정치에 바탕을 둔 상인이론과 유사하다. 현대 서구국가의 협상관은 이에 가깝다.

다른 하나는 부정적 의미의 ‘특수협상관’이다. 이는 협상을 전술적 수단으로써 다른 수단을 통한 투쟁에 불과한 것으로 일방적 승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이는 외교를 또 다른 어떤 수단에 의한 전쟁으로 간주하는 권력정치에 바탕을 둔 무인이론과 유사하다. 공산국가는 이 같은 협상관⁵¹을 갖고 있다.⁵² 예컨대 레닌은 협상을 혁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⁵³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은 협상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의 도구’ 또는 궁극적

⁵⁰ 홍양호, “탈냉전시대 북한의 협상행태에 관한 연구,” pp. 28~33.

⁵¹ Richard. H. Solomon, *Chinese Negotiating Behavior: Pursuing Interests Through ‘Old Friends’*, With a New Essay by Chas. W. Freeman, Jr.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1999); Jerrold L. Schecter, *Russian Negotiating Behavior: Continuity and Transition*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1998).

⁵² 해롤드 니콜슨, 신복룡 역, 외교론 (서울: 평민사, 1992), pp. 56~59.

⁵³ 레닌은 “진실로 혁명적인 당의 임무는 온갖 타협의 거부가 불가능함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타협을 통하여 자기의 원칙, 자기의 계급, 자기의 혁명적 과업, 혁명을 준비하며 대중을 혁명의 승리로 준비시키는 자기 사업에 충실성을 관찰하는 능력을 가지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김용희, “북한의 협상 전략전술에 관한 연구,” 국토통일원 민족통일의 모색, 통일가족논문집 제2집(1990), pp. 266에서 재인용.

으로 공산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협상상황

협상상황은 협상 당사국이 어떠한 국내외적 정세와 상대국의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의미한다. 북한의 경우, 협상상황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해 추진해 온 ‘3대 혁명역량 강화노선’을 적용할 것이다.⁵⁴ 즉 3대 혁명역량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시 말해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와 남한정세 그리고 북한 내부정세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다. 협상능력

이 글에서 협상능력이란 협상대표들과 이들의 배후에서 협상 지침을 주는 지도부의 협상능력을 의미한다. 북한의 협상은 회담조과 실무조에 의해 진행된다. 회담조는 회담에 나가기 전 고급 식사를 취하여 외모를 가꾸고, 명언과 유머를 준비하며, 이전 회담의 성과를 분석하고, 업무를 강경 및 온건 발언자로 구분하고 주요 제의와 부차 제의로 분장한다.

실무조는 배후에서 회담조를 관찰·지도하고, 상부에 직통보고

⁵⁴ 3대 혁명역량 중 북한의 혁명역량은 북한 내부의 정치, 경제, 군사적 역량의 강화 현황을 검토한다. 남한에서의 혁명역량은 본래 혁명의 주력군 형성, 통일전선의 조직 등과 관련된 것이다. 여기서는 한·미관계, 미국의 대북한정책, 남한의 정치, 경제, 군사적 상황과 관련시켜 검토한다.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강화는 본래 사회주의인민과의 단결, 반미입장 지지획득 등을 의미하나, 이 글에서는 국제 및 동아시아 지역정세와 관련시켜 검토하고자 한다. 김일성저작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p. 77~96.

해서 지시를 받는다. 그리고 회담이 끝난 후, 상부의 지시 및 평가에 따라 대대적인 총화를 진행하며, 그 결과에 기초해서 실무조는 해산하지 않고 다음 회의를 준비한다.⁵⁵

4. 협상행태 특징

위와 같이 형성된 협상행태는 그 성격을 다음과 같이 특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각각 선호하는 협상전략도 구분지을 수 있다.

가. 협상 성격

첫째, 협상목적과 협상의제의 일치여부에 따라 진의(眞意)협상과 의사(擬似)협상으로 구분된다. 진의협상은 협상대상이 되는 협상의제를 협상목적과 일치시켜 논의한다. 그 결과, 진의협상에서는 문제가 해결되거나 갈등이 완화된다. 그러나 의사협상은 다른 숨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상을 위한 협상을 진행시키는 즉 위장협상이다. 의사협상의 경우, 협상목적과 협상의제가 일치하지 않는다.⁵⁶

둘째, 협상자 지위(상호간 역학관계)에 따라 균형협상과 불균형협상으로 구분된다. 균형협상은 합의도출에 있어 상호 거부권

⁵⁵ 새터민 인터뷰, 2005년 6월 8일.

⁵⁶ 접촉유지, 폭력적 행동의 대체, 정보수집, 속임수, 선전, 제3자에 대한 효과를 위한 협상 등 협상외적 부수효과(side-effect) 또는 숨은 협상목적을 추구하는 협상을 의미한다. Fred Charles Ikle, 협상의 전략, pp. 55~70.

을 갖는 경우이다. 불균형협상은 어느 일방만이 거부권을 독점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는 불균형협상이 진행된다. 그런데 하비브(William M. Habeeb)는 불균형협상이론(asymmetrical negotiation theory)을 통해 약소국이라 할 지라도 유리한 협상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⁵⁷ 그는 협상이 ‘총체적 힘’(aggregate structural power: 일반적 국력)과 쟁점적 힘’(issue-specific structural power: 대안·통제력·집중력) 그리고 ‘전술적 힘’(behavioral power)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약소국이 강대국에 비해 ‘총체적 힘’은 비록 열세이나, ‘전술적 힘’의 구사와 대안 개발·통제력 및 집중력 제고를 통해 ‘쟁점적 힘’을 신장할 경우, 총체적 힘의 열세를 극복하고, 협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협상 중요도에 따라 중요협상과 일반협상으로 나눌 수 있다. 중요협상이란 협상의 결과가 체제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이다. 일반협상은 안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⁵⁸ 중요협상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으로 인해 합의도출이 쉽지 않다. 또한 같은 사안이라도 존망의 이익(survival interest)이나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의 문제로 접근하는 당사자와 중요한 이익(major interest) 또는 지엽적 이익(peripheral interest)의 문제로 접근하는 당사자와의 사이에는 협상태도와 협상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⁵⁹

⁵⁷ William Mark Habeeb, *Power and Tactics in International Negotiation: How Weak Nation Bargain with Strong Nation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8), pp. 10~26.

⁵⁸ 협상의제와 연결해 볼 때, 정치·군사 문제에 관한 협상은 중요협상이 되고, 경제·사회문제는 일반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⁵⁹ 구영록, 한국의 국가이익: 외교정책의 현실과 이상 (서울: 법문사, 1995),

넷째, 협상결과의 수혜 범위에 따라 분배 협상(distribute negotiation)과 통합 협상(integrative negoti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⁶⁰ 전자는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적 성격을 띤다. 일방승리, 일방패배식 협상(win-lose)으로서 몫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어 어느 일방이 이익을 보는 만큼 상대방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후자는 포지티브섬 게임(positive sum game)적 성격을 갖는다. 협상참여자 모두가 승리하는 협상(win-win)으로서 몫의 크기가 유동적인바, 양자의 협조에 의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신의 이익을 1차적으로 중시하지만, 상대방의 이익까지 포함한 공동이익에 도 관심을 갖는다.

다섯째, 협상당사자들이 일방적 입장에 집착하는 여부에 따라 입장협상(positional negotiation)과 원칙협상(principled negoti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⁶¹ 전자는 협상의 진행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정의로운 해결이라고 믿고 자신의 입장에만 집착하여, 자신의 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협상을 의미한다. 후자는 주관적·인간적인 입장에서부터 탈피하여 객관적이고 이슈 중심적인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협상을 진행시키는 협상을 뜻한다. 이는 입장협상의 반대라기보다는 한 차원 높은 협상이라 할 수 있다.⁶² 따라서 원칙협상은 갈등문제로부터 사람을 분리시켜 생각하며, 입장이 아닌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합의를 성급히 이루려 하기 전에 상호이익을 가져오는 대안들을 개발하며, 협상결과를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판단한다.

pp. 19~36.

⁶⁰ 이달곤, 협상론, pp. 135~136.

⁶¹ Roger Fisher & William Ury, Yes를 이끌어내는 협상법, pp. 33~47.

⁶² 이달곤, 협상론, pp. 135~148.

<표 II-2> 협상성격의 분류

구분기준	협상 성격	
협상 목적과 의제 일치 여부	진의 협상	의사 협상
협상자 지위	균형 협상	불균형 협상
협상 중요도	중요 협상	일반 협상
협상결과 수혜범위	분배 협상	통합 협상
협상당사자 태도	입장 협상	원칙 협상

나. 협상 성격과 협상 전략·전술의 관계

협상성격에 따라 활용되는 협상전략이 다르다(<표 II-3> 참조).⁶³ 의사협상의 경우 협상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양보의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합의도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경쟁전략이나 합의에 무관심한 무행동전략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진의협상의 경우 협상 목적이 합의도출을 통한 협상이의 추구에 있기 때문에 협상자들은 문제해결전략이나 양보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균형협상의 경우, 협상자들은 일방적 양보전략을 제외한 여타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불균형협상의 경우, 강자의 일방적 문제해결자세에 따라 약자의 양보전략, 강자의 경쟁전략, 쌍방의 문제해결전략 중 하나가 선택될 것이다. 중요협상의 경우, 협상의제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양보의 범위가 좁은 경쟁전략이나 무행동전략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협상의 경

⁶³ 김도태, 남북한 협상형태 비교연구, p. 8, pp. 26~27.

우, 협상의제의 중요성이 낮아질수록 양보의 범위가 커지므로 문제해결전략이나 양보전략이 채택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또한 협상전략에 따라 협상전술도 다르게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경쟁전략의 경우 논쟁·요구사항 천명·위협·역위협 등의 협상전술이 구사된다. 문제해결전략의 경우 협동·정보 제공·현안 구체화·대안 제의·현안 공동평가 등이 있다. 양보전략의 경우, 양보·요구사항 철회 등이 있고, 혼합전략의 경우, 화해·대립의 교대·융통성·실무관계 개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계적 분류는 반드시 정확한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관찰을 통해 진단되어야 한다.⁶⁴

<표 II-3> 협상성격과 협상전략

협상 성격	협상 전략
의사협상	경쟁전략, 무행동전략
진의협상	문제해결전략, 양보전략
균형협상	문제해결전략, 경쟁전략, 무행동전략
불균형협상	양보전략(약자), 경쟁전략(강자) 문제해결전략(쌍방)
중요협상	경쟁전략, 무행동전략
일반협상	문제해결전략, 양보전략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볼 때, 북한의 대남협상행태는 협상목표·협상전략(기본/응용/위기관리 전략)·협상전술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북한지도부의 협상관·북한의

⁶⁴ 홍양호, “탈냉전시대 북한의 협상행태에 관한 연구,” pp. 22~23.

국내외 정세 및 남한의 상황과 연계된 협상상황·북한 협상단의 협상능력으로 상정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대남협상행태는 문제 해결 여부·협상자 지위·협상 중요도·협상결과 수혜범위·협상당사자 태도 등에 의해 여러 가지 성격(진의/의사 협상, 균형/불균형 협상, 일반/중요 협상, 분배/통합 협상, 입장/원칙 협상 등)으로 특징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협상전략·전술도 선택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이 글에서는 북한의 대남협상행태 변화 여부를 협상목표·전략·전술 등 모든 차원에서 변화가 있을 때 이를 근본적 변화(fundamental change)로 규정하고, 협상전략·전술 차원에서 변화가 있을 때는 부분적 변화(partial change)로, 협상전술 차원에서만 변화가 있을 때는 피상적 변화(superficial change)로 규정·제시한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협상행태 변화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김일성 시대 대남협상행태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후에 추진된 김정일 시대의 대남협상행태를 목표·전략·전술적 차원에서 비교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와 지속을 초래한 요인을 협상관·협상상황·협상능력 3차원에서 규명할 것이다.

III

6·15 공동선언 이전 대남협상형태 : 공세적 의사(擬似)협상

“남조선 당국과는 이러저러한 협상을 하면서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폭력혁명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 김일성주석 시리아 대통령 환영연설문(로동신문 , 1975. 10. 1) -

1. 남북회담 개요 : 남조선혁명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

가. 「7·4 남북공동성명」

「7·4 남북공동성명」은 1970년대 초 미·중, 중·일 수교 등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국제환경 속에서 남북당국간 주도적 노력에 의해 협상이 결실을 맺게 된 경우이다.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한 양측은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 통일은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점, 사상과 이념 그리고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점 등 3대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 시기 북한은 대외적으로 ‘탈냉전’과 긴장완화, 대내적으로 남북쌍방의 정치적 필요로 형성된 ‘협상상황’ 속에서, 북한의 전통적인 대남전략에 입각한 ‘협상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협상목적과 ‘협상의제’를 분리시키고, ‘의사(擬似)협상’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의사 협상행태는 경쟁적·대립적 전략과 비합리적 전술의 사용을 불가피하게 하였고, 이를 간파한 남한은 강경자세를 견지 남북협상의 결렬로 나타났다. 7·4 공동성명 이후 남북 양측이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쌍방 간의 합의사항을 추진하기 위

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러한 북한의 협상행태에 따라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북한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명제를 협상의제로 삼아, 이와는 전혀 다른 목표인 주한미군 철수와 남남갈등 초래라는 협상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금도 북한은 7·4 공동성명을 「조국통일 3대헌장」 중의 하나로 중시하고 있으며, 7·4공동성명의 3대 원칙을 “북과 남이 통일정책을 작성하고 진행해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기본 지침이며, 민족공동의 항구적인 통일강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⁶⁵ 7·4 공동성명은 그 내용의 측면에서 외세배격을 강조하여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위한 준거로 활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이를 선전도구로 활용하려 하였고, 남한의 태도가 이에 순응하지 않게 되자, 결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북한은 이 같은 대남 전략의 기본목표를 견지하면서, 대남 전략전술을 강화해 왔으며, 선전과 정치적 실익을 배합하는 것이 북한의 대남 협상의 중요한 측면이었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명분과 선전을 매우 중시해 왔는데, 이는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행태이기도 하다. 북한은 선전과 명분을 이용하여 자유체제의 한국 국민들을 친(親)북한 성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며, 가장 전형적인 명분으로 ‘민족’과 ‘평화’ 그리고 ‘자주’를 내세우고 있다.⁶⁶ 이 시기 북한의 대남 협상행태의 가장 두드러진 측면으로 남북 당국간 대화 곧, 남북간 정치회담을 대남 전략전술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무대로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은 진정한 협상목표를 갖지 않은

⁶⁵ 연합뉴스, 2002년 5월 15일.

⁶⁶ 홍관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 (서울: 통일연구원, 2002).

채, 협상을 위한 협상 또는 다른 목적을 가진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이 그들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회담결렬을 불사하였다.

나.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남북기본합의서」는 88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사회주의권의 대변혁으로 야기된 탈냉전적 변화와 한·소수교 및 한·중수교로 대표되는 남한의 북방정책의 간접적 결실로 볼 수 있다. 당시 북한이 직면한 상황은 1970년대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었다. 한·소수교 이후 북·중·소의 이른바 ‘북방 3각 구도’는 붕괴되었으며, 한·중수교 임박으로 인해 북한 지도부는 엄청난 고립감 속에 빠져들었다. 당시 북한은 국제적 고립과 수세(守勢) 속에 대외 외교안보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을 강요당하였던 시기였다. 북한 경제유지에 있어 구 소련의 지원은 필수적 요소였는데 1980년대 후반 북한의 구 소련과의 교역은 대외무역의 50%를 차지하고, 교역량은 25~28억 달러 수준이었다. 그러나 한·소수교 이후 북·러 양국간 교역량은 5억 달러 미만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6공 초기 한국 북방외교의 성공은 북한에게 매우 충격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고립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에 임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북한은 자연스럽게 남한과의 비정상적 관계를 매듭짓고, 어떠한 형태로든 합의를 추구하는 ‘정상화협상(normalization agreement)’ 또는 남한과의 합의를 통해 타측면에서의 ‘부수효과(side-benefits)’를 노린 대남협상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서 북한은 남한과의 협상과 남한으로부터의 지원을 유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다. 김대중 정부 출범 초기 당국간 회담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1998. 3. 25~3. 27)에서 북한이 한국에 비료 20만 톤 지원을 요청하고, 1998년 4월 4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북과 남 사이의 비료 문제 등 서로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부장(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단을 4월 11일 북경에 보내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남북당국대표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한국은 북한이 원하는 비료를 남북 협력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되, 지원비료의 규모를 감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상응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 수석대표 전금철은 “남측의 비료지원은 북남관계 개선의 첫걸음이 되며, 부대 조건 없는 지원은 화해, 단합도모, 북남대화의 새 장을 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의제를 비료문제를 비롯하여 서로 관심 갖는 문제에 대해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적으로 비료 문제부터 토의할 것을 주장하고 비료 지원규모를 50만 톤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 북한은 남한이 남북협력을 갈망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남북협력 용의를 밝히되, 그 조건으로 그들의 협상목표인 대규모 비료지원을 요구한 것이다. 곧 비료에 관해서는 고갈등-고협력 구도의 ‘문제해결전략’과 합리적 전술 내의 ‘홍정전술(bargaining tactics)’을 사용하였고, 비료획득을 위해선 문제해결 전략 하에 적극적이고 협조적으로 임하되, 남북협력사업은 기회

를 보아 사석(捨石)시키는 2중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대표들은 양측 입장을 놓고 협상을 계속 진행했으나, 남한의 상호주의적 포괄적인 해결방안 모색방침과 북한의 선 비료, 후 남북협력사업 논의 주장이 맞서,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차례에 걸친 양측 수석대표 별도 모임이 시도되었으나, 선 비료지원을 요구하는 북한대표와 맞교환식 상호주의를 주장하는 남한대표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회담은 결렬되었다.

라. 정상회담 직전 남북차관급 회담

남북정상회담 1년 전인 1999년만 해도, 북한은 남북대화에 큰 뜻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을 대화의 상대로 신뢰하지 않았으며, 김영삼 정부에 이어 김대중 정부도 신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는 누차에 걸쳐 남북협력의 활성화를 촉구·제시하였으나, 북한 지도부는 자본주의 확산과 ‘오염’을 경계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활성화에만 집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 북한은 서해교전을 도발, 남한 해군에 의해 무참히 패퇴하였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당국대표회담(1998. 4)이 결렬 → 1년 후 남북차관급당국회담 재개 →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999년 4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베이징에서 가진 비공개 접촉에서 쌍방은 1999년 6월 21일부터 남북차관급당국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문제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인 당면문제를 협의하되, 이산가족 문제를 먼저 협의하기로 합의하고, 남한은 7월까지 비료 20만 톤을 북측에 제공하되, 그 중 10만 톤을 회담 시작 전인 6월 20일까지 전달하기로 했다. 결국 남북차관급당국회담은

북측의 비료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우리 측의 이산가족문제 우선 협의입장을 북한이 수용하면서 절충점을 찾아 개최되었다.

1999년 6월 22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남북차관급회담에서 우리 측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우리 측은 서해상에서 발생한 남북 간의 무력충돌과 같은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차원의 분야별 공동위원회가 시급히 정상화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판문점 연락사무소 기능을 정상화시켜 차관급당국회담을 통해 남북 간의 당면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그 해결방도를 마련하는 대화기구로 유지하면서 점차 이를 장관급 또는 총리급 회담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쌍방이 합의한 의제와는 달리, 기조발언문 전체를 서해사건에 집중하면서 이산가족 문제 토의를 외면하여 회담에 난관을 조성했다. 북한 측은 우리 측 함정들이 그들의 영해를 침범하여 그들의 어선을 위협하는 한편, 북한 측 해군함정들의 정상적인 순찰활동을 방해하고 고의적으로 들이받는 도발을 해왔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우리 측이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민족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측은 제2일 회의에서도 이산가족 문제 협의 자체를 기피하고, “이산가족 문제의 보따리는 가져왔으나 서해사건에 대한 남측태도 때문에 던져 버렸다”고 강변하면서, “쌍방입장이 대치되는 조건에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해 봤자 의미가 없다”며 회담 종결을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쌍방은 차기회담을 7월 1일 개최기로 합의하고 제1차 회담을 종료하였다.

제2차 회담(7. 1~3)에서 우리 측은 북한 측에 제공키로 했던

20만 톤 가운데 잔여분 10만 톤의 수송계획이 준비되어 있음을 밝히고, 다만 잔여분이 약속한 기일인 7월 말 내에 전달되기 위해 서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 측은 이를 상호주의라고 비난하면서, 우리 측이 서해사건을 해결하고 잔여비료 제공의 첫 배를 띄우면 이산가족 문제 토의에 들어가겠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이와 같이 쌍방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북측이 전체회의를 종결하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수석대표 단독접촉을 갖자고 제의하여 수석대표 단독접촉에 들어갔다. 그러나 수석대표 단독접촉에서 북한 측은 월간조선 (1999. 7)에 게재된 황장엽의 전화인터뷰 내용과 관련한 성명을 낭독하면서, 우리 정부가 황장엽을 시켜 북한체제를 모독하게 했다며 우리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그 후 북한 측은 우리 측의 설명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또 차기회담의 날짜도 정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퇴장해 버림으로써, 회담은 결렬되었다.

2. 협상행태 결정요인 : 특수협상관

가. 협상관 : 특수협상관

1970년대 남북대화과정에서 북한은 공산국가의 전통적 협상관과 유사한 특수협상관을 보여주었다.⁶⁷ 북한은 정치용어사전 에

⁶⁷ 냉전기 북한은 구소련의 일방적 지원 하에 국가를 형성하였고, 중국의 군사적 지원 하에 체제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구소련과 중국의 협상관과 협상행태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 남북협상을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 과업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조선대표와 남조선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토론하는 것”으로 정의함⁶⁸으로써, 협상을 상위목표인 통일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일성 또한 협상을 또 다른 투쟁 수단으로 인식하는 특수협상관을 보여주었다.⁶⁹ 따라서 이 시기 북한은 서구의 일반협상관과 다른 협상관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국가목표를 한반도 공산화통일과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두고, 대남협상도 기본적으로 남조선혁명을 위한 전술적 수단으로 운용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1980년대 들어와 북한의 협상관은 표면적으로나마 자유 국가의 일반협상관과 유사성을 갖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현대조선말사전에서 협상을 “국가들 사이의 분쟁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외교적 방법 또는 회담,” “(공동의 관심사나 제기된 문제를) 서로 함께 토의하는 것” 등으로 정의하였다.⁷⁰ 그 결과 1993년 북핵위기로 북·미 갈등이 심각하게 고조되었을 때, 김일성은 ‘협상의 방법’으로 풀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⁷¹ 그러나 김정일은 협상에 대해 여전히 이중적 관점을

⁶⁸ 사회과학원,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1971), p. 117.

⁶⁹ “대화건 협상이건 우리는 적을 날카롭게 공격해서 적을 궁지에 몰아넣는 혁명의 적극적인 지류적 공격형태로 생각해야 됩니다.” 金富成, 내가 판 땅굴 (서울: 갑자문화사, 1976), pp. 59~60.; “우리는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으며 분열주의자들과는 어떠한 타협도 할 수 없다.” 김일성의 불가리아 당·정 대표단 환영 연설문; “남조선 당국과는 이러저러한 협상을 하면서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폭력혁명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김일성 시리아 대통령 환영연설문, 로동신문, 1975년 10월 1일.

⁷⁰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현대조선말사전, 제12판 (평양: 종합인쇄공장, 1981), pp. 775, 2342;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평양: 종합인쇄공장, 1992), p. 961.

⁷¹ “이제는 자중하여 우리와 서로 좋게 지내면서 협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짐작

갖고 있음도 보여주었다.⁷²

나. 협상 상황 : 냉전 · 신냉전 · 탈냉전의 변화된 국제정세 조응

1970년대 초반 북한이 적십자회담과 조절위회의 등 남북대화에 나오게 된 것은 국제정세와 남한정세의 변화에 조응하여 국가 목적을 추구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소 대탕트, 미·중 및 일·중 관계개선의 국제환경, 남한의 평화통일정책 추진과 지속적인 경제발전, 북한의 ‘인민경제 7개년 계획’의 부진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대두 등 북한의 정치·군사적 역량을 제외한 3대 혁명역량이 대체로 약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에 대한 적응차원에서 남북대화에 나왔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한은 제3세계에서의 반미성향 증대와 월남의 패망 조짐,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로 인해 국제혁명역량과 남한혁명역량이 다시 강화되자, 남북대화를 중단하였다. 이후 북한은 대민족회의 등 위장 평화통일방안을 선전적 차원에서 제시하는 한편, 지하당 조직 구축 및 박정희 대통령 저격기도, 판문점 도끼만행 등

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김일성, “조국통일의 유일한 출로는 전민족의 대단결이다(1994. 4. 10)”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171; “조선반도의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최선의 방도는 우리와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압력이나 위협은 결코 문제해결의 방도로 될 수 없으며…” 김일성, “미국 씨엔엔 텔레비존방송회사 기자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94년 4월 17일),” 김일성저작집 44 , p. 384.

⁷² “지금 미국이 핵무기축감을 위한 협상에 응하고있지만 이것은 결코 미국 독점체들이 군수산업을 확장하려는 요구를 포기하였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미국은 핵무기축감을 위한 협상에 응하면서도…모험적인 《별세계전쟁》 계획을 계속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일, “반체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1987년 9월 25일),” 김정일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28.

테러행위와 해경 863호 격침(1974. 6. 2)과 땅굴 구축(1974. 11. 15) 등 무력도발을 병행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었다.

1980년대에 북한은 미·소 신냉전 대두와 중국의 독립자주의 교 추구, 남한의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체제안정, 북한의 김정일 후계체제 공식화 등 국제혁명역량 및 북한혁명역량의 강화와 남한혁명역량의 약화 상황 가운데 '남조선혁명' 전략과 테러 및 군사도발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북한체제의 공고화와 한반도 공산화통일을 함께 추진하는 양상을 띠었다. 그리고 북한은 버마 랭구운 테러사건이후 국제혁명역량이 약화되고 합영법 추진 등 경제발전과 서방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안정적인 남북관계의 과시가 요구되자, 남북대화(1984~1985)에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80년대 후반 탈냉전시대에 들어와서는 88서울올림픽에 대항해서 개최한 1989년 평양축전으로 인한 외화고갈, 1990년 한·소수교, 1991년 소련붕괴, 1992년 한·중수교로 인한 북방삼각관계 동요, 1990년 서독의 동독흡수통일과 1991년 걸프전에서 미국의 엄청난 화력 경험 등등으로 말미암아 북한은 경제난과 안보난을 겪는 가운데 체제위기를 느끼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1990. 9~1992. 9)에 나와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체결을 통해, 남한주도의 흡수통일과 미국의 대북공격에 대한 억제장치를 만들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다. 협상 능력 : 최고지도자 개입과 통일전선부 주도

김일성시대 북한은 남북대화 운영체계를 통일전선부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추진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최고지도자의 정책적 지침을 받아 대남전략을 총괄하는 대남사업 비서와 당의 대남관계 업무를 총괄하는 통일전선부가 남북대화에 임하는 방침을 정하고, 그 전위조직인 조국평화통일촉진위원회(조평통)⁷³을 통하여 회담대표단에게 일사불란한 하향식 명령체제로 전달하였다.⁷⁴

이 시기 남북대화에 참석한 북한 대표나 수행원들은 몇 가지 특징적 행동양식을 보여주었다. 북한의 협상대표들은 대부분 통전부 소속이나, 조평통 소속 간부 직함을 사용하였다. 또한 당성이 강한 자, 정치투쟁에 능한 자, 김일성 부자의 신임이 두터운 자, 해당 협상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정치적 수완이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선발되었다.⁷⁵ 그리고 북한 대표는 회담진행 중에 CCTV나 VTR로 관찰되고, 세세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지시를 받았다. 따라서 북측 대표는 발언 시 개인 의사를 한마디도 첨가할 수 없었으며, 다수의 메모 쪽에 근거하여 발언하였다. 또한 동석한 감시요원(통상 명목상 2인자)에 의해서도 철저히 통제되었다.⁷⁶

⁷³ 1961년 5월 13일 김일성 발기로 만들어진 조직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 대남 접촉을 위해 만든 외곽단체들을 총괄하여 남북대화를 주도하는 기구이다.

⁷⁴ 양영식, 북한의 협상전술: 남북대화 20년사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수원, 1990), pp. 27~29, 33.

⁷⁵ 이기택, 한반도의 정치와 군사: 이론과 실제 (서울: 가남사, 1984), p. 103.

⁷⁶ 1972년 남북대화시 박성철 제2부수상과 유장식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관계,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시 연형묵 총리와 림춘길(동옥) 수행원(통일전선부 부부장) 관계, 1998년 쌀회담시 전금철(진) 수석대표와 권민 수행원 관계 등에서 나타났다. 송종환, 북한 협상행태의 의해, 142~149; 1998년 쌀회담 남측

북한은 대남 협상과정에서 남한이 더 이상 양보할 가능성이 없고, 국가이익에 부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최고지도자의 개입 하에 전격적으로 합의에 응하였다. 예컨대 1972년 5월 이후 락 중앙정보부장의 방북 시 7·4남북공동성명의 기초가 가서명될 때, 김일성 수상의 적극적 관심과 개입이 있었다. 또한 1972년 11월 평양서 열린 남북조절위원회 2차 공동위원장회의에서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할 때, 김일성 수상의 지시로 인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북측 대표들이 밝힌 바 있다.⁷⁷

3. 협상행태 : 전사적 협상

가. 협상목표⁷⁸: 정상화협상(현상)과 재분배협상(본질)

냉전기 북한은 국가목적(national goals)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⁷⁹ 하나는 당면목적으로서 사회주의 체제유지이고, 다른 하

대표 인터뷰

⁷⁷ 이동복 증언. 송중환, 북한 협상행태의 의해, pp. 225~226.

⁷⁸ 이 글에서 목표는 '정부가 정책결정자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타국의 행동을 변경·구속 혹은 지속시킴으로써 실현코자 하는 장래의 사태와 장래의 상황에 관한 이미지'를 뜻하며, 북한의 국가 목적과 외교 목표로 구분하였다. 내재된 가치의 비중과 성취의 시간적 우선순위 그리고 타국에 강요하는 요구의 강도에 따라 ① 기본목적(핵심적 가치와 이익: core value and interest), ② 중기목표(middle-range objectives), ③ 장기목적(long-range goals)로도 분류할 수 있다. K. J. Holsti, *International Politics: A Framework for Analysi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72), pp. 131, 189.

⁷⁹ 「조선로동당 규약(1980. 10. 13 개정)」,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

나는 최종목적으로서 한반도 공산화통일 및 전 세계 공산화이다. 전자는 최소 목적이 되고, 후자는 최대 목적이 된다.

이 시기 북한이 추진한 대남협상목표 또한 국가목적과 연관시켜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최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남한에서 공산화혁명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최소목적을 지키기 위해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때 이를 벗어나는 것이다. 전자는 공세적 회담으로, 후자는 방어적 회담으로 명명할 수 있겠다. 공세적 회담사례로는 1970년대의 적십자회담, 남북조절위 회의, 평양 세계탁구선수권 구성 체육회담, 1980년대 초반 경제회담, 국회회담 준비접촉 등을 들 수 있다. 방어적 회담사례로는 1980년대 중반 LA올림픽 단일팀 구성 체육회담, 서울올림픽 체육회담, 1980년대 후반 남북고위급회담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은 대체로 1980년대 중반까지는 공세적 공산혁명전략의 달성을 위해, 1980년대 후반이후부터 1994년 김일성 사망 시까지는 방어적 체제생존전략의 달성을 위해 남북회담을 활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일성시대 북한은 공산화통일에 보다 비중을 두고, 한반도 대내외정세에 따라 대남협상목표를 신축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북한이 대남관계에서 요구하는 협상은 외양상으로는 ‘정상화협상’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공산화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재분배협상’ 목표를 추구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통일부, 2004 북한개요 (서울: 통일부, 2004), pp. 504~505.

나. 협상전략 : 경쟁전략과 무행동전략 그리고 공세적 위기관리 전략

냉전기 북한은 ‘조국통일(전 한반도의 공산화)’을 달성하기 위한 대남정책으로서 ‘무력해방’, ‘남조선혁명’, ‘남북대화’ 등의 방식을 국내외 상황(3대 혁명역량의 편성)에 따라 배합하여 사용하였다.⁸⁰ 선전적·명목적 차원의 평화공세(남북대화 제의 및 연방제 통일방안 제시) 정책과 전복적·실제적 차원의 무력도발 및 통일 전선전술(지하당 구축 등)⁸¹ 정책을 병행·추진하는 이중전략을 북한은 지속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 이 시기 북한은 대남협상에서 경쟁전략을 자주 구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은 모든 대남협상과정에서 협상초기 과도한 요구를 설정하여 이의 수용을 강력히 주장하거나, 의제를 추

⁸⁰ 북한은 1950년대까지 통일방안으로서 남북총선안을 명목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혁명적 민주기치론에 입각한 무력해방 정책을 실제적으로 추진하였다. 1960년대에는 과도적 연방제안을 명목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지역혁명론(남조선혁명론)에 입각한 무력도발(1. 21 사태, 울진·삼척사태 등) 및 통일전선 차원(통혁당 조직 등)의 전복정책을 실제적으로 추진하였다. 1970년대에는 남북대화를 명목적으로 진행시키는 한편, 남조선혁명 성격을 ‘민족해방인민 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반미 자주화·반파쇼 민주화투쟁을 실제적으로 선동·추진하였다. 1980년대에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로서 제시하였으나, 동시에 무력도발(버마 랑구온 테러사건, KAL 기 폭파사건 등)을 통한 남한사회의 불안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북한은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수정적 연방제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민족대단결’ 논리를 강조함으로써 ‘전민족적 통일전선’ 구축 전략을 추진하였다. 허문영, “북한의 통일정책,” 북한외교정책 (서울: 서울프레스, 1996).

⁸¹ 전쟁 전의 「민주주의민족전선」의 결성, 「남북한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의 개최, 1954년 10월 이후의 「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 제의, 1963년 4월 이후의 제정당·사회단체·각계인사들의 「정치협상회의」 제의, 1963년 12월 이후의 「남북대표자회의」 제의, 1973년 6월 이후의 「대민족회의」 제의, 1979년 1월 이후의 「전민족회의」 제의, 1981년 12월 이후의 「민족통일촉진대회」 제의, 1992년 8월 이후의 「범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제의 등.

가· 변경하곤 하였다. 한국전쟁 휴전협상 당시 합의될 결론을 의제에 삽입하여 제안하여 의제설정에서부터 높은 요구를 주장한 것이나, 1990년대 북핵협상 당시 핵문제라는 의제와 동떨어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지지 요구 등 과도한 요구를 주장한 것은 상대방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경쟁전략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경쟁전략은 협상과정에서 전사(戰士)적 모습으로 나타났다.⁸² 북한은 군사작전식 협상을 하며 협상에서 힘의 논리를 존중하며, 좀처럼 타협과 양보를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대표들은 회담 개막기에는 온유한 태도를 보이다가도, 본격적 회담에 들어서면 ‘타협하러 나온 사람’이 아닌 ‘싸우러 나온 사람’의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회담의 공동이익 추구나 호혜적 반대급부보다 일방적 이익과 양보를 주장하고, 기대하였던 목표 성취가 어렵게 되면 회담 상대방에 대해 거칠고 무자비하게 대하는 조야성(toughness)을 보였다.⁸³

따라서 북한은 회담 전 과정을 통해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방적인 자기입장의 관철을 위한 경쟁전략을 지속하였으며, 자기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담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키는 무행동전략을 구사하였다.

또한 다양한 위기관리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하는 협상전략은 어느 한 가지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⁸⁴ 과거 북한의 핵협상과정

⁸² 송중환, 북한 협상행태의 이해, pp. 130~141. 북한은 각종 회담에서 의제를 협의하는 단계에서부터 의제전투(battle of the agenda)로 시작하여, 회담 중간단계에는 자기 측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군사작전식으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며, 대화를 중단시키려 할 경우에는 전사적 협상행태를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⁸³ 문광진, “북한식 협상행태의 변화 전망과 대북협상원칙,” 국방논집, 제26호 (1994), pp. 184~185.

⁸⁴ 황진환은 북한의 협상방식을 흥정모드(bargaining mode), 거부모드(blocking

을 반성해 볼 때, 북한은 ‘대화에는 대화로, 전쟁에는 전쟁으로’라는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맞대응전략(TFT) 또는 방어와 공세 전략을 함께 구사하는 이중전략적 자세를 보여준 바 있다. 이는 북한이 협상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협상구조의 변화를 두 가지 방향으로 추구함을 시사한다. 하나는 협상조건을 북한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핵동결해제 가능성 언급과 같이 의제설정 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그 실례다. 다른 하나는 주어진 조건 하에 효과적인 협상기술을 선택하려는 전략이다. 대화와 전쟁 가능성을 함께 강조하는 것과 벼랑끝전술 구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1990년대 들어와 북한은 대남정책의 비중을 남조선혁명을 위한 ‘남한체제 전복’ 정책으로부터 북한체제의 유지를 위한 ‘남한체제 약화’ 정책으로 점차 이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공세적 정책 또는 패권적 정책’으로부터 ‘공존적 정책 또는 대등적 정책’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는 북한지도부가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에 봉착하여 대남 인식에 있어서도 ‘공격적 입장(무력공격의 대상)’에서 점차 ‘경쟁적 입장(체제경쟁의 상대)’으로 그리고 1990년대에는 ‘방어적 입장(흡수통일의 주체)’으로 변화를 보인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mode), 급진전모드(breakthrough mode)로 구분하고, 각 모드별로 특징적 협상전략과 전술을 구사한 것으로 평가한다. 황진환, “북한의 대남·대미 협상행태 분석: 핵 협상을 중심으로,” 한반도군비통제 (국방부, 1995), pp. 95~142. ; 양무진 또한 북한의 대남협상전략 또한 합의를 회피하는 거부형, 완만한 합의를 추구하는 거래형, 빠른 합의를 추구하는 급진전형으로 유형화한다. 양무진, “북한의 대남협상전략 유형,” pp. 197~207.

다. 협상전술 : 공격적 흥정전술과 경쟁적 논쟁전술/주도권·속도조절 전술

1970년대 남북대화에서 1990년대 남북고위급회담에 이르기까지 대북협상에 참석하였던 이동복은 북한의 협상전술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⁸⁵ ① 원칙적 합의와 일방적 해석을 통한 합의이행 제동, ② 일방적 전제조건 제시와 엉뚱한 문제제기를 통한 회담 속도 조절, ③ 일괄합의·동시실천 주장을 통한 회담 주도권 장악, ④ 새로운 문제 제기를 통한 합의이행 제동, ⑤ 협상기구 개편 또는 새로운 협상기구 합의 요구를 통한 기존 기구 무력화 등. 또한 1970년대 남북 대화에 실무요원으로 참석했던 송중환은 북한의 협상전술을 다음과 같이 특징화한다. ① 선제방어 전술(preemptive tactics), ② 협상속도조절 전술(control of pace), ③ 원칙합의 전술, ④ 이미지투영 전술(tactic of image projection), ⑤ 전략숨기기 전술(tactic of strategy concealment), ⑥ 강탈적 요구 전술(tactic of extortionary demand), ⑦ ‘시브린’예언서 전술(Sybbline books tactic), ⑧ 책임전가 전술, ⑨ 막후협상 전술, ⑩ 언론통제 전술, ⑪ 내부감시 및 견제 전술 등.

2000년대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일컬어지는 임동원 또한 냉전기 북한이 진행한 남북회담은 남조선혁명의 일환으로 전개한 ‘의사협상’이며, 협상전술 또한 부정적 성향을 띤 것으로 평가한다.⁸⁶

⁸⁵ 이동복,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협상전략: 과거 대북회담을 기초로,” p. 209.

⁸⁶ ① 비정치적 회담에서 의제 이외의 정치·군사 문제제기 전술, ② 원칙논의에만 집착하는 전술, ③ 본질적인 문제는 제외하고 형식과 절차만 합의하는 전술, ④ 자존심 건드리기 전술, ⑤ 생트집 전술, ⑥ 책임전가 전술, ⑦ 지연전술, ⑧ 지치게 만드는 김빠기 전술, ⑨ 비공식회담 기피 전술.

미국의 북한협상전문가인 척 다운스(Chuck Downs)는 상대방의 무장해제, 남한의 공산주의화, 실패한 경제법칙에 대한 집착 등을 북한식 협상방식의 기초로 보고,⁸⁷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독특한 협상전술⁸⁸과 일반적 협상전술⁸⁹을 구분·기술하였다. 스나이더(Scott Snyder) 또한 북한의 협상전술을 특징화한 바 있다.⁹⁰

이상의 선행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김일성시대 북한의 협상전술은 크게 2가지로 특징화할 수 있다. 하나는 주도권장악 전술이고, 다른 하나는 속도조절 전술이다.

(1) 주도권장악 전술

북한은 남북회담 주도권장악 전술로 다음과 같은 기법들을 구사하였다.

⁸⁷ Chuk Downs, 『북한의 협상전략』, p. 404.

⁸⁸ 위의 책, pp. 37~38. ① 대화의 전제조건 내세우기, ② 협상 상대의 관심을 돌릴 만한 사건 일으키기, ③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려 궁지에 몰아넣기, ④ 현안 의제를 토의할 때 과거 결론을 들고 나오기, ⑤ 자신의 목표를 먼저 협상해야 한다고 우기기, ⑥ 양보를 유약함의 신호로 인식하기, ⑦ 가공의 이슈를 끌어들이어 협상 칩(bargaining chip)으로 활용하기, ⑧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다고 적반하장으로 뒤집어씌우기, ⑨ 합의 이행에 대해 거부권 행사하기, ⑩ 이미 합의된 사안에 대해 재협상 요구하기.

⁸⁹ ① 위협과 모욕, ② 비굴한 아첨과 아부, ③ 방해와 지연, ④ 보다 신속한 행동 요구, ⑤ 자신을 승자의 온갖 특권을 갖춘 강자로 비화하기, ⑥ 자신을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희생양으로 묘사하기, ⑦ 상대방의 목표, 주장, 또는 비난이 노출되기를 기다리기, ⑧ 자신이 먼저 요구 주장 또는 비난을 해야 한다고 우기기, ⑨ 상대방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기, ⑩ 협상자의 권위에 본질적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등.

⁹⁰ Scott Snyder, 『벼랑끝 협상』, pp. 76~96. ① 벼랑끝전술(일방적인 양보 요구, 허세와 위협, 협상 마감시한 설정, 협상철회로 위협), ② 적의 단점 이용전술(협상 실패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 협상에서 겪는 곤경 과시, 체면 세우기), ③ 상호주의, 동시성, 형식 대 내용을 강조하는 전술.

① 선 제의(先提議)와 유리한 의제 고집

북한은 준비접촉·예비회담·본회담 등 각 회담 개막단계에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강한 수사적(rhetoric) 연설과 우호·친절의 태도를 취하면서, 일시·장소·의제 등 회담의 절차 및 내용문제에 대한 북한 안을 먼저 제의하여 회담을 주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⁹¹ 또한 북한이 제기한 회담 의제와 표기 순서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회담에 임하는 그들의 목표와 의도인 동시에 토의 순서를 나타내기 때문에 최초로 제시한 안을 철회하거나 수정하지 않았다.⁹²

② 비공개·비공식 회담 타결, 공개회담 선전

북한은 1970년대 남북 정치회담과 1990년대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과정에서 쌍방 대표가 비밀 접촉 또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북한의 의도대로 의견 조율과 합의를 보도록 하고, 추후 공개회의에서 합의사항을 공개하도록 유도하였다.

③ 전제조건 제시

북한은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밀어붙여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고자 할 때, 전제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회담을 주도하려 하였다. 예컨대 1991년 걸프만 전쟁으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연기된 후, 남한 통일원 대변인이 합의일자 개최를 촉구하자, 조평통 부위원장 명의로 북한은 불가침선언 채택,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허용 등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성명을 발표·대응하였다.

⁹¹ 송종환, 북한 협상형태의 이해, p. 162.

⁹² 위의 책, p. 180.

④ 회담장 퇴장과 회담 연기

북한은 협상도중 자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자기측 기본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이 나올 경우 상황악화 초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한편, 회담장을 나가버리거나 회담을 일방적으로 거부 또는 연기하였다. 1990년 10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에서 강영훈 수석대표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 포기를 주장하자, 북측 연형묵 단장이 소리를 지르며 회담장을 나간 바 있고, 그 책임을 남한에게 따진 바 있다.⁹³ 그리고 북한은 연기된 회담을 재개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⑤ 상대방 회담대표 거부 및 인신공격

북한은 자신들의 입장에 맞지 않는 대표에 대해서는 거부하거나 인신공격과 모멸적 태도를 왕왕 취했다.

(2) 회담속도조절 전술

북한은 또한 회담속도 조절 전술로서는 다음과 같은 기법들을 구사하였다.

① 일반원칙(agreements in principle) 합의유도

일반원칙 합의유도 전술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협상의지가 없음을 비난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면 추후 수용할 수 없는 세부 사항까지 요구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되는 일석이조의 전술이라 할 수 있다.⁹⁴ 예컨대 북한은 냉전기 남북대화

⁹³ 강영훈, “아니면 아니요 해야지,” 중앙일보, 1999년 6월 2일.

⁹⁴ 송종환, 북한 협상행태의 이해, p. 183.

과정(1단계)에서 일반원칙들이 포함된 합의서를 남한과 합의한 후, 추후 협상과정(2단계)에서 이 원칙들을 북한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수락토록 요구하였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3단계) 그 책임이 남한측에 있다고 비난하면서 회담 중단을 선언하였던 것이다.

② 양보와 절충

양보와 절충 전술은 회담과정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탐색한 후, 합의도출을 위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구사하는 유화전술이다.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는 이와 같은 북한의 전술에 기초한 것이다. 특히 기본합의서의 경우, 남한의 정치·경제 중심의 ‘교류협력 및 신뢰구축’ 논리에 군사 중심의 ‘불가침선언’ 합의논리로 맞대응하던 북한이 남측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타결되었다.

③ 일괄합의·동시실천과 일괄타결

일괄합의·동시실천과 일괄타결 주장은 쌍방간 합의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나, 이행을 협의하는 단계에 이르면 오히려 합의사항의 이행과 실천을 회피하는 데 활용되었다.

④ 지연

지연 전술은 실질문제를 토의하는 중간단계에 이르러 상대방의 양보 가능성 또는 최종안을 알아내기 위해 회담속도를 조절하는 가운데 상대방을 지치게 하는 전술이다. 북한은 합의사항 이행문제를 협의하는 단계에 이르면 일방적 요구와 제의를 내놓고

이를 남한 측이 수용할 것을 주장하다가, 응하지 않으면 차기 회담 개최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 결과, 회담 간격이 길어지게 되었다. 1970년대 초반의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이 1년 동안 25차례 개최된 사실이나, 1980년대 후반의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이 1년 반 동안 7차례 개최된 경우가 그 실례이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일반적 협상전술의 유형과 비교해 볼 때, 김일성시대 북한은 비합리적 전술뿐만 아니라, 숨은 협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들의 입장을 계속 관철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공격적 흥정전술과 경쟁적 논쟁전술을 사안에 따라 구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북한은 7·4 남북공동선언의 3대 원칙에 대한 그들의 해석을 반복주장하면서,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군사문제의 우선적 해결 등을 강조하는 등 경쟁적 논쟁전술을 통해 남한측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자, 회담대표 위상을 격하시키는 등 비합리적 전술도 구사하였다.

라. 협상성격 : 의사·(북한우위)불균형·중요(정치) 협상

김일성시대 북한의 대남협상은 대체로 숨은 목적 추구나 부수효과를 노린 의사협상 성격을 보여주었다. 예컨대 남조선혁명 여건조성 또는 무력남침기도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거나(적십자회담, 남북조절위 회의 등 개최와 땅굴공사 병행), 통일전선전술차원에서 정치협상회의 방식의 회담을 겨냥하거나(국회회담 예비접촉 등), 협상 상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거나(1980년대 적십자회담 및 경제회담, 국회회담 등), 체제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체육회담 등) 등으로 회담을 진행하였

다.⁹⁵

협상자 지위와 관련해서, 북한은 남북한 사이의 균형협상보다는 북한우위의 불균형협상을 추구하였다.⁹⁶ 북한은 남한에 대해 협상상대로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협상에 의한 합의도출을 어렵게 하였다. 또한 그들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합의사항이라도 이를 파기하거나 이행하기를 거부하였다. 북한은 협상자간의 관계를 불균형적으로 유도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양태를 보여주었다.

협상중요도와 관련, 북한은 의사협상과 불균형협상을 운용하기 위해 협상의제의 정치적 중요성을 제고하는 중요협상을 추구하였다. 북한은 대남협상의 진행과 중단을 자기중심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합의도출이 쉽지 않은 정치중심의 중요협상을 일반협상보다 선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협상스타일⁹⁷: 전사적 협상

송중환은 북한 협상스타일을 크게 4가지로 특징화하였다.⁹⁸

⁹⁵ 홍양호, “탈냉전시대 북한의 협상행태에 관한 연구,” p. 108.

⁹⁶ 김도태, “탈냉전기 북한의 대남협상행태: 지속성과 변화,”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p. 8.

⁹⁷ 북한의 협상행태와 스타일에 대하여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특징화하고 있다. 문광건은 북한식 협상을 ‘혁명론에 입각한 협상관’과 ‘대남 적화통일정책의 수행도구’로 규정하고,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힘의 숭배, ② 현실주의, ③ 국가 총력전으로서의 협상, ④ 군사작전식 협상, ⑤ 조야성(toughness), ⑥ 일방적인 협상이의 추구, ⑦ 강력한 중앙통제; 스나이더는 북한의 협상태도를 초기 강경한 발언, 중기 유연한 태도, 최종 강경한 태도 견지를 특징화하고, 이 같은 패턴은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것으로 주장한다. 스나이더, *벼랑끝 협상*, pp. 3~7.

⁹⁸ 송중환은 원래 북한협상행태의 특징으로 규정하였으나, 본 고에서는 이를 협상스타일로 간주한다. 송중환, *북한 협상행태의 이해*, pp. 127~159.

첫째, 전사적 협상행태이다. 북측 대표단은 북측 입장을 제안 → 남측 대표단에게 북측 제안 수락 요구 → 북측 제안을 수락하지 않는 남측 대표단을 비난 등의 순서로서 군사작전식 협상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북한은 ‘혁명의 원칙’과 ‘근본적 이익’⁹⁹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타협과 양보를 기피하는 협상패턴을 보여 주었다.

둘째, 강력한 중앙통제이다.

셋째, 전격적 태도 전환이다. 북한은 상대방의 입장이 물러설 여지가 없이 단호하다고 판단하면 합의를 하였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이해득실을 계산하여 합의를 할 경우 더 이익이 되면 전격적으로 그들의 최초 제안이나 주장에서 물러서는 것처럼 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가 대표적 예이다.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먼저 최고지도자가 개입하여 합의의 신호를 보내며, 이를 받아 쌍방실무대표들은 새벽 3~4시까지 용어조정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다.¹⁰⁰

넷째, 협상과 선전의 병행이다.¹⁰¹ 김일성시대 북한은 언론을 활용하여 유리한 협상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북한측 입장을 강경하게 대변케 하거나, 회담대표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여 회담 상대방에게 북한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는 동시에 북한주민들에게는 ‘조국통일’을 위해 주도적 입장과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주입시켰다. 1970년대 남북조절위 시절 북

⁹⁹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3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361~362. “사회주의 국가들은…제국주의 국가들과 원칙에 맞지 않는 타협을 하지 않아야 한다.…원칙문제에 대하여 제국주의자들과 흥정을 하지 않아야 하며, 혁명의 근본적 이익을 그들에게 팔지 않아야 한다.”

¹⁰⁰ 송중환, 북한 협상행태의 이해, pp. 149~150.

¹⁰¹ 위의 책, pp. 152~159.

한은 회담 초기 신중하게 접근하다가, 남북공동성명 이행을 논의하게 되자 비공개회의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하면서 남한을 공격함으로써 선전을 통해 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한 바 있다. 또한 1990년대 남북고위급회담 시에는 회담초기 사설을 통해 남한의 '대결정책'과 대화태도를 신랄히 비난하였고, 기본합의서가 타결되자 철저한 이행을 강조한 바 있다.

IV

6·15 공동선언 이후 대남협상 행태 : 방어적 진의(眞意)협상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대남협상행태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평가가 있다. 하나는 불변론이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협상 전략·전술은 변함이 없다는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변화론이다. 냉전과 탈냉전시기로 구분하여 근본적 변화는 아니나,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북한의 협상 전략·전술이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시각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행태에는 과연 어떤 변화와 지속이 있는가?

1. 남북회담 개요 : 主 실리추구, 從 통일전선 사업 모색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5년 동안 남북관계는 여러 부문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¹⁰² 정치적 부문에서는 남북대화가 다양한 차원에서 매우 자주 이뤄져 정상회담이후 2005년 10월 말 현재까지 총 159회 개최되었다. 경제적 부문에서는 교역량이 2001년 4억 달러선에서 6.4억 달러(2002), 7.2억 달러(2003), 6.9억 달러(2004)를 거쳐 2005년 10월 현재 8.8억 달러(10억 달러: 연말 추정)로 중국에 이어 북한의 두 번째 교역상대국으로 발전했다.¹⁰³

¹⁰² 정세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5년: 회고와 전망,” 6·15 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5. 6. 9), pp. 5~15.

¹⁰³ 통일부, 『평화번영정책 추진현황』 (2005. 11. 15).

남북한 인적 왕래도 2000년 7,280명에서 2001년 8,742명, 2002년 13,877명, 2003년 16,303명, 2004년 26,534명, 2005년 10월 현재 71,967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989년 이후 누계는 157,367명(남 → 북: 152,374명, 북 → 남: 4,993명)에 달한다. 그리고 민족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이산가족 상봉사업도 정상회담이후 2005년 11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실시되는 동안 총 12,003여명이 2박 3일 동안 이산의 한을 달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북간에 철도·도로가 연결된 것은 분단 60년 만에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게 되었을 뿐 아니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군사적 긴장완화의 초석을 놓을 수 있게 되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남북관계에는 역경과 난관도 많이 나타났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2001년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과 관련해 미국 대 러시아·중국의 대결 구도 가운데 한국정부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부시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과 2002년 악의 축 발언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휘청거렸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북한의 이중적 대남전략과 더불어 남한의 대북 에너지 및 사회간접자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면서 남북한 상호간에 불만이 노정되면서 대화가 중단되기도 했다. 그리고 남한사회 또한 대북정책 추진방식과 통일방안 그리고 한·미관계에 대한 입장 차이를 중심으로 국론분열의 남남갈등이 극심하게 나타나 남북관계의 진전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였다.¹⁰⁴ 북한 또한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 남북대화를 중단하고, 체제정비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¹⁰⁴ 허문영, “광복60주년, 남북관계 어디까지 왔는가?” (통일동우회 세미나 발표문, 2005년 9월 30일), pp. 28~29.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난 5년 동안 남북은 159회, 연평균 30회 이상의 대화를 진행했다. 남북대화가 가장 많았던 2003년에는 총 106일에 걸쳐 38회의 대화가 있었다. 이 기간 동안 남북한은 장관급회담을 중심으로 경제, 군사, 체육, 적십자 등 여러 분야의 회담을 개최하였다.

한편 북한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공동선언 1항(자주)과 4항(민족경제 균형발전, 교류협력 활성화)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난을 해소하고 정통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2001년 1월에 출범한 부시 행정부가 강경한 대북정책을 표출하는 가운데 9·11 테러사건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외치면서, 북한을 ‘악의 축’ 일원으로 규정하고 제거할 것임을 천명하자, 안보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였다. 2002년 12월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이후 북한은 남북대화에 적극 나오는 동시에 한동안 뒷전에 두었던 통일전선사업을 다시 적극 추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알(경제적 실리)먹고, 썩(안보난 해소)먹고, 등지 털어(조국통일을 위한 대남 통전사업 추진) 불때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하겠다.¹⁰⁵ 달리 말하면, ‘실리민족공조’로 경제적 실리를, ‘반미민족공조’로 안보난 해소를, ‘통일민족공조’로 북한중심의 ‘조국통일’을 추구해 오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¹⁰⁵ 허문영, “6자회담과 남북한관계 전망” (성균관대학교 국가경영전략연구소 2005년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 2005. 11. 24), pp. 63~71.

<표 IV-1> 남북 당국자회담 횟수

구분		합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159	27	8	33	38	25	28
정상 회담 관련 (13)	남북정상회담	1	1					
	남북특사접촉	4	4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5	5					
	통신 보도 실무접촉	2	2					
	의전 경호 실무접촉	1	1					
장관급 회담 관련 (18)	장관급회담	16	4	2	2	4	2	2
	실무접촉	1			1			
	차관급회담	1						1
	6·15행사 남북당국대표단 파견실무협의							3
8·15 남북당국공동행사 실무접촉							2	
군사 분야 (33)	남북국방장관회담	1	1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	10	3	2	3	2		
	남북군사실무접촉	10			6	4		
	군사통신실무자접촉	1			1			
	동해선통신선연결실무접촉	2				2		
	장성급 군사회담	2					2	
	장성급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	5					3	2
장성급 군사통신실무접촉	2					2		
경제 분야 (58)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11	1		2	4	2	2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	4	2					2
	금강산관광활성화당국회담	2		1	1			
	철도 도로연결실무협의회	4			1	2	1	
	남북철도 도로연결실무접촉	11			3	5	2	1
	임남담 공동조사실무접촉	1			1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2			1		1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	1			1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3		1	1		1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	1		1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4			2	1	1	
	원산지 확인실무협의회	1				1		
	청산결제실무협의	3				1	2	
	청산결제거래위한 은행접촉	2					2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4			1	3		
	경제협력제도실무접촉	1					1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1						1	
남북농업협력위원회	1						1	
남북공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실무협의	1						1	
인도 분야 (21)	남북적십자회담	6	2	1	1	1		1
	남북적십자실무접촉	6			2	3	1	
	이산가족 화상상봉 적십자실무접촉	3						3

구분		합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159	27	8	33	38	25	28
체육 분야 (6)	면회소건설추진단회의	3				3		
	용천재난구호회담	1					1	
	조류인플루엔자 실무접촉	1						1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사업 실무접촉	1						1
	아시아경기대회참가실무접촉	2			2			
	U대회참가실무접촉	1				1		
	아테네올림픽공동입장실무접촉	1					1	
	8·15 통일축구경기 실무접촉	2						2
	남북특사회담(4)	3	1		1	1		1

가. 장관급회담

남북장관급회담은 6·15 공동선언 제5항(“남북은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에 따라 2000년 7월부터 개최되어 2005년 10월 말 현재까지 총 16차례 진행되었다. 장관급회담은 남북간 제반 현안문제들을 협의, 해결하는 중심적 협의체이다. 이는 분야별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을 총괄·조정 지원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남북한은 장관급회담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 추진,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이산가족 상봉,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사업실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다양한 현안 들을 합의 해결하였다.

그러나 3차례에 걸친 중단의 곡절도 있었다. 제5차·7차·15차 장관급회담이 지연 개최되었다. 2001년 1월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을 이유로 북한은 2001년 3월 예정되어있던 제5차 회담을 거부하였고, 6개월 뒤인 9월에 복귀하였다. 또한 북한은 9·11 테러직후에 열린 제6차 회담(2001. 10. 20, 금강산)에서 남한의 비상경제 강화조치와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해

항의하였다. 그 결과, 향후 회담일정도 못 잡고 장관급회담은 9개월 동안 장기 중단되었다. 그리고 2004년 7월 김일성주석 10주기 조문에 대해 남한 당국이 방북을 불허하는 동시에 탈북자의 남한 집단입국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미국에서도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채택하자 북한은 2004년 8월 3~6일로 예정돼 있던 15차 장관급회담을 무산시켰다. 그리고 2005년 6월 15차 장관급회담이 재개되기까지 1년 이상 회담이 중단되었다.

(1) 경과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2000. 7. 29~31, 서울 신라호텔)은 2000년 7월 19일 한국 이한동 국무총리의 제의(7. 27~29)에 대해 21일 북한 홍성남 내각총리의 수락과 개최일자 수정제의(7. 29~31)에 따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남측 수석대표 박재규 통일부장은 기초연설을 통해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협의과제」¹⁰⁶와 「우선적 실천과제」¹⁰⁷를 제시하였고, 북측 수석대표 전금진 내각 책임참사는 기본발언을 통해 「당면조치」¹⁰⁸를 제의하였다.¹⁰⁹ 이후 남과 북은 전체회의 3회, 수석대표접촉, 대표접촉, 4차례의 실무접촉을 통해 6개 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북한은 기본

¹⁰⁶ ①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조치의 구체화, ② 쌍방 통일방안의 접점 확대방안 연구, ③ 이산가족 생사확인·서신교환·면회소 설치, ④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⑤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방문 조속실현.

¹⁰⁷ ① 8·15를 기해 남북연락사무소 운영정상화, ② 8·15 민족화해주간 선포, ③ 남북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운영, ④ 경의선 연결 연내 착공, ⑤ 국제경기 남북단일팀 구성·참가, ⑥ 휴전선일대 공동방역 실시, ⑦ 정치군사·경제·사회 등 3개 위원회 구성·운영.

¹⁰⁸ ① 8·15 계기 판문점 연락사무소 기능정상화, ② 당국·정당·단체가 참가하는 8·15 통일행사 개최, ③ 재일총련의 고향 방문 실시.

¹⁰⁹ 통일부, 남북대화, 제67호 (서울: 통일부, 2001), pp. 41~50.

발언을 통해 밝힌 당면조치들을 공동보도문에 포함시키는 성과를 이뤘다.

제2차 회담(8. 29~9. 2, 평양 고려호텔과 인민문화궁전)은 방북 경로¹¹⁰를 놓고 사전조정이 있었으나, 합의 예정된 날짜에 재개되었고, 합의도출에 어려움을 겪어 예정보다 2일 연장 진행되었다. 남북한은 전체회의 전날(8. 29) 수석대표 접촉을 갖고, 상호 관심 사항인 북측의 ‘합의가능 사항’¹¹¹과 남측의 ‘중점 제안사항’¹¹²에 대해 사전협의하였다.¹¹³ 남북한은 2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남부경협 제도적 장치 마련,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백두산-한라산 관광단 교환 등에 합의 또는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와 분야별 공동위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북측의 완강한 반대로 난항을 겪었다. 이에 박재규 남측 수석대표는 8월 31일 밤에 특별열차를 타고 8시간 걸려 자강도에 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방문하여 군사당국자회담 개최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였다.¹¹⁴ 남북한은 전체회의의 3차례, 3차례의 수석대표 단독접촉 및 수차례의 실무접촉을 통해 7개 항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하였다. 북한은 수석대표 접

¹¹⁰ 북한은 우리 측이 판문점을 경유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1차 회담과 같이 베이징 경우 방북을 권유하였으며, 이에 남한은 서해 남북 직항로 방북으로 수정해서 밝혔다.

¹¹¹ 북한은 남한의 「을지연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① 이산가족 방문단 추가 교환, ② 경협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③ 경의선 연결 실무협의, ④ 백두산-한라산 관광단 교환 등을 제시하였다.

¹¹² 남한은 「을지연습」에 대해 연례적 방어훈련으로 설명하고, 남북군사당국자간 협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임과 ① 분야별 위원회 구성·운영, ② 경협의 제도적 장치 마련, ③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및 군사직통전화 설치, ④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⑤ 임진강 수해방지 및 개발 공동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¹¹³ 통일부, 남북대화 ,제67호, pp. 52~53.

¹¹⁴ 박재규, “평화통일의 길, 60년만의 희망,” 중앙일보 , 2005년 8월 25일.

측 시 밝힌 ‘합의가능 사항’ 4가지 모두를 공동보도문에 넣었다. 남한 또한 김정일 위원장과의 담판을 통해 북한이 그 동안 꺼리던 군사당국자회담 개최문제 협의를 공동보도문에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¹¹⁵ 대신 북한은 식량차관 제공문제 검토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고, 또한 남측의 제안인 분야별 위원회 구성·운영 문제를 합의사항에서 제외시켰다.

제3차 회담(9. 27~30, 제주 롯데호텔)은 제2차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진행되었다. 이 때도 북한은 남측 제안인 판문점 경유 이동경로를 거절하고, 베이징 노선을 이용하였다. 남북 상방은 제1차 전체회의에 앞서 2차례 수석대표접촉을 통해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제1차 전체회의(9. 28)에서 남한은 당면 현안문제와 협력과제¹¹⁶를, 북한은 현안사업¹¹⁷을 제시하였다. 제2차 전체회의(9. 30)에서 남한은 제1차 회의 제안 사항 중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과 서신교환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식량지원에 대한 분배투명성 보장문제를 다시 강조하였고, 이에 북한은 이산가족문제에 대해 시범단계를 거쳐 경험을 축적하면서 속도를 낼 것과, 식량분배 투명성은 신의에 기초해 처리해 나갈 것으로 응대하였다. 이 회담에서 남북은 전체회의의 2회, 수석대표 단독

¹¹⁵ 그러나 이후 북측회담대표들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남측수석대표 단독면담을 자제토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남측대표들이 김 위원장의 약속임을 거론하며 압박을 가할 때, 북측 협상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¹¹⁶ 남한은 ①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서울방문 일정 논의, ② 해외동포 고향방문, ③ 교수·대학생·문화계 인사 및 대중음악인 상호교환, ④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 및 8·15 서울·평양 축구대회 개최, ⑤ 남북직항로 개설, ⑥ 남북관광협력사업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¹¹⁷ 북한은 ① 흩어진 가족·친척방문단 교환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사업, ②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③ 경제협력 제도적 담보 마련사업, ④ 임진강유역 수해방지 대책사업, ⑤ 경제시찰단(고찰단) 파견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접촉 7회 및 실무대표접촉 2회 등을 통해 6개 항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¹¹⁸ 이 회담에서는 큰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제4회담 개최장소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¹¹⁹ 그러나 남북경협 확대의 제반문제 협의·추진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협의·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은 그 동안 장관급회담 산하에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 실천기구를 운영하도록 꾸준히 강조한 남한의 성과라 하겠다. 이후 동 기구는 10회 이상 개최되면서, 남북경협 활성화와 제도화를 뒷받침하는 주요 회담기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제4차 회담(12. 12~16, 평양 고려호텔)은 제3차 회담에서 합의한 일정(11. 28~12. 1)대로 개최할 것을 남측에서 제의하자, 북측에서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끝난 뒤인 12월 12일부터 3박 4일로 수정 제의하였고, 이를 남한이 받아들여 당초 일정보다 하루 연장한 16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숙소 도착 직후 열린 수석대표 접촉(12. 12)에서 양측은 기본 입장을 밝히고, 투자보장 등 4개 경협합의서를 12월 15일 정식 서명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제1차 전체회의(12. 13)에서 북한은 남한 인사의 발언, 독수리 2000 합동군사연습 강행, 2000년 국방백서의 ‘주적’ 등을 열거하면서 재발방지 담보를 주장하였다. 이에 남한은 남측 특정인사에 대한 북한의 비방과 취재인원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미이행에 대한 유

¹¹⁸ 통일부, 남북대화, 제67호, pp. 59~65.

¹¹⁹ 당시 제주발 서울행 비행기가 출발 지연되는 일이 있었다. 탑승자들이 처음에는 이해하는 분위기였으나, 시간이 2시간을 넘어 일정이 틀어지게 되자 흥분하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이후 남북의 대표들이 비행기에 타자, 비난과 욕설이 쏟아졌다. 이에 북한측 대표들은 합의결렬에 대한 남한의 선동으로 보고 몹시 불쾌해 했다고 한다. 그러나 자체 평가회의를 통해 그것이 아님을 알고, 남한 사회의 다원화된 모습과 민주적 실상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남북장관급회담 남측대표 인터뷰, 2005년 11월 29일.

감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함으로써 양측의 기 싸움이 다시 전개되었다. 게다가 남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과 제2차 정상 회담도 제기하였다. 제2차 전체회의(12. 14 오전)에서도 북한은 주적론 철회가 없으면 회담도 이산가족상봉도 모두 사문화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에 남한은 남북분단 현실을 인정하고 군사당국자회담을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를 정착시켜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속개된 제3차 전체회의(12. 14 오후)에서 북한은 당면 협의과제로 전력 및 어업분야 협력문제,¹²⁰ 태권도 통합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이에 남한은 전력지원을 포함한 여타문제들을 남북경협추진위를 구성하여 논의하자고 대응하였다. 남북은 전체회의 4회, 수석대표 접촉 5회와 수시 실무대표 접촉을 가졌고, 8개 항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제5차 회담과 관련, 장소 미합의·일자 절반 합의에 그침으로써 제3차 회담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북한의 불만이 좀 더 노출되었다.¹²¹

제5차 회담(2001. 9. 15~18, 서울 올림픽아호텔)은 회담 중단 6개월 만에 재개되었다. 제4차 회담에서 2001년 3월중에 개최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1년 2월 27일 박재규 수석대표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3월 13일부터 3박 4일 서울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고, 북측도 동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회담 당일인 3월 13일 오전 전금진 단장명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제5차 북남상급회담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중단

¹²⁰ 북한은 남한이 200만kw의 전력을 송전 방법으로 제공하되, 현존 변전소를 이용해 50kw(순시전력)을 긴급 제공하는 전력분야에서의 협력을 진행할 데 대해 강조하고, 동해어장 일부를 함께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¹²¹ 북한의 불만 핵심은 남측의 대북에너지 지원문제가 본격논의 되지 못하는데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면담, 2005년 11월 10일.

시켰다.¹²² 그리고 회담 중단 6개월 만인 9월 2일 임동옥 조평통 부위원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당국대화 재개를 제의하였고, 이에 남측이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서 개최할 것을 회담하여 개최되었다. 제1차 전체회의(9. 16)에서 남측은 일방적 불참 및 연기, 북측 선박의 남측 영해 무단통과 사건, 8·15 남북공동행사 진행과정에서의 일부 방북단 3대현장 기념탑 행사참석문제와 돌출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 회담을 통해 미이행과제¹²³를 실천하고, 남북관계 정상화 계기로 삼을 것을 강조하고, 새로운 협의과제¹²⁴들을 제시하였다. 제2차 전체회의(9. 17)에서 북한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문제와 임진강 수해방지문제는 군사 분야에서 선행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개성공단 건설문제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실무접촉 개최를 제의하였다. 이후 남북한은 수석대표 단독접촉과 실무접촉을 수차례 개최하여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교환과 경험분야 9개 항을 포함한 총 13개 항의 합의사항을 타결하고, 제3차 전체회의(9. 18)에서 이를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¹²⁵ 이 5차

¹²² 2001년 4월 초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IPU 105차 총회에 참석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대 부위원장은 5차 남북장관급 회담 연기에 대한 기자 질문에 “미국이 올 상반기중 대북정책을 정리하겠다고 했으니깐 이를 지켜본 뒤 대응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방침은 박재규 전 통일부장관을 통해 모두 전달했다. 박 장관에게 물어 보라”며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태도에 그 이유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5월 초 평양을 방문한 EU 대표단(단장: 페르손 스웨덴 총리)의 말에 의하면 김 국방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계속 지정한 것과 대북정책 검토단계에서 대북 회의감을 표명한 것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남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때문에 지금 당장 서울을 방문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¹²³ 미이행과제에는 현대와 북한과의 합의인 금강산관광 대가를 당초 약속대로 지급하는 것이 주요안건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2001년 10월 3일.

¹²⁴ 남·북·러시아 철도연결 및 가스관 통과, 상선의 상대측 영해통과 문제 등

회담에서는 남북 모두 수석대표를 포함하여 대폭적인 대표단 교체가 있었다. 북쪽에서는 최성익 조평통 서기국 부장과 남쪽에서는 서영교 통일부 국장만이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였다.

제6차 회담(11. 9~14, 금강산 호텔)은 제5차 회담에서 합의된 일자보다 10여일 늦게 개최되었다. 미국의 9·11 테러사태이후 북한은 조평통 대변인 담화(10. 12)를 통해 ‘남측의 살벌한 경계 태세 분위기’ 하에서는 대화와 내왕이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10. 16~18 예정) 및 태권도시범단 교환(10월 중 예정)을 연기하고 모든 당국회담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장소를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는 금강산으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남측은 홍순영 수석대표 명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강력 항의하고,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였다. 이후 9차례의 전화통지문 교환에도 의견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한국측은 대화를 지속하며 현안을 풀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 북측 금강산개최 제의를 수용하였고, 회담은 이를 연장 진행되었다. 제1차 전체회의(11. 9)는 1시간 20분, 제2차 전체회의(11. 10)는 37분 진행되며 회담초기부터 결렬의 조짐이 나타났다. 북한은 남한의 ‘비상경제태세’를 북측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제3차 전체회의(11. 14) 종결발언을 통해 북한은 이전 5차례의 장관급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을 매번 발표한 것과 달리, 제6차 회담에서 결실 없이 끝나게 된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였다.¹²⁶

¹²⁵ 통일부, 남북대화, 제68호 (서울: 통일부, 2002), pp. 13~18.

¹²⁶ 당시 남한의 보수여론은 결렬된 것을 칭찬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남측 대표의 일원은 7차 회담 일자를 명시하는 데 대해 북한의 불명확한 또는 미온적 태도와 이에 대한 남한의 강경한 반발로 결렬되었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남측이 차기회담 일정을 1월 정도로 두루뭉실하게 합의해주었다면,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었던 것

이후 남북 당국회담은 대통령특사 임동원 전 장관의 방북 때(2002. 4)까지 약 5개월간 이뤄지지 않았다. 부시 행정부 출범(2001. 1) 이래 북·미관계는 경색국면에 처했고, 9·11 사태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긴장관계가 더욱 고조되었다. 그리고 2002년 1월 29일 부시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이란·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하자 한반도는 큰 충격과 위기의식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임동원 대통령 특보가 특사로 방북(4. 3~6)하여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하고, 4월 5일 「공동보도문」(총 10개 항)을 동시 발표하였다.¹²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서해교전(6. 29)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다시 교착되었다. 이후 북한이 서해교전 관련 유감표명(7. 25)과 함께 당국회담을 제의하고 나옴에 따라 제7차 장관급회담이 재개되었다.

제7차 회담(2002. 8. 12~14, 서울 신라호텔)은 제6차 회담에서의 합의대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북측 대표단은 전세기를 타고 처음으로 남북직항로로 서울에 왔다. 제1차 회의(8. 12)에서 남한은 서해교전과 관련된 입장을 전달하고,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를 거듭 제의했다. 북한은 각종 회담에 대한 입장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남북한은 전체회의 3회, 수석대표 단독접촉 및 실무접촉 수차례 진행을 통해 4·5 공동보도문 이행 일정, 남북철도·도로연결 등 핵심현안 실천문제에 합의하는 등

으로 평가하였다. 남북장관급회담 남측대표 인터뷰, 2005년 11월 29일.
¹²⁷ 통일부, 통일백서 2003 (서울: 통일부, 2003), pp. 79~81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제2차 경협추진위 개최, 북측 경제시찰단 방문, 제2차 금강산 관광 당국회담 개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조속 연결, 남북군사당국자 회담 재개 등.

10개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¹²⁸ 제7차 회담에서 남측은 정세현 통일부장관이 수석대표로, 그리고 윤진식 재경부 차관과 박문석 문광부차관이 대표로 들어왔다. 북측도 김춘근 민경련 서기장이 새로 들어왔다.¹²⁹

제8차 회담(10. 19~22, 평양 고려호텔과 인민문화궁전)은 제7차 회담이후 2달 동안 획기적인 남북관계 발전으로 인해 합의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작업이 본격 진행되고,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는 등 남북관계는 화해협력 분위기 속에 진전되고 있었다. 그러나 제8차 회담을 이틀 앞둔 10월 17일 미국 대통령 특사 켈리 차관보의 방북 시(10. 3~5), 북한이 농축우라늄 핵무기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핵문제는 다른 현안문제에 앞서 제8차 회담에서 다뤄야 할 최우선과제가 되었다. 제1차 전체회의(10. 20)에서 한국은 기초발언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핵개발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북한의 핵개발은 핵무기를 시험·생산하지 않으며 핵재처리 시설과 농축우라늄 시설을 갖지 않기로 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핵비확산조약(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조치협정 그리고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의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 유감스러운 일임을 강조하였다. 제2차 전체회의(10. 21)

¹²⁸ 이 당시 북한은 대내적으로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발표하여 북한식 개혁을, 대외적으로 북·일 정상회담과 수교협상 재개를 위한 물밑접촉을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었다.

¹²⁹ 통일부, 남북대화, 제68호, pp. 27~32.

에서 한국은 핵문제 이외에 국군포로·납북자,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를 논의할 2차 국방장관회담 개최문제 등을 중점 제기하였다. 이에 북측도 남북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개발문제 등에 입장을 밝힘으로써 대단히 실용적인 협상 태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제2차 전체회의에 앞서 정세현 수석대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에 기초하여 핵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최근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남측 의견에 동의하고, “미측이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면 북한도 대화를 통해 안보상의 우려사항을 해소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8차 회담에서 남북한은 북핵문제와 화해협력 이행 및 제도화문제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양측 입장 조율이 힘들었던 만큼, 당초 합의일정을 하루 넘기면서 23일까지 4박 5일간 3차례 전체회담, 수차례 수석대표 접촉 및 실무대표 접촉을 진행하고, 23일 새벽 3차 전체회의를 열어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등 총 8개 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¹³⁰ 이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흥미 있는 사실이 나타났다. 1992년 11월 8차 남북고위급회담은 플루토늄 핵무기개발과 특별사찰 수용문제로 인해 결렬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번 제8차 남북 장관급회담 또한 농축우라늄 핵무기개발 프로그램으로 인해 결렬의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북대화가 결렬되지 않았다. 북핵 문제와 남북교류협력 문제를 이전과 달리 ‘연계’ 아닌 ‘병행’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지속하는 방향

¹³⁰ 위의 책, pp. 33~38.

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남북한 당국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제9차 회담(2003. 1. 21~24, 서울 워커히호텔)은 제8차 회담 합의에 따라 1월 중순 개최 예정되어 있었다. 한국이 1월 14일에서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1. 6)하자, 북한은 1주일 정도 연기하여 21일에서 24일까지 진행할 것으로 수정제의(1. 9)하고, NPT 탈퇴성명¹³¹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북한의 입장변화를 설득·촉구·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북측 제의를 수용하는 대북전화통지문을 발송(1. 15)하였다. 제1차 전체회의(1. 22)에서 양측은 북한 핵문제와 남북경협 사업 등 남북관계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 개발대책을 세운 적도 만들 의사도 없으며, 전력생산을 위한 평화적 계획만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핵문제는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의 산물로서 북·미간에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선군정치를 통해 견제하고 있는 대상은 민족의 자주권을 위협하는 외세이지 동족인 남측이 아니라며, 남측은 미국에게 진정한 대화와 불가침조약 체결에 응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남북경협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외세의 방해책동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족공조로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북한은 강변했다. 이후 수차례의 수석 및 실무대표 접촉을 진행한 후, 제2차 전체회의(1. 24 새벽)에서 4개 항의 공동

¹³¹ 북한은 “미국이 어떻게 하나 한사코 우리를 압살하려 하고 있고 국제원자력 기구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도구로 도용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금 명백해 진 조건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남아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존엄을 침해당할 수 없다”면서 NPT 탈퇴 이유를 설명했다. 조선중앙통신, 2003년 1월 10일.

보도문을 발표했다.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모든 문제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풀어 나가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합의에 충실하고, 동요없이 완강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¹³²

제10차 회담(4. 27~30, 평양)은 제9차 회담 시 합의에 따라 4월 7일에서 10일까지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4월 7일까지 실무절차 협의에 응하지 않아 개최되지 못했다. 한국이 유감과 조속한 대화재개를 촉구하는 전화통지문(4. 7)을 보낸 데 대해, 북한은 이라크전쟁(3. 20~5. 1)과 관련하여 한국이 '초경계태세'를 발령하여 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수 없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4월 27일에서 29일 개최할 것을 제의(4. 19, 전화통지문)하였고, 이에 한국이 동의함으로써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측은 참여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대표단에 변경이 있게 되었고, 대표단은 새 정부 「평화번영정책」 구상을 설명하였다. 또한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새 남북협상문화를 만들어 가야함을 강조하고, 원칙과 신뢰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을 모색하는 동시에 전술과 기교의 우위 시도는 마감할 것을 제의하였다. 제1차 전체회의(4. 27)에서 한국은 10차 회담 직전에 개최된 북경 3자회담(4. 23~24)에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발언한 것에 대해 해명과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이에 북한은 핵무기 보유여부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안하는 NCND 정책을 고수하면서, 핵문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비롯된 것이라며, 미국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한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화해협력정책을 지속한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¹³² 통일부, 남북대화, 제69호 (서울: 통일부, 2003), pp. 21~26.

로 평가하면서, 남북경협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민간교류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제2차 전체회의(4. 28)에서 한국은 북핵문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동시에 남북군사적 신뢰구축과 남북관계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은 북핵문제를 북·미간에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1차 전체회의에서 보여준 태도를 지속하였다. 제3차 전체회의(4. 30)에서 한국은 북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태도 변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북한은 교류협력과 더불어 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대구 유니버시아드 참가 등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종결회의에서 북한은 강원도 평창의 2010 동계올림픽 유치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남북한은 전체회의 3회와 수차례의 수석 및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북핵문제를 포함한 6개 항에 합의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¹³³

제11차 회담(7. 9~12, 서울 신라호텔)은 10차 회담 시 합의대로 개최되었다. 제10차 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¹³⁴ 그러나 제11차 회담 직전(7. 8) 북한이 ‘핵재처리 완료사실’을 뉴욕채널을 통해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은 제11차 회담의 최우선목표를 북핵문제 해결의 여건 마련에 두고, 남북대화를 이어나감으로써 한반도 긴장격화를 방지하는 데 노력하였다. 제1차 전체회의(7. 10)에서 한국은 북핵개발 불용, 평화적 해결,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 및 NPT 복귀 등을 강

¹³³ 위의 책, pp. 27~34.

¹³⁴ 제5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5. 19~23, 평양), 제8차 군사실무접촉(6. 4, 판문점), 제5차 철도·도로 실무접촉(6. 7~9, 개성), 제3차 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7. 2~4, 문산),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실무접촉 등이 차례로 개최되었다.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식(6. 14), 개성공단 착공식(6. 30), 제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6. 27~7. 2), 대북 쌀 40만 톤과 비료 20만 톤 지원 실시 등.

조하였다. 그리고 확대 다자회담을 불가피성,¹³⁵ 유용성,¹³⁶ 시급성¹³⁷을 중심으로 북한에게 촉구하였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제2차 국방장관회담,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 구성, 이산가족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6·15 공동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력증강과 남한 국방부의 대북 주적론 등을 비판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족공조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와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확대(8·15 광복행사 등) 및 비방방송 일체 중지(2003. 8. 15)를 제시하였다. 제2차 전체회의(7. 12)에서 남북한은 쟁점이었던 북핵문제를 “적절한 대화의 방법”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¹³⁸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다자회담에 참여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임을 의미하였다. 남북한은 2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석 및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6개 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¹³⁹

제12차 회담(10. 14~17, 평양)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제11차 회담이후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제1차 6자회담(8. 27~29, 베이징)이 개최되었고, 남북 화해협력사업도 꾸준히 진행되었다.¹⁴⁰ 그러나 제12차 회담 직전에 다시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났다.¹⁴¹ 이에 한국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제반 사

¹³⁵ 미·일·중·러 등 국제사회가 모두 다자회담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

¹³⁶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

¹³⁷ 국제사회의 압력이 증대되는 추세에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조속히 다자회담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

¹³⁸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인터뷰, 2005년 11월 3일.

¹³⁹ 통일부, 남북대화, 제69호, pp. 35~40.

¹⁴⁰ 금강산 육로관광 재개(9. 1), 평양관광 시작(9. 15), 식량분배 현장확인 실시(9. 20~29), 개천절 행사 및 정주영체육관 개관행사 등 민간차원 교류행사 활발히 진행.

향 점검·보완 차원에서 회담에 나섰다. 북한의 일부 대표 교체가 있었고, 새로운 최영건 대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한측 위원장을 겸임하게 되었다. 제1차 전체회의(10. 15)에서 북한은 북핵문제보다도 8·15 행사 및 대구유니버시아드에서의 북한 체제 비난문제, 개성공단 공사부진, 이산가족면회소 협의부진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반복단체 해체와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요구하였다. 제2차 전체회의(10. 17)에서 북한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입장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선 핵포기’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회담기간 중 핵억제력의 물리적 공개 시사가능성에 대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발언(10. 16)에 대해 한국이 엄중 항의하자, 대미 대화촉구용이었음을 해명하고, 이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무리한 주장과 태도로 인해 남북대화의 연속성을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추후 회담일정에만 합의하고, 3개 항의 공동보도문을 내는 데 그쳤다. ¹⁴²

제13차 회담(2004. 2. 3~6, 서울 신라호텔)은 예정대로 개최되었다. 한국은 장관급회담을 남북 현안문제 외에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관계 중심협의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관계의 내실있는 발전’을 목표로 회담에 임했다. 따라서 제1차 전체회의(2. 4)에서 한국은 제2차 6자회담에서 실질적 논의가 이뤄져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남북경제협사업과 더불어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과 정치군사분야의 신뢰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이는 3대 경험사

¹⁴¹ 북한의 6자회담 무용론과 핵억제력 강화주장 반박,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발표(10. 2) 등.

¹⁴² 통일부, 남북대화, 제69호, pp. 41~46.

업의 착실한 추진과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의 구성·운영 그리고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로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 ‘동결 대 보상’안을 반복하고, 남북 사이에 ‘우리민족제일주의’를 공동의 정신적 기둥으로 삼고 남북 당국공조를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것과 남북경협을 당국이 책임지고 진척시켜 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동시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이 북한 기대만큼 진전되지 못하는 것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국호영문표기(COREA)문제를 UN에 공동제의하는 문제, 남북해운합의서 발효문제, 전연지대 비난방송 중지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제2차 전체회의(2. 6)에서 북한은 우리민족제일주의와 민족공조를 거듭 주장하며, 경협사업에 대한 당국지원 미흡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수석 및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남·북한은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제2차 6자회담(2. 25~28, 베이징)이 결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군사당국자회담의 조기 개최와 제9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 등에 합의하는 등 6개 항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¹⁴³

제14차 회담(5. 4~7, 평양 고려호텔)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당초 합의대로 진행되었다. 북한은 13차 회담에서 어렵게 합의한 군사당국자회담 개최에 대해 이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정국(2004. 3. 12~5. 14)도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한국의 정국불안을 이유로, 회의장소 변경과 일자 연기를 고집하였다.¹⁴⁴ 그러나 회담직전 김정일

¹⁴³ 통일부, 남북대화, 제70호 (서울: 통일부, 2004), pp. 11~17.

¹⁴⁴ 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임진강수행방지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제3차 청산결제실무협의의 등.

위원장의 중국방문(4. 18~21)에 따른 북한의 정책변화 가능성과 용천역 폭발사고(4. 22)에 대한 한국의 신속한 지원과 북한의 사의표명은 회담전망에 긍정적 신호를 보여주었다. 제1차 전체회의(5. 5)에서 한국은 사회·경제분야 발전에 맞춰 군사적 긴장완화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의 주도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당면협의과제로서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민간교류 지원문제,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구성운영문제, 제10차 이산가족 상봉과 면회소 조기건설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우선적으로 중지되어야 하며, 이지스함의 동해배치 계획도 철회되어야 함을 요구하였다. 또한 제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의 일부차질을 언급하면서, 상대방 체제인정과 존중 그리고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인터넷 방송 즉각 중지를 제기하였다. 제2차 전체회의(5. 8)에서 북한은 장성급 군사회담이 장관급회담 소관 밖의 사안임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한국은 제14차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더라도 향후 대북협상을 위해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일관성있게 주장하였다. 그 결과, 차기 장관급회담 일정만 잡고, 일단 회담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 대표단 귀환시각 20분 전 긴급회담을 제의하면서, 장성급 군사회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따라서 남북한은 제1차 장성급 군사회담의 5월 중순경 개최를 포함한 5개 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¹⁴⁵ 이후 5월 26일 제1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이 개최되었고, 2004년에만 장성급 군사회담 2회, 장관급 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2회, 장

¹⁴⁵ 통일부, 남북대화, 제70호, pp. 18~23.

성급 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 1회, 장성급 군사회담 군사통신실무접촉 2회 등이 개최되었다.

제15차 회담(2005. 6. 21~24, 서울)은 2004년 7월 초 한국의 김일성주석 10주기 조문 불허 방침에 이은 탈북자 집단입국, 미국의회의 북한인권법 채택 등을 계기로 북한이 예정되어 있던 회담(2004. 8. 3~6)을 무산시킴으로써 1년 이상 중단되어 있다가 재개되었다. 북한이 2005년 2월 10일 핵무기 제조·보유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북핵문제는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한국은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를 북한에 촉구하였고, 5월 13일 북측 경비정의 두 차례 NLL 침범이 있는 뒤, 5월 14일 북한은 대남통지문을 통해 당국회담(차관급, 5. 16~17, 개성)에 동의해 왔고, 이에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성에서 진행되었다. 차관급회담에서 15차 장관급회담의 일자와 장소가 합의되었고, 남한의 봄철비료 20만 톤 제공과 더불어 ‘중요한 제안’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6월 17일 대통령특사 정동영 장관의 김정일 위원장 단독면담(2시간 30분) 시 중대제안 제시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 대화와 6자회담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생각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¹⁴⁶ 이 제안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신중히 연구해서 답

¹⁴⁶ 한국정부가 제시한 ‘중대제안’은 대북 전력지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 주요 내용은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현재 중단상태인 경수로 건설공사를 종료하는 대신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200만kw의 전력을 북한에 직접 송전방식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기자회견” <통일부 홈페이지, 2005. 7. 12>. 즉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송전선로 공사에 즉각 착수해서 3년 이내에 북핵 폐기와 함께 송전방식에 의해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방안이 추가비용 부담 없이 북한 에너지 문제를 풀어나가므로 북핵문제의 주도적 조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남북 공동번영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1994년 제네바합의에 따르면, 경수로 건설비용은 50억 달러이며, 15억 달러는 이미 집행되었다. 따라서 잔여공사비는 35억 달러이다. 이 가운데 70%인

을 주겠다”고 대답하였다.¹⁴⁷ 제1차 전체회의(6. 22)에서 한국은 6·17 면담 시 김정일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이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으로서 관찰해야 함과 6자회담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언명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7월 중 제4차 6자회담 개최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최종목표라고 언급하고, 미국이 우호적으로 대한다면 단 한기의 핵무기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¹⁴⁸

그리고 차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제15차 회담은 전체회의와 수석 및 실무대표 접촉 그리고 북측 대표단의 노무현 대통령 예방(6. 23)등을 통해 6·17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이행문제를 중심으로 제반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12개 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제15차 회담을 통해 남북한은 ‘제2의 6·15 시대’라 할 만큼 각종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물꼬를 텃다. 북핵문제 해결의 한 축으로서 남북대화가 자리를 잡

24억 달러를 우리 측이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중대제안의 핵심은 대북 송전로 건설과 변환설비 건설 등 여기에 소요될 비용은 이를 통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¹⁴⁷ 제4차 6자회담에 참석한 김계관 외무성부상은 ‘중대제안’의 유용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핵폐기의 결정적 동기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은 핵 문제를 체제보장과 동일이라는 국가전략차원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송전을 비롯 에너지 주권을 고려하여 주저할 것이나 에너지난 해결을 위해 핵 동결 대가 차원에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핵 폐기문제는 북·미 관계정상화와 같이 이보다 큰 북한의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중대제안은 북한을 6자회담에 불러내고, 남북관계를 계속해서 진전시키는 하나의 중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해법이 되지는 쉽지 않다.

¹⁴⁸ 김정일 위원장은 장거리 미사일폐기 문제와 관련, 미국과 수교하고 우방국가 가 된다면 미사일을 폐기할 용의 있음을 표명하고, 1개 국가가 가질 수 있는 미사일만 갖고 장거리미사일과 대륙간 미사일은 다 폐기할 것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있을 뿐 아니라, 제3차 장성급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본격 협의를 재개하고, 제10차 경추위회담(7. 8~12)을 통해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경험 활성화를 더욱 도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광복 60주년행사 공동개최를 통해 사회문화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남북회담문화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6·17 면담 시 김정일 위원장은 회담문화 개선에 대한 공감을 표명한 바, 전체회의 회담테이블을 원탁으로 교체함으로써 원만한 대화분위기를 조성하였고, 회담을 실질협의 중심으로 진행시켜나가기로 지침을 정하고, 회담결과 발표방식을 공동기자회견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장관급회담을 정례화하고, 실력·실리·실적을 쌓아가는 대화를 추구하기로, 동시에 호혜주의와 실천을 중시하기로 하였다.¹⁴⁹

제16차 회담(9. 13~16, 평양)은 장소만 백두산에서 평양으로 바뀐 채 제15차 회담에서의 합의일정대로 개최되었다. 회담 기간 중 정동영 수석대표는 북측 핵심관계자를 별도 면담(9. 14), 남북 현안문제를 협의하고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과 미·일 측의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였다.¹⁵⁰ 제1차 전체회의(9. 14)에서 한국은 군사당국간 회담 재개, 남북 상주연락대표부 설치, 국군포로와 납북자 생사 및 주소 확인, 경제인력 공동양성, 겨레 말사전 편찬 당국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지를 주장하였다. 이후 실무

¹⁴⁹ 통일부,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해설자료』 (2005. 6. 24).

¹⁵⁰ 그 주요 내용은 북핵문제는 2단계 4차 6자회담에서 반드시 결말을 지어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핵문제를 타결하고 평화체제 협의로 넘어가야 한다는 제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해설자료』 (2005. 9. 16) p. 2.

대표 접촉에서 북한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담 의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다.¹⁵¹ 그리고 15일 오후부터 회담의제 협의를 사실상 시작해서, 회담 마지막 날인 16일 새벽까지 공동보도문 조율작업을 벌이는 등 난항을 겪었다. 여기에는 같은 시기에 개최된 베이징 2단계 4차 6자회담의 진전 과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여곡절 끝에 수차례의 수석 및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6개 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공동보도문 발표 후 제1항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어났다. 16일과 17일 북측 언론은 1항에 명시된 ‘실용주의적 입장에서’라는 문구를 삭제 보도하였고, 19일 조총련기관지 조선신보는 ‘체면주의는 상대방을 부정하고 적대시하면서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절대화하는 것’이라며, 체면주의를 버리는 것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사실을 남측 언론이 지적하고 나서자, 17일 오전 조선중앙통신은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기는 하였으나, ‘실용주의적 입장에서’라는 문구는 끝내 포함하지 않았다.¹⁵²

¹⁵¹ 중앙일보, 2005년 9월 16일.

¹⁵² 연합뉴스, 2005년 9월 19일.

<표 IV-2> 남북장관급회담 합의내용(2000. 7~2005. 10)

차수	장소	일자	주요 합의내용
1	서울	2000.7.29 ~7.31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 재개, (남·북) 8·15 남·북·해의 행사 개최, (남·북) 조총련 고향방문 협력, (북) 경의선 철도(문산-개성간 24km)연결 합의 (남)
2	평양	2000.8.29 ~9.1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2차례 추가실시 (남·북) 군사당국자회담 개최문제 협의 (남) 경협 제도적 장치마련(투자보장·이종과세 방지 등) (남북) 경의선 철도연결 및 문산-개성도로개설 실무접촉 개최 (남북)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공동추진 (남) 한라산-백두산 관광단 교환 (북)
3	제주도	2000.9.27 ~9.30	생사교환·서신교환·면회소 설치 조속 조치 (남북) 투자보장·이종과세 방지문제 및 분쟁해결 절차·청산결제 제도 마련 협력 (남북)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협의·설치 (남) 서울·평양 정기 친선축구대회 및 교수·대학생·문화계 방 문단 시범상호교환 등 교류·협력문제 협의 합의 (남)
4	평양	2000.12.12 ~12.16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 (남북) - 전력협력, 철도·도로, 개성공단, 임진강유역 수해방지사업 등 협의 남북어업협력-동해어장 (북) 태권도시범단 교환 및 통합문제 협의 (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남북)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북) 북측 한라산 관광단 및 경제시찰단 파견 (북) 투자보장 등 4개 합의서 발효 (남북)
5	서울	2001.9.15 ~9.18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남북)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협력사업 및 당국회담 합의 (남북) · 경의선 철도도로 (남) · 개성공단 (북) · 금강산 육로관광 (남) · 남-북-러 철도 연결, 가스관 연결 (북) · 민간선박 상호 영해통과 (북) ·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 (남북) · 경협 4개 합의서 발효 (남북) · 동해 공동어로 (북) ·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남북) 태권도 시범단 상호방문 (북)

차수	장소	일자	주요 합의내용
6	금강산	2001.11.9 ~11.14	합의 없음 ¹⁵³
7	서울	2002.8.12 ~8.14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당국자간 회담 개최 (남북) 임남댐 공동조사 실시 (남)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남북) 금강산관광 활성화회담 (남북)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측 참가 (남북) 남북축구경기 (남) 태권도시범단 교환 (북) 북측 경제시찰단 방문 (북)
8	평양	2002.10.19 ~10.23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 대화로 해결 (남북) 철도·도로 건설 빨리 진척시킴 (남북) 경의선-개성공단엔, 동해선-금강산지역 연결 (남북) 개성공단 착공(12월중)실무문제 「개성공단건설실무 협의회」 합의 (남북) 해운합의서 실무접촉(11월) 개최 (남) 동해어장 개방 실무접촉 개최 (북) 금강산면회소 조기 건설 (남)
9	서울	2003.1.21 ~1.24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발전 긍정평가 (남북)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 (남) 교류협력사업 계속 추진 및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 회 제4차 회의 개최 일정 등에 합의 (남북)
10	평양	2003.4.27 ~4.29	6·15 공동선언 기본정신 재확인, 준수, 이행 (남북) 핵문제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 (남) 민족통일대축전 정례화 지원 (북) 남북 교류협력 적극 추진 (남북) · 남북경제협력추진위 개최 (남북) 제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추진 (남) 북측 대구 유니버시아드 참가 등에 합의 (남북)
11	서울	2003.7.9 ~7.12	북한 핵문제 “적절한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 (남) 한가위 이산가족 상봉 (북) 제6차 남북경추위 개최 (남북) 사회문화협력 분과회의 구성 검토 (남) 민간주최 8.15 광복절 행사 협력 (북)
12	평양	2003.10.14 ~10.1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 및 향후 장관 급회담 개최 등에 합의

차수	장소	일자	주요 합의내용
13	서울	2004.2.3 ~2.6	<p>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제2차 6자회담이 결실 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 (남)</p> <p>한반도긴장완화 위한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남)</p> <p>조속한 시일내에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 금년 상반기 중에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하도록 적극 협력 (북)</p> <p>임진강수해방지, 상대방 비방방송 중지 (남, 북)</p> <p>제9차 이산가족상봉 2004년 3월말 금강산 실시합의 (남)</p>
14	평양	2004.5.4 ~5.7	<p>(합의·의견접근 사항)</p> <p>6자회담에서 핵문제 실질적 진전 협력 (남)</p> <p>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6월 20일경 개최 (북)</p> <p>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의 구성 계속 협의 (남)</p> <p>제1차 장성급군사회담 5월중순 개최 합의 (남)</p>
15	서울	2005.6.21 ~6.24	<p>8.15 남북공동행사 당국대표단 파견 (남북)</p> <p>핵문제 평화적 해결위한 실질적 조치추진 (남북)</p> <p>이산가족 금강산 상봉(8.26부터) 실시와 금강산면회소 건설 착공식 진행 및 측량 및 지질조사를 7월중 완료 (남)</p> <p>8.15 이산가족 화상상봉 시범 개시 (남)</p> <p>을사 5조약 원천무효임을 확인 (남북)</p> <p>제3차 장성급군사회담 백두산에서 개최 (남북)</p> <p>서해 평화정착 위한 수산협력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남북)</p> <p>농업협력위원회 구성·운영 (남북)</p> <p>북측 민간선박 제주해협 통과 합의 (북)</p> <p>식량지원 (북)</p> <p>경추위 제10차 회의(7.9~12 서울)합의 (남북)</p>
16	평양	2005.9.13 ~9.16	<p>체면주의를 버리고 실용주의 입장에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질 추진 (남북)</p> <p>한반도 평화보장과 군사적 긴장완화 실천방안 모색 (남북)</p> <p>경협장애제거 및 투자·유무상통 원활 추진 (남북)</p> <p>12차이산가족 상봉 11월추진, 화상상봉 연내 2차례 추가실시 (남)</p> <p>국군포로·납북자문제 적십자회담에서 협의 합의 (남)</p> <p>겨레말 큰사전 공동편찬사업 적극 지원 (남북)</p>

153 북한은 9·11테러사태 이후 남한의 비상경계강화 조치 및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해 항의하고 비상경계강화 조치 해체에 대한 남측의 납득할 만한 조치를 촉구하였다.

2) 특징

이상의 16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을 정리해 볼 때, 북한은 장관급회담을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쌀 40만 톤,¹⁵⁴ 비료 30만 톤¹⁵⁵ 정례화)과 실리를 확보하는 대남용과 미국과의 안보협상에 있어 극단적 상황이 초래될 경우 ‘민족공조’ 명분 하에 최소한의 대화를 유지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일방적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안전판을 확보하는 대미용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북한은 장관급회담을 대북지원 협의창구와 더불어 대미협상기반 구축창구 및 대남 통일전선사업 추진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시기 별로 살펴보면, 북한은 장관급회담을 초기에는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창구로 사용하였고, 중반이후(8차 회담) 핵위기 상황에 직면해서는 미국 대 남북민족 대결의 민족공조를 더욱 강조하였고, 후반(참여정부 출범)이후에는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창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들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장관급회담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일정과 연계·활용함으로써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고 있다. 북한은 제3차 회담(2000. 9. 27~30, 제주도)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협의·설치에 합의한 후, 제6차 회담(2001. 11. 9~14, 금강산)에서 아무 합의없이 격한 감정으로 남북대표(홍순영, 김령성)가 헤어지자 제1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 회담(2001. 12. 28~30)에 호응하

¹⁵⁴ 2000년 쌀 30만 톤, 옥수수 20만 톤, 2002~2004년 쌀 40만 톤, 2005년 쌀 50만 톤 차관방식으로 지원, 한편 북한은 대북식량지원 요청을 2003년에는 제10차 장관급회담(4. 27~29), 2004년에는 제9차 경추위(6. 23~26), 2005년에는 제15차 장관급회담(6. 21~24)에서 공식적으로 제의했다.

¹⁵⁵ 2003년 30만 톤, 2004년 30만 톤, 2005년 35만 톤 직접 지원.

였다. 그리고 임동원 대통령 특보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2002. 4) 이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제7차 회담(2002. 8. 12~14)에서 다양한 합의가 이뤄지자, 제2차 남북경추위(8. 27~30)를 개최하여 쌀 40만 톤(차관)과 비료 10만 톤 지원을 확보하였다. 이후 동일 장소에서의 선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후(1개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담 진행의 방식이 정형화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8차 장관급회담(2002. 10. 19~23, 평양) 개최와 3차 경추위회담(11. 6~9, 평양) 진행, 9차 장관급회담(2003. 1. 21~24, 서울)와 4차 경추위(2. 11~14, 서울), 10차 장관급회담(4. 27~29, 평양)와 5차 경추위(5. 19~23, 평양), 11차 장관급회담(7. 9~12, 서울)과 6차 경추위(8. 26~28, 서울), 12차 장관급회담(10. 14~17, 평양)과 7차 경추위(11. 5~8, 평양), 13차 장관급회담(2004. 2. 3~6)과 8차 경추위(3. 2~5, 서울), 14차 장관급회담(5. 4~7, 평양)과 9차 경추위(6. 2~5, 평양)회담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2004년 하반기 조문파동과 탈북민 집단입국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장관급회담이 중단되자, 경추위회담도 역시 중단되었다. 이후 15차 장관급회담이 재개(2005. 6. 21~24, 서울)되자, 10차 경추위(7. 9~12, 서울)도 재개되었다. 결국 북한은 장관급회담과 경추위회담을 통해 남한으로부터 식량(쌀 40만 톤)과 비료(봄: 20만 톤, 가을: 10만 톤 - 총 30만 톤) 지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장기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정치적 관계를 넘어서까지, 다시 말해 정권적 안정성과 수령제 사회주의(김정일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정치우위의 정책적 결정이 지속되고 있음도 노정하였다.

둘째, 북한의 경제적 실리 확보노력은 장관급회담 의제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16차에 걸친 장관급회담에서 제일 많이 합의된 부분이 바로 6·15 남북공동선언 제4항(민족경제 공동발전과 교류협력 활성화)이다. 북한은 3대 경협사업(개성공단사업 - 5, 8, 13차 회담, 금강산관광 - 5, 8차,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 1, 2, 5, 8차 회담)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협제도적 마련 합의(2, 3, 4, 5, 16차 회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외 임진강 수해방지사업(2, 5, 13차 회담), 남북어업협력(4, 5, 8차 회담), 관광단 교환(2, 4차 회담), 북한 경제시찰단 파견(4, 7차 회담), 민간선박 상호영해 통과(5, 15차 회담), 해운합의서(8차 회담), 임남댐 공동조사(7차 회담) 등에 합의하였다.

셋째, 6·15 공동선언 제1항(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관련하여 북한은 초기에는 체육행사에, 최근에는 상호 비방중지와 문화적 행사에 호응해 나왔으며, 민간급 공동행사는 전 시기에 다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체육행사로는 친선축구대회(3, 7차 회담), 태권도 시범단 교환(3, 5, 7차 회담),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7차 회담), 대구 유니버시아드 참가(10차 회담) 등에 북한은 합의하였다. 그리고 탈북자들의 대북방송에 대해서는 상호 비방 방송중지(13차 회담) 논리로 강력히 요구하였고, 광복 60주년을 맞이해서는 을사5조약 원천무효(15차 회담)와 겨레말큰사전 발간(16차 회담)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민간급 공동행사는 8·15 행사(1, 11, 15차 회담)와 6·15 공동선언을 기념하는 민족통일대축전(10차 회담)로 나타났는데, 이 과정에서 현충원 전격방문 등 파격적 행보를 통해 통일전선사업을 노련하게 전개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넷째, 6·15 공동선언 제3항(인도적 문제해결)과 관련해서 북한은 초기(1차 회담)에 조총련 고향방문을 강조한 후, 최근에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문제 해결(8·15 16차 회담)에도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전 시기에 걸쳐서는 이산가족 방문과 상봉행사에 호응하는 모습(2, 4, 5, 10, 11, 13, 14, 15, 16차 회담)을 보여주었다. 또한 생사교환·서신교환·면회소 설치(3, 4, 8, 15차 회담)에도 합의하였다. 그리고 15, 16차 회담에서는 이산가족 화상상봉에도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한의 대북경제지원에 대한 답례로 이산가족문제 해소에 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남측은 경제 지원-군사문제 해결을 연계하기를 원하나, 북측은 경제지역-인도문제 해결로 연계하기를 원한다고 하겠다.

다섯째, 6·15 공동선언 제5항(당국회담과 답방)과 관련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 순으로 당국회담에 호응하는 모습을 북한은 보여주고 있다. 1차 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은 판문점 연락사무소 업무재개에 합의하였고, 3차 회담이후 4, 5, 7, 9, 10, 11, 12, 15차 회담에 이르기까지 남북경제협력추진위 회담진행에 합의하였다. 8차 회담에서는 개성공단실무협의회에 합의하였다. 또한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개최에 11차 회담에서 합의하였고, 14차 회담에서 계속 협의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비록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회담이지만 군사당국자회담에 7차 회담에서 합의하였고,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회담에 13차 회담에서 합의한 후, 14, 15, 16차 회담에서 장성급회담 추진을 계속 합의해 오고 있다. 그 외 당국회담은 서해 수산협력실무협의회, 농업협력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확대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여섯째, 그러나 6·15 공동선언 제2항(통일방안)문제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전혀 진전이 없었다.

일곱째, 북핵문제는 남북한 모두 이 문제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의 경우, 잘못 거론할 경우에 경제적 실리 확보와 더불어 기왕에 진행되는 장관급회담과 통전사업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정부도 남남갈등이 더욱 성화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2002년 10월 제8차 회담부터 줄곧 의제로 논의되었다. 8차 회담에서 한국이 북핵문제를 제기하자,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탓으로 돌렸다. 공동 보도문에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원칙적 수준에서 합의하였다. 북한은 한국을 북핵문제의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국 수석대표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10차 회담(2003. 4. 27~29, 평양)에서 다자회담(5자회담) 수용을 북한에 촉구하였다. 그는 중국이 이미 다자회담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음과 미국도 벵골곶전술을 구사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당시 북한은 중국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심하게 반발하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정세현 대표는 러시아를 포함한 6자회담 안을 북측 김령성 대표에게 제시하였다. 또한 11차 회담(2003. 7. 9~12, 서울) 시 수석대표 단독접촉(밤 9:00~12:20)에서 정세현 장관은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이행이 좌절된 데에는 북·미 양자합의였던 것이 주요 원인이 되었음을 상기시키고 다자회담과 합의가 오히려 북측의 이해관계를 보장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음을 권고하였다.

<표 IV-3> 6·15 공동선언과 주요 합의내용 비교

의제	차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① 항 자 주 적 해 결	8·15남북회의 행사개최	○									○					
	서울·평양정기 친선축구대회			○			○									
	교수·대학생·문화 계 방문단 상호방문			○												
	태권도 시범단 교환				○	○	○									
	부산아시아 경기대회						○									
	북한핵문제							○	○	○	○		○	○	○	○
	민족통일대축전									○						
	대구유니버시아드									○						
	상대방비방												○			
	8·15 행사															○*
	을사5조약 원천무효															○
	체면주의 포기 실용주의 채택															○
거래말큰사전															○	
*당국대표단 파견																
② 항 통 일 방 안																
③ 항 인 도 적 문 제	조총련 고향방문	○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		○	○				○	○		○	○	○	○
	상사교환·서신교환 · 면회소 설치			○	○			○	*							
	남북적십자 회담						○									
	이산가족 화상상봉															○ ○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								○ ○	
*금강산 면회소																

의제	차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④ 항 경 제 문 제	경의선철도 (문단·개성)연결합의	○	○			○			○							
	경협제도적장치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마련		○	○	○	○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공동추진		○			○							○			
	한라산·백두산 관광단 교환		○		○											
	남북어업협력 (동해어장)				○	○			○							
	경제시찰단파견				○			○								
	개성공단					○		○					○			
	금강산 육로관광					○		○								
	남·북·러 철도연결· 가스관연결					○										
	민간선박 상호영해 통과					○										
	임남댐 공동조사							○								
	해운합의서								○							
	북측민간선박 제주해협통과														○	
경협장애제거																○

*분쟁해결 절차·청산결제 제도
**투자보장 4개 합의서 발효
● 경의선, 동해선 연결

⑤ 항 단 국 회 담 · 답 방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재개	○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	○	○		○		○	○	○	○							○	
	철도·도로연결 조사당국자 회담							○													
	개성공단실무협의회								○												
	사회문화협력 분과회의										○										
	한반도 긴장완화 군사당국자 회담협의		○											○							
	사회문화협력 분과회의																		○		
	장성급회담																		○	○	○
	서해수산협력 실무협의회																			○	
	농업협력위원회																			○	

이 과정에서 북한은 ‘다자회담’과 ‘국제적인 대화의 방법’이라는 문구는 대미 양자협상카드 상실의 우려로 인해 반대하였다. 그 대신 ‘적절한 대화의 방법’이라는 문구에 남북한이 합의하여, 11차 회담 공동보도문에서 발표하였다.¹⁵⁶ 그리고 북한은 한국에게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체제를 보장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북한은 제1차 6자회담(2003. 8. 27~29)에 나왔다. 그러나 북한은 6자회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12차 회담(2003. 10)에서 반복단체 해체, 비전향장기수 송환, 탈북자들의 인터넷 방송 중지 등을 요구하며, 북핵문제 제기에 대남 역공 방식을 취했다. 그리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공동노력한다’와 ‘6자회

¹⁵⁶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인터뷰, 2005년 11월 10일.

담 틀 내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적인 합의에만 응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압살정책의 철회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공격가능성을 완화시키는 수준에서만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문제제기를 수용하는 모습을 반복하였다.

여덟째, 북한은 남북장관급회담을 국제적으로는 북핵문제 및 6자회담 일정과 연계해서 안전판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예컨대 2002년 10월 17일 북핵개발 의혹이 국제적으로 문제화되자, 북한은 8차 장관급회담(10. 19~22, 평양)에서 대화에 의한 해결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으로 치닫자, 북한은 핵동결해제와 핵시설 재가동 선언(2002. 12. 12)으로 맞받아치고 나아가 NPT 탈퇴까지 선언(2003. 1. 10)하였다. 이후 북한은 제9차 장관급회담(1. 21~24, 서울)에 나와, 극단적인 정세악화의 악화는 막으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제1차 6자회담 이후 미국이 대북협상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자, 미국의 시선을 끌기 위해 북한은 6자회담 무용론과 핵억제력 강화 주장을 반복하면서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를 발표(10. 2)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제12차 회담(10. 14~17, 평양)에 나와 미국의 대북 공격자세와 한반도정세의 지나친 격화를 억제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이후 제2차 6자회담 참여의사를 표명(10. 30)하였고, 서면불가침 담보를 고려할 용의가 있고 동시행동원칙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11. 15)함으로써 협상기반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표 IV-4> 남북합의사항 이행여부

의제	합의 및 이행여부	합의 일자	이행 여부
①항 자주적 해결	8·15남북회의 행사개최	1차회담 (00.7.31)	동 행사 개최(2000.8.14)
	서울·평양정기 친선축구대회	3차, 7차	남북축구경기 진행(2002.9.6~8)
	교수·대학생·문화계 방문단 상호방문	3차	축구, 태권도 교류로 축소됨.
	태권도 시범단 교환	4차회담 (00.12.16)	남측 시범단 방북(2002.9.14~17), 북측 시범단 방남(2002.10.23~26)
	부산아시아 경기대회	7차	체육회담 개최(2회)
	북한핵문제	8차	6차회담 참가(2003.8.27~현 5차회담 진행중)
	6·15 민족통일대축전	10차회담 (03.4.29)	6·15 민족통일대축전 개최(2003.6.15)
	대구유니버시아드	10차	실무접촉 실시(2003.7.4~6),
	상대방비방방송 중지	13차	
	8·15 행사	11차회담 (03.7.12)/ 15차회담 (05.6.24)	행사개최(2003.8.14~17, 330명 방북) / 행사개최(2005.8.14~17, 182명 방남).
을사5조약 원천무효	15차		
체면주의 포기 실용주의 채택	16차		
겨레말큰사전	16차		
②항 통일 방안			
③항 인도적 문제	조총련 고향방문	1차회담	총련동포(50명)남측 고향방문(2000.9.22~27)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2차회담 (00.9.1)	1차교환(00.11.30~12.2), 2차교환(00.2.26~28) 이후 2005년 8월말 현재 총 11차례 실시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면회소 설치	3차회담 (00.9.30) 4차	생사주소확인 명단교환(각 100명) 2회(2000.9.30, 2001.2.8) 및 서신교환(각 300명) 1회(2001.3.15) 실시
	남북적십자 회담	7차 회담 (02.8.14)	제4차 적십자회담 개최(2002.9.6~8)
	금강산 면회소	8차	이산가족면회소 건설합의(4차 적십자회담, 02.9.8)

	이산가족 화상상봉	15차	1차 화상상봉 실시(05.8.15, 남북 각각 50명)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8차, 15, 16차	북한은 납북자·국군포로의 존재 부인 논의자체 거부
④항 경제 문제	경의선철도 (문단·개성)연결합의	1차회담	경의선 철도·도로 공사완료(2002.12.31)
	경협 제도적 장치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마련	2차	합의서 타결(2000.11.11), 문본 교환(2003.8.20) 및 발효(2005.8.5)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공동추진	2차	임진강실무협의회 개최(2001.2.21~24) 및 『임진강 수해방지 합의서』 채택 (8차 경추위)
	한라산·백두산 관광단 교환	2차 4차(북측 한라산 관광단 파견)	백두산관광단(109명) 방북(2000.9.22~28) 북측 관광단 미실시
	남북어업협력 (동해어장)	8차	남측의견조율 어려움으로 미진전
	경제시찰단 파견	4차	북측 경제시찰단 방남(2002.10.26~11.3)
	개성공단	8차 /13차	시범단지 준공식 실시(2003.6.30)
	금강산 육로관광		
	남·북·러 철도연결· 가스관연결	5차회담 (01.9.18)	남·북·러 철도 전문가회의 개최(2004.4.28~30), 한·중·러 이르크츠크 가스관의 서해해저 통과 합의
	민간선박 상호영해 통과	5차/ 8차(해운 합의서)	제1차 해운협력 실무접촉 개최(2002. 11.18~20) 이후 4차례의 회담 개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채택(2004.6.4) 및 발효(2005.8.1)
	임남댐 공동조사	7차회담 (02.8.14)	임남댐 공동조사 실무접촉 개최(2002.9.16~18)
	경협장애 제거	16차	
북측 민간선박 제주해협 통과	15차	제5차 해운협력실무접촉에서 수정·보충합의서 채택(2005.8.8~10)	
⑤항 당국 회담 ·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재개	1차	판문점 연락업무 재개(2000.8.14)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협의·설치	3차	경추위 구성·운영 합의(4차회담, 00.12.16) 1차 경추위(00.12.27~30)이후 현재까지 15차 개최

남방	철도·도로연결 조사 군사당국자 회담	7차	제6차 군사실무회담 개최(2002.9.14)
	개성공단실무협의회	8차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 개최(2002.10.30~11.2)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 합의서 채택(2004.6.4), 발효(2005.8.1)
	사회문화협력 분과회의 구성 검토	11차회담 (03.7.12)	장관급회담에서 논의 중(12~15차)
	한반도 긴장완화 군사당국자 회담	2차	국방장관(1회), 군사실무회담(8회) 개최
	장성급회담	13차	제1차 장성급회담(2004.5.26)이후 군사회담 9차례 개최 제3차 장성급회담 미실시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운영	15차	동 회담 개최(2005.8.18~19)
	서해수산협력 실무협의회	15차	동 회담 개최(2005.7.25~27)

아홉째, 6·15 공동선언이후 특사 회담이 4차례(북측특사: 1회/남측특사: 3회) 개최되었다. 1차에는 김용순 특사의 방한(2000. 9)이 있었는데, 에너지지원문제를 비롯한 남북교류 활성화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2차는 임동원 특사의 방북(2002. 4)으로서, 6차 회담에서 결렬된 남북대화를 복원하고 남북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김정일 위원장의 합의가 발표됨으로써 성과가 있었다. 3차 또한 임동원 특사의 방북(2003. 1)이었는데, 북핵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활성화와 한반도 긴장고조 방지 차원에서 진행되었는데,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기는 다소 어렵다. 4차는 정동영 특사의 방북(2005. 6)이다. 이는 남북관

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 ‘제2의 6·15 시대’를 열었고, 북한으로 하여금 제4차 6자회담에 적극 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나. 경제회담

경제 분야에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각종 실무협의회(경협실무접촉, 경제협력제도, 원산지확인, 청산결제, 해운협력, 임진강수해방지, 개성공단, 철도도로 등)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남북경추위는 10차 회담에 이르는 과정에서 많은 사항을 협의했다.¹⁵⁷ 3대 경협사업(경의선·동해선 철도 및 도로연결사업, 개성공단 개발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산하에 개별 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4대 경협합의서(청산결제, 이종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절 및 투자보장)를 바탕으로 3통(통행·통상·통관)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회의와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과 3대 경협사업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실행된 사항이 많지 않았다. 다만 최근(10차 경추위회담) 북한의 태도가 변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먼저 북측의 요구사항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남북이 갖고 있는 경제요소를 결합하는 새로운 경협방식을 제안했다. 초기에는 남한의 지원에 초점

¹⁵⁷ 경추위는 6·15 공동선언 제4항(경협을 통한 민족경제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경협의 실질적 협의체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되어 구성된 이후,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기본적 방향이 설정되면, 이를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각각의 위원장은 남측 재경부 차관, 북측은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이 담당함으로써 경제관료들의 협의체 모습을 갖추고 있다. 통일부, 통일백서 2004 (서울: 통일부, 2004).

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공동사업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또한 북한이 제안한 내용도 많이 현실화되었다. 상호협력을 중시하고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뿐 아니라, 남측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하는 모습이다.¹⁵⁸

또한 북한은 식량지원 요청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2000년 쌀 30만 톤, 옥수수 20만 톤, 2002~2004년 쌀 40만 톤, 2005년 쌀 50만 톤을 남한으로부터 차관방식으로 지원받았다. 북한은 대북식량지원 요청을 2003년에는 제10차 장관급회담(4. 27~29)을 통해 제의했고, 5차 경추위(5. 23)에서 차관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005년에는 제15차 장관급회담(6. 21~24)를 통해 제의하고, 10차 경추위(7. 12)에서 차관합의서를 체결했다. 다만 2005년에는 제14차 장관급회담(5. 4~7)에서 핵문제 및 장성급회담 문제로 양측이 합의도출에 난항을 겪게 되자, 9차 경추위(6. 2~5)에서 차관 방식으로 식량지원에 합의하였다.

¹⁵⁸ 동용승, “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의내용 점검 및 향후 추진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05. 7), pp. 3~23.

<표 IV-5>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주요 합의내용

회의		합의내용
1차	2002.12.28~30 (평양)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결정
2차	2002.8.27~30 (서울)	①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연결 동시 병행추진 ② 개성공단 2002년내 착공 및 10월중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개성) ③ 임진강수방 현지조사를 11월 중 착수 및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10월 중 개최(개성) ④ 임남담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을 9.16~18 개최(금강산) ⑤ 투자보장 등 4개 경험 합의서를 빠른 시일 내에 각기 해당한 접적 절차를 밟아 발효 ⑥ 남측은 쌀 40만 톤(차관방식) 및 비료 10만 톤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제공 ⑦ 북측 경제시찰단은 10월 26일부터 남측 방문 ⑧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를 11.6~9 개최(평양)
3차	2002.11.6~9 (평양)	①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대책 강구 ② 개성공단 건설이 12월 하순에 착공되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 ③ 해운협력 및 북측 동해어장 공동이용 관련 실무접촉 일정 합의 ④ 빠른 시일 내에 4개 경험합의서 동시 발효 및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⑤ 남측 경제시찰단의 북측 방문이 실현되도록 노력 ⑥ 제4차 회의는 2003년 2월 초 서울에서 진행
4차	2003.2.11~14 (서울)	□ 합의문은 도출하지 못하고 회담 마무리 ○ 남북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사업,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등 이미 합의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 대책을 세워 계속 협의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를 4월 중 평양에서 개최
5차	2003.5.19~23 (평양)	①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 ② 개성공단 건설 ③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④ 경험 제도적 장치 마련 - 4개 경험합의서, 해운합의서 및 개성공단 관련 통신·통관·검역 합의서 등을 필요절차를 거쳐 조기 발효 ⑤ 금강산 관광 활성화 ⑥ 남측은 북측에 쌀 40만 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 ⑦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8월 하순, 서울)

회의		합의내용
6차	2003.8.26~28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② 개성공단 개발 ③ 금강산관광 ④ 경험 제도적 장치 마련 ⑤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⑥ 직거래방식 확대 ⑦ 경제시찰단 상호 방문 ⑧ 식량분배현장 확인 ⑨ 제7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10월 하순경 평양에서 개최
7차	2003.11.5~8 (평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철도·도로 공사현장 상호방문 실시 ② 개성공단 건설 ③ 청산결재 이행 ④ 해운합의서 및 임진강 수해방지 ⑤ 직거래 확대 등 협의를 위한 사무소 개설 ⑥ 경험관련 회의 ⑦ 제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004년 3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8차	2004.3.2~5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성공단 개발 ② 철도·도로 연결 ③ 금강산관광특구개발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확정, 하위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적극 협력 ④ 직거래 확대를 위한 경험협의사무소를 개성공단개발사무소와 동시에 개설·운영, 민간차원의 경험활성화에 적극 협력 ⑤ 임진강 수해방지 합의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채택, 4월부터 현지조사 착수 ⑥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를 6월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
9차	2004.6.2~5 (평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성공단 건설 ② 철도·도로 개통 ③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빠른 시일내에 채택·발효 ④ 기합의·가서명된 합의서 조속 발효절차 진행 및 후속조치 마련 ⑤ 북측에 쌀 40만 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 ⑥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회의		합의내용
10차	2005.7.9~12 (서울)	①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 추진 ② 개성공단 내에 남북 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 ③ 개성공단 15개 시범공장 건설을 2005년 안에 끝내고, 통행 절차 개선, 본 단지 분양 등에 적극 협력 ④ 남북 수산협력실무협의회 구성, 어업협력 문제들을 협의 해결 ⑤ 경의선·동해선 2005년 안으로 철도 개통식 ⑥ 북측 민간 선박들의 제주해협 통과 8.15를 계기로 실현, 제5차 해운실무접촉 개최 ⑦ 임진강 수해방지 ⑧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9개 합의서들을 8월 초까지 발효 ⑨ 쌍방의 경제시찰단을 경제협력 대상들이 협의되는 데 따라 11월중 상호 교환 ⑩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 과학기술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문제를 향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⑪ 북측에 쌀 50만 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 ⑫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

<표 IV-6> 1~10차 경추위 주요 합의사항 이행여부

주요 합의사항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비고
①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관련		○	○	△	○	○	○	○	○	○		진행 중
② 개성광안 걸선 및 개발 관련		○	○	△	○	○	○	○	○	○		진행 중
③ 임진강 수해 방지 사업 관련		○		△	○	○	○			○		협의 수준
④ 경협의 제도적 장치 마련		○	○		○	○			○	○		미 발효
⑤ 금강산 개발 관련					○	○		○				안정화단계 진입
⑥ 경협사무소 개설관련						○	○	○	○	○		협의 중
⑦ 쌀 차관 제공		○			○				○	○		실시
⑧ 경제시찰단 관련		○	○			○			○	○		북측만 실시
⑨ 해운·어업 관련			○				○			○		부분적 실시
⑩ 기타												
- 식량분배 현장확인						○						
- 청산결제								○				
- 새로운 방식 경협사업										○		
- 과학기술협력										○		

다. 군사회담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은 6·15 공동선언의 5개 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장관급 군사회담을 개최한 바 있고, 각종 군사회담을 진행해왔다.

처음으로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2000. 9. 25~26, 제주도)은 6·15 선언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막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하였다. 또한 향후 민간인 왕래와 교류·협력에 따른 군사적 문제와 경의선 철도 연결 및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한 안전보장 조치를 협의한다는 구체적인 사항에도 합의하였다. 그리고 2차 국방장관회담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2차 회담은 남측의 지속적인 개최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호응하지 않아 아직까지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제1차 국방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경협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급 군사회담(2000. 11. 28, 판문점)이 시작되었다. 2005년 10월 현재까지 각종 군사회담이 총 33회 진행되었다. 특히 5차 군사실무회담(2001. 2. 8)에서는 ‘남북 공동관리구역’ 설정 등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및 경의선 철도·도로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41개 항의 합의서를 타결했다. 8차 군사실무회담(2003. 9. 17)에서는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의 보충합의서』를 채택하여 남북경협을 위한 철도·도로 복원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했다. 결국 북한이 군사회담에 호응해 나온 것은 결국 북한의 경제적 이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군사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도 변하지 않은 태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제2차 서해교전(2002. 6. 29)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판문점 장성급회담 시(2003. 3) 북한대표는 판문점 참모장교간 정기접촉을 중단하고, 정전협정과 관련한 새로운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과거처럼 보복전략과 더불어 정전협정 무력화시도와 한국배제전략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다.¹⁵⁹

한편 북한은 2004년 들어와 장성급 회담(1차: 5. 26 금강산, 2차: 6. 3~4 설악산)에 나와, NLL의 무력충돌 방지대책 및 군사분계선 내 선전·비방행위 금지 등 4개 항의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과 관련된 사항에 합의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그러나 장성급 회담이후 북한의 NLL침범 횟수는 합의이전보다 더 늘어났다. 북한은 여전히 군사적 측면에서의 남북관계는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원하는 시기에 긴장과 긴장완화를 반복하기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¹⁶⁰

결국 북한은 1번의 국방장관회담과 2번의 장성급회담 그리고 수차례의 군사실무회담에 호응함으로써, 한반도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남한 조사당국과의 본격적인 논의는 회피한 채,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경협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군사회담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¹⁵⁹ 이수석, “6·15 공동선언이 북한의 대남정책에 미친 영향,” 남북교류협력과 북한의 변화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2005. 4. 15), pp. 81~83.

¹⁶⁰ 북한합정의 NLL 침범시 남한해군이 경고용 함포사격 가한 것을 문제 삼아 2004년 7월 19일로 예정되었던 장성급 군사3차 실무회담에 북한은 불응하였다.

<표 IV-7> 군사회담 주요 합의내용(2003~2005)

회담명 (일자)	합의사항	이행사항 (일자)	미이행 사항
남북 군사 실무 회담 (00.11.28 -03.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채택 ○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채택 ○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의 보충합의서」 채택 ○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경비(차단)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서 발효(2002.9.17), 이행 ○ 합의서 발효(2003.1.27), 이행 ○ 합의서 발효(2003.9.17), 이행 ○ 합의서 발효(2003.12.23), 이행 	
제1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04.5.26)	○ 제2차 장성급군사회담 6.3 설악산 개최 합의	○ 동 회담 개최(2004.6.3)	
제2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04.6.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 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채택 - 6.15부터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 시행 · 국제상선공통망 활용 및 기류·발광 신호 제정 · 불법조업선박 관련 정보교환 · 8.15부터 통신연락소 설치·운영 - 6.15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8.15까지 선전수단 3단계로 나누어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서 발효(2004.6.4), 이행 - 6.15부터 국제상선공통망 활용, 교신 - 6.15부터 불법조업선박 관련 정보교환 진행 ○ 6.15부터 군사분계선지역 선전활동 중지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제1차 실무대표 회담 (04.6.10 ~12)	○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 합의서」 채택	○ 합의서 발효(2004.6.12), 이행 -통신수단별 운용시험 실시(2004.6.14)	

회담명 (일자)	합의사항	이행사항 (일자)	미이행 사항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제2차 실무대표 회담 (*04.6.28 ~30)	○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 7.5 개최 합의	○ 동 회담 개최(2004.7.5)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실무대표 회담 수석대표 접촉 (*04.7.5)	○ 2단계 선전수단 제거작업 7.6 착수 합의	○ 2단계 선전수단 제거작 업 착수(2004.7.6)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제3차 실무대표 회담 (*05.7.20)	○ 서해상의 우발적 총동발지를 위한 통신연락소 8.13 운영합의 ○ 3단계 지역에 대한 선전수단 제거 7.25~8.13 진행하기로 합의	○ 서해통신연락소 통신선 연결(2005.8.10)후부터 운영개시(2005.8.13) ○ 3단계 지역에 대한 선전 수단 제거 완료(2005.8. 13)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제4차 실무대표 회담 (*05.8.12)	○ 별도 합의 없이 3단계 지역에 대한 선전수단 제거 결과를 확인	○ 3단계 지역에 대한 선전 수단 제거 완료(2005.8. 13)	

라. 사회회담

사회분야에서는 적십자회담, 체육회담(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 2003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용천재난 구호회담, 이산가족면회소 추진회담 등이 진행되어왔다.

북한은 이산가족 재회장소를 선택할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기초하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김 위원장이 “평양을 울음 바다로 만들지 마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이다.¹⁶¹ 따라서 북한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에 합의하였다.

또한 북한은 남한이 국군포로 문제 등을 꾸준히 문제 제기한 데 대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남한은 제2차 장관급회담(2000. 8. 29~9. 1)에서 완곡하게 처음 거론한 후, 제3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전체회의 시 발언(2003. 1. 22)¹⁶²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12차 장관급회담(2003. 10. 14~17)에서 “국군포로 문제는 정전협정에 따른 송환으로 종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리고 제13차 장관급회담 전체회의 시 남한의 강조발언(2004. 2. 3~2. 6)¹⁶³이후, 북한은 제15차 장관급회담(2005. 6. 21~24)에서 제3항¹⁶⁴에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제6차 적십자회담(2005. 8. 23~25)에서 전쟁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해 ‘군인, 민간인 구분없이 전시행불자’로 정의하고, ‘생사확인’을 일반 이산가족 테두리 내에서 일반화하여 포괄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후 남북한은 제16차 장관급회담(2005. 9. 13~16)에서 재합의하였다. 결국 북한은 처음에 완강하게 이 문제를 거부하였으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간접적인 표현의 합의에 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¹⁶¹ 새터민 인터뷰, 2005년 11월 3일.

¹⁶² “이번 회담에서 전쟁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확인 문제도 협의하여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¹⁶³ “전쟁기간 및 그 이후 행불자의 생사주소 확인사업을 조속히 착수하고 서신 교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¹⁶⁴ “제6차 적십자회담을 8월중에 개최하여 전쟁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한다.”

한편 6·15 공동선언 이후 사회단체·종교·학술·문화·방송·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화교류사업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어왔다. 특히 2005년에는 6·15 5돌과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남북공동행사가 남북해외 민간단체들과 더불어 남북당국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당국과 민간이 함께 하는 새로운 남북교류모델이 정립되었다. 연도별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현황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¹⁶⁵ 그런데 이 같은 내용과 추세를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논리에 비추어 반성해 보면, 하층부 통일전선사업이 상층부 통일전선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질·량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협상행태 결정요인

가. 협상관 : 특수협상관 지속, 일반협상관 점진적 수용

(1) 지속

6·15 공동선언 이후에도 북한은 특수협상관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선 남조선혁명, 후 공산화통일’의 통일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로동당 규약을 보면,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립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

¹⁶⁵ 협력사업 총 80건: 2000년(5건), 2001년(6), 2002년(7), 2003년(13), 2004년(16), 2005년(33).

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당규약은 세 차례에 걸쳐 개정(1961. 9. 18, 1970. 11, 1980. 11)되었으나, 최종목적(공산주의사회 건설)은 한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다만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북한 지도부는 1980년대 중반까지 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점차 그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정책은 남한정부와 주민들 간의 괴리상태를 전제로 한 ‘체제전복’적 목적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체제에 대한 비판세력의 확산을 통한 ‘체제약화’적 목적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은 대남전략과 연방제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김일성 유혼을 받들고 있기 때문에 혁명적 대남관과 협상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 8월 12일 방북한 한국언론사 사장단과의 대화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현실주의에 기초한 전사적 협상관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시리아와 이란에 미사일을 판매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나라가 작을수록 자존심을 굳게 세우고 열강 대국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자신의 힘의 원천을 일심단결과 군력 두 가지로 강조하면서, “외국과의 관계에서 힘도 군력에서 나오고…다른 나라와 친해도 군력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¹⁶⁶

김정일 위원장은 이미 1970년대 중반 “조국을 통일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것”을 ‘(조선)혁명의 당면한 지상의 과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¹⁶⁷ 또한 1980년대 초반에는

¹⁶⁶ 『중앙일보』, 2001년 8월 14일, pp. 3, 4.

¹⁶⁷ “올해 당사업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가지 중심적 과업에 대하여(도당책임비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조국통일은 수령님께서 제일 심려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령님대에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은 하나’이기 때문에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여야” 함을 천명하고, ‘조국통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은 애국의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그는 ‘모든 일꾼들이 언제나 조국통일을 생각하며 일해야’ 하며, ‘당사업’, ‘경제사업’, ‘대외사업’ 모두가 ‘조국통일’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⁶⁸ 이 같은 입장을 김정일은 1990년대에도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¹⁶⁹

그리고 북한은 1997년에 1970년대에 제시한 ‘조국통일 3대원칙’과 1980년대에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1990년대에 제시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묶어 향후 김정일정권의 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로 제시하였다.¹⁷⁰ 2000년대 들어와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구호 하에 북한인민 중심의 ‘민족대단결’과 ‘민족공조’ 구호 하에 노동자 중심의 ‘통일전선’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¹⁷¹

1976년 1월 1일),” 김정일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233.

¹⁶⁸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1982년 9월 9일),” 김정일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245.

¹⁶⁹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는것은 우리 민족최대의 소원이며 우리앞에 나선 절박한 과업입니다.…우리는 어떻게 하나 1990년대를 조국통일의 연대가 되게 하여야 하며 수령님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합니다.” 김정일,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1992년 1월 1일),” 김정일선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263.

¹⁷⁰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1997년 8월 4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344.

¹⁷¹ 장석, 김정일장군 조국통일론연구 (평양: 평양출판사, 2002), pp. 220~236.

(2) 변화

그러나 변화의 측면도 있다. 북한은 199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출범을 전후하여 남한과 서방자본주의국가에 대한 인식에 있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인식변화가 북한에게 일반협상관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시작하였고, 6·15 남북공동선언이 그 폭을 넓혀주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후반 당 총비서와 국방위원장 추대에 즈음하여, 김정일은 대외개방 지향적인 모습과 대남 유화적인 태도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김정일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연대성 강화보다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의식하여 주체성 강화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적화통일을 의미하는 계급성보다는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시사하는 민족성을 강조하였다.¹⁷² 남한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전략적 차원에서나마 바뀌기 시작한 면이 있다. 북한은 남한을 이데올로기적 입장에서 흡수통일의 주체로 보았다. 그런데 6·15 공동선언을 전후하여 실리적 입장에서 체제유지의 조력자로 보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⁷³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정당단체 연합회의」(1998. 2. 18)를 통해 김대중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을 기대하는 편지를 채택하였고, 「김정일서한」(1998. 4)¹⁷⁴을 통해 거듭 대북 유화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은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1999. 2. 3)를 통해 「남북기

¹⁷²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1997년 6월 19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 306~333.

¹⁷³ 김정일,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1998.4.18),” 김정일선집 14, pp. 424.

¹⁷⁴ 위의 글, pp. 412~451.

본합의서」 이행문제, 이산가족 고통해소 문제, 교류협력 촉진 문제 등을 기본의제로 하는 「남북고위급 정치회담」을 하반기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대남편지를 채택하였다. 김정일은 동시에 남한과의 교류협력에서 나타날 후유증을 막기 위한 ‘모기장 개방’론도¹⁷⁵ 이미 제시하였다.

이 같은 북한의 변화는 더 거슬러 가면, 198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이 발표한 남북관계와 통일정책, 군비축소 주장문건¹⁷⁶들을 살펴볼 때, 북한의 입장이 냉전기와 달리 수세적 차원에서 공존을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대남 우세적 상황에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김정일은 남북교류가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 합작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강조하였다.¹⁷⁷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북한은 ‘먹고 먹히우는’ 방식의 통일을 지양하고, 남북한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인정한 바탕에서 연방제식 통일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단계적 미군철수’와 ‘단계적 축감’ 등도 수용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북한은 냉전기에 ‘남조선혁명론’이나 ‘3대 혁명역량 강화

¹⁷⁵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우리가 자본주의의 포위속에 있는 것만큼 사회주의제도를 옹호보위하기 위하여서는 모기장을 든든히 쳐야 합니다.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절대로 적들의 자유화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정일,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 p. 266; 김정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할데 대하여(1994년 5월 24일),”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411~412.

¹⁷⁶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보장 대책에 대하여”(1988. 11);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1990. 5); 남북고위급회담 관련 각종 문건;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1993. 4. 7).

¹⁷⁷ “우리 에- 남북교류에서 첫번째가 뭐냐 하면 우선 문화교류다, 문화합작이다. 그렇게 하는데 내 타산이, 내 타산이 그렇습니다.” 최은희·신상옥, 내레 김정일입네다 (서울: 행림, 1994), p. 94.

노선'에 기초하여 공세적 통일을 추진하던 모습으로부터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군비축소 등 방어적 공존에 점차 더 많은 비중을 두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이후 북한은 조국통일을 위해 남북대화 협상을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¹⁷⁸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직후 6·15 공동선언이 “민족자주통일선언으로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조국통일을 이루자는 것을 온 세상에 천명한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강조하였다. 200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북한은 ‘민족공조’¹⁷⁹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거듭 강조하였다.¹⁸⁰ 2003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북한은 “민족의 공동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 것을 여기에 복종시키며 민족자주, 애국애족의 이념에 기초해 민족대단결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¹⁸¹ “민족공조 실현은 남북관계 발전의 필연적인 요구”¹⁸²라고 주장하면서 대남정책 기조가 민족공조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2004년에는 ‘조국통일운동 과업’의 해로 제시하고, 민족공조에 기초해서 조국통일 대강인 6·15 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이행할 것을 강조하였다.¹⁸³ 그리고 2005년 신년공동사설에는 민족공조¹⁸⁴를 민족자주 공조·반전평화 공조

¹⁷⁸ 장석, 김정일장군 조국통일론연구, pp. 220~236.

¹⁷⁹ 민족공조 용어는 1994년 4월 한국의 「전국민주화교수협의회」에서 처음으로 사용했고, 이를 ‘민민전’ 방송 이외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한 것은 2001년 1월 21일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가 7천만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였다. 전현준, 북한의 대남정책 특징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 28.

¹⁸⁰ 로동신문, 2002년 1월 1일.

¹⁸¹ 로동신문, 2003년 1월 1일.

¹⁸² 로동신문, 2003년 1월 5일.

¹⁸³ 로동신문, 2004년 1월 1일.

¹⁸⁴ 북한이 민족공조를 세분화하여, 경제와 사회문화교류에 대해서는 ‘남북공조’

· 통일애국 공조 등 3대공조로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¹⁸⁵ 그리고 한반도 핵전쟁의 위협을 부각시키며 그 근원이 주한미군에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반드시 철수해야 함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2002년 10월 농축우라늄 핵무기개발 프로그램 의혹문제가 부각되기 전까지는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당당하게 받고, 더욱 확대하기 위해 원조(援助) 민족공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북핵문제가 심화되면서부터는 북핵위기를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아닌, 미국과 ‘조선민족’의 갈등으로 규정하고, 반미(反美) 민족공조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4년 노무현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핵심을 나름대로 파악한 이후부터는 통일(統一) 민족공조도 함께 강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북한은 남북대화에 대한 남한의 입장과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이 대화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회의적이며, 될수록 대화의 진전을 늦추려는 입장과 자세를 갖고 있고, 일시적 선전효과만을 노리는 일관성 없는 입장과 자세 또한 갖고 있으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비판한다.¹⁸⁶

를, 한 차원 높은 통일문제를 다루는 근본원칙을 의미할 때는 ‘우리민족끼리’를 사용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창현, “4차 6자회담 휴회 이후의 남북관계 전망,” 6자회담으로 본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전망 (개혁전략연구소 세미나 발표문, 2005. 8. 25.), p. 25.

¹⁸⁵ 북한은 한·미·일 공조폐기를 ‘민족자주공조로, 미군철수와 핵문제 해결에서의 협력을 ‘반전평화공조’로, ‘민족공동 리익과 번영’을 위한 남북경협 확대를 ‘통일애국공조’로 언급하였다. “전당·전군·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로동신문, 2005년 1월 1일 강충희, 조국통일 3대공조 (평양: 평양출판사, 2005).

¹⁸⁶ 장석, 김정일장군 조국통일론연구, pp. 222~223.

나. 협상상황 : 전기(2000~2002) 북한의 경제난 심화와 안보난 지속 후기(2003-05) 한미마찰 점증과 남남갈등 심화

첫째,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합의 당시 북한은 경제 중시적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협상상황에 처해 있었다. 1990년대 중반이후 ‘고난의 행군’ 기간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은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1995년 당원 5만 명을 포함하여 50만 명이 굶어죽었고, 1996년에는 100만 명이 아사한 것으로 황장엽 전 비서는 전하였다.¹⁸⁷ 북한 당국 또한 1990년대 북한인 평균 수명이 6년 이상 떨어졌으며, 1995~1998년 사이에 22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공식 발표한 바 있다.¹⁸⁸

이런 상황 가운데 북한은 당 중심·군부 중시의 위기관리체제를 통해 체제안정을 꾀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남북대화를 거부한 채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을 통한 대외관계 개선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1998년 북한은 최악의 체제위기 국면은 벗어났다.¹⁸⁹ 그러나 총체적 불안정 요인은 상존하였다. 예컨대 식량난의 가중과 만성적인 경제침체, 주민의 체제이탈현상 확대와 탈북자의 증가, 관료의 보신주의와 부정부패 증가, 과중한 군비증강의 부담 등이 그것이다. 게다가 남북간 국력격차도 경제적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격해졌다. 명목 국민소득(GNI)은 약 27배, 국민 1

¹⁸⁷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한울, 1999), p. 286. 황장엽은 아사자 통계가 중앙당 조직지도부에서 파악한 통계로서 극소수 간부만이 알고 있는 정확한 통계라고 언급하였다. 황장엽,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월간조선 (2000. 12), p. 184.

¹⁸⁸ <<http://www.nytimes.com>>. 2001년 5월 북한 외교부 최수현 외무성 부상이 유엔아동기금회의에서 보고한 자료.

¹⁸⁹ 북한은 1997년에 ‘엄중한 전쟁위험이 제거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새해에 총진군을 다그치자,” 노동신문, 1998년 1월 1일.

인당 GNI는 약 13배, 무역규모는 약 128배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북한은 1990년대 후반이후 자발적이기보다는 현실추수적 차원에서 수동적으로 조심스럽게 변화의 조짐을 보여 왔다. 1998년 강성대국 기치 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의 공식적 출범과 함께 헌법개정을 통해 가격·수익성 등 시장경제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가 하면, 관료들을 서방에 파견하여 자본주의 경영방식을 배우도록 하였다. 또한 북한은 2001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실리보장’ 중시의 ‘신사고’를 강조함으로써 의식전환·기술개혁·산업구조개편을 도모하였고, 대외경제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가공무역법·저작권법 등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2002년 들어와 북한은 「경제관리개선」 조치(7. 1)를 통해 대내 경제개혁을 진행시키고, 특구 확대 지정(신의주: 9. 12, 금강산: 10. 23, 개성: 11. 13)을 통해 대외 경제개방을 강화하였다. 또한 대러 정상회담(8. 20~24)·대일 정상회담(9. 17)과 대남관계 진전을 통해 대미 접근기반을 구축하였다. 북한은 이 같은 일련의 변화된 조치들을 통해서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¹⁹⁰을 제고하기 위해 유효성과 연대성의 강화를 꾀했고, 당면한 경제난과 안보난을 타개하고자 하였다.¹⁹¹ 다시 말해 북한은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단기

¹⁹⁰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당면 목적은 김정일 정권의 유지에 있다.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은 다음 4가지 요소에 의해서 제고된다. ① 정통성 :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사상적 공감, ② 유효성 : 경제난(에너지, 식량, 의화, 생필품) 해소를 통한 주민 불만 해소, ③ 통제성 : 국가보위부 및 인민보안성에 의한 공포와 통제력, ④ 연대성 : 사회주의 동맹국인 중국의 지원과 구 동맹국 러시아의 협력 그리고 새로이 관계정상화를 이룬 EU 국가들과의 관계강화이다. 이 가운데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은 유효성이 저하되는 상황이다. 허문영, 정책연구, 통권 132호 (서울: 국가안보정책연구소, 1999), pp. 172~186.

¹⁹¹ 허문영, 북한의 핵개발계획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p. 39~47.

적으로는 경제난을 해소하고, 중기적으로는 대미관계를 개선하여 체제보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 성격 변화 및 철수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공산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북한의 정책 변화는 전술적 변화로 폄하하기에는 너무 큰 변화이고, 본질적 변화로 규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따라서 북한의 정책변화는 전략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2000. 6. 15)은 이 같은 전략적 변화의 현실적 발현이고, 북·러/북·중 및 북·일 정상회담(2002. 9. 17)과 각종 개혁·개방조치는 이의 적극적 추진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2000년 6월 북한은 드디어 남북정상회담을 받아들이고,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하였는데, 그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경제난 해결과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경제적 실리 확보용이다. 북한의 임시변통 자원조달 방식이 한계에 도달하였다. 그 동안 북한은 식량난과 경제난을 국제지원과 벼랑끝 외교를 통한 식량지원 강요정책과 중국으로부터의 원조를 통해 임시변통해 왔다. 그러나 국제기구 및 중국의 원조피로와 벼랑끝외교의 역기능으로 인해 북한은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해외원조가 격감될 경우, 김정일의 권위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므로 북한은 단·장기 대책 차원에서 남북대화에 임하여, 대규모 경제협력사업으로부터 최대한의 실리를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외관계 개선용이다. 대미관계에 있어, 북한은 경제적 실리획득과 정치·군사적 안전보장 확보 차원에서 적극 접근하였다. 그러나 대선 기간 중에 있었던 미국내 반발이 적지 않았다.

또한 대일관계에 있어, 북한은 일본인 납치 및 미사일 개발문제 등으로 수교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북한은 남북정상 회담을 통해 평화의지를 선전함으로써 국가이미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대미·일 협상에서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김정일 체제의 정당성 강화용이다. 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일의 영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김정일 체제를 공고화하고, 내부결속을 강화할 수 있었다.¹⁹²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이미지를 ‘통일지도자’로서, 그리고 전 세계에 생중계된 공항영접과 환송을 통해 ‘평화지도자’로서, 북한 경제난을 타개하는 남북경협을 통해 ‘경제지도자’로서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이미 북한은 대남방송을 통해 김정일을 ‘통일대통령’으로 호칭한 바 있다.

요컨대 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일을 민족적 영도자로 부각시키는 한편, 남한으로부터 경제지원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 경제회생의 기회로 활용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대미·일 관계 정상화를 가속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⁹³ 아무튼 이 같은 상황과 북한당국의 의도는 6·15 공동선언 이후부터 최근까지 수년 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2002년 세계식

¹⁹² 북한은 남북관계개선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대남적개심 약화를 우려하여 “주도권은 우리가 쥐고 있다…남측 수행원들과 인민들 모두가 김정일 위원장을 흠모하고 통일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남쪽에서 모두 다 갖다 바친다”는 논리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¹⁹³ 김대중 전 대통령도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한 이유는 한·미 관계 이간정책의 실패,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가의 한반도 긴장완화에 대한 압력, 한국의 햇볕정책에 대한 신뢰 증가를 들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의 절망적인 경제난을 들었다. 즉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이 절대 필요한데, 김정일 위원장은 남한과의 관계개선 없이 외국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음을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돈 오버도퍼, 두개의 한국 (서울: 중앙일보사, 1998).

량계획(WFP)의 존 파월(John Powell) 아시아 지국장은 북한주민의 1/3인 640만 명이 외부의 식량지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1~2년간 추가지원이 없게 될 경우, 1990년대 중반과 같은 대규모 아사를 다시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¹⁹⁴

둘째, 2001년 1월에 출범한 부시(George W. Bush) 공화당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구사하자, 북한은 안보중시의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클린턴 민주당정부 시절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던 남북대화가 2001년 상반기에 들어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하반기에는 결국 중단되고 말았다. 부시 대통령이 대북정책의 전면적 검토를 발언한 이후 북·미 대화와 북·일 대화가 중단된 것이다. 남북회담 또한 2001년 11월 제6차 장관급회담이 결렬된 이후 중단되었다. 그런데 2002년 3월에 들어와 북한은 남북대화 재개 의사를 표명하고, 4월 임동원 특사 방북과 김정일 위원장 면담을 수용하였다. 북한이 강경자세에서 대화자세로 전환하게 된 배경에는 심각한 경제난을 해소하려는 의지와¹⁹⁵ ‘아리랑 축전’(4. 29~6. 29)의 성공적 개최와 부시 행정부의 대북압박전략에 따른 위기감을 해소하려는 욕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북한은 9개월 만에 재개된 제7차 장관급회담(2002. 8. 12~14, 서울)과 1년 8개월 만에 재개된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2002. 8. 27~30)를 통해 쌀 40만 톤과 비료 10만 톤의 대북지원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적 실리를 챙길 수 있었다.

¹⁹⁴ 조선일보, 2002년 5월 6일, p. 8.

¹⁹⁵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와 식량지원 해준데 대해 인민을 대표해 감사하고 올해도 우리측 사정이 어려우니, 식량과 비료 그리고 전력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임동원 특사에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영중, “햇볕정책 최후의 빅카드가 무르익고 있다,” 월간중앙 (2002. 5).

셋째, 2003년 2월 보수적인 이회창 후보가 낙선하고,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남남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한사회 내부에서는 북한을 보는 시각과 새로운 남북한 화해협력 방법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예컨대 대북 상호주의,¹⁹⁶ 속도조절론,¹⁹⁷ 대북지원(‘퍼주기’),¹⁹⁸ 통일방안¹⁹⁹ 등이 주요 쟁점이

¹⁹⁶ 보수 진영은 ‘티트 포 태트’(tit for tat) 방식으로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방법으로 나도 상대방을 대하는 철저한 상호주의 또는 기계적 상호주의를 주장한다. 그러나 진보 진영은 ‘선제적 양보’ 방식으로 우세한 쪽이 먼저 양보함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안심시킨 이후 차후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탄력적 상호주의를 주장한다. 즉 협상이론에서 말하는 ‘그리트(grit) 효과’ 즉 ‘단계적 긴장완화 효과’를 발생시켜 남북사이의 화해를 촉진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¹⁹⁷ 보수 진영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여전히 남침의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이들은 한반도의 표면적 화해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국가보안법의 기본 틀과 튼튼한 군사력 유지에 힘써야 하며, 수십 년의 불신을 씻고 믿음을 쌓으려면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진보 진영은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미 연합군이 북한에 군사적 위협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이들 진보적 학자들은 군사비나 전투력을 대비해 볼 때 북한이 열세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남북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당연하며 오히려 늦게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¹⁹⁸ 보수 진영은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에게 ‘일방적인 시혜성 지원’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에 기초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임을 주장한다. 진보 진영은 북한 동포의 심각한 경제난을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한다. 현실적 차원에서 볼 때 남북 사이의 긴장을 크게 완화시키는 평화 비용이 될 뿐 아니라, 미래의 안목에서 볼 때도 장차 발생할 통일비용의 부담을 절감케 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¹⁹⁹ 보수 진영은 대한민국의 주권독립 상황이 위협스럽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들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높은 단계의 연방제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김일성 주석이 내세웠던 고려연방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 진영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한의 남북연합에 비슷한 것이므로 연구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이들은 6·15 공동선언 제2항이 곧바로 연방제로 들어가지는 것이 아니라,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모두 통일을 향한 과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아 거기에 기초해 통일노력을 기울이자는 내용의 합의임을 강조한다.

다. 이 같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기존의 여·야갈등/이념갈등/지역갈등과 맞물려 증폭되었고,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 기득권 정치세력과 기성세대의 몰락과 신진 386세대의 등장 에 따른 세대교체로 인해 남한사회의 분열양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게다가 국제적으로 동북아 질서재편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의 갈등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마찰과 주한미군 재편문제로 인해 한반도 위기상황이 악화되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경제적 실리 확보와 더불어 대미 협상력 강화(반미) 그리고 대남 연방제 통일사업의 기반 확보를 함께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으로서는 통일전선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한 것이다.

다. 협상능력 : 최고책임자 개입 지속과 통전부 확대 및 실행기관 다변화

(1) 최고책임자 영향력 지속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남북대화에서 결정적인 합의가 필요할 때, 최고책임자의 영향력이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북측의 연방제(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과 남측의 연합제(남북연합)가 충돌하고, 동 선언의 서명주체와 관련하여 북한의 경우 헌법상 국가대표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을 고집함으로써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 때, 김정일 위원장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시하여 제2항 합의를 도출하고, 직접 서명함으로써 물꼬를 튼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2002년 4월 남북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방북한 임동원 특사를 맞이하여 6·15 공동선언 이행문제와

관련해 북한협상대표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²⁰⁰ 김정일 위원장은 백화원을 직접방문 면담하여 6개 항의 남북공동보도문을 합의·발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2002년 9월 14일 남북 군사 실무회담에서 경의선 및 동해선 공사착공과 관련한 군사보장합의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북측은 ‘최고사령관(김정일 위원장)’의 지시라며,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문안을 만들자고 주장하면서 남측보다 더 열의를 갖고 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²⁰¹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은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기간(2000. 8. 29~9. 1) 중 박재규 장관을 만난 이후 장관급회담에 나온 남측대표단을 접견하지 않음으로써 회담에 대한 간접 통제와 더불어 절대적 위상의 하락을 방지하는 동시에 북한 회담대표의 운신 폭을 넓혀 주고자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대통령특사 임동원 특보에 대해서도 김정일 위원장은 2002년 4월 1차 특사방북 때에는 5시간에 걸쳐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2003년 1월 2차 특사방북 때에는 지방 현지도 명분하에 헌법상 국가대표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케 하였고, 답신 친서만을 보낸 바 있다.²⁰² 한편 2005년 6월 정동영 특사의 방북 시, 김정일 위원장은 면담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200KW의 전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6자회담 출석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2) 통일전선부의 확대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대화를 주도하는 통일전선부를

²⁰⁰ 임동원 특사와 김용순 노동당 대남 비서의 접촉, 김보현 국정원 3차장과 김완수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의 실무접촉에서 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²⁰¹ 조선일보, 2002년 2월 16일.

²⁰² 통일부, 통일백서 2003, pp. 77~84.

확대·개편하였다.

먼저 통일전선부 인원을 증가시켰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통일전선부 인원은 1,600여명이었으나, 이후 2004년 말까지 2,500명 정도로 900여명 가량 외부에서 충원한 것으로 알려졌다.²⁰³ 이 가운데는 역사학자, 철학박사, 정치경제학박사, 문학박사, 작가, 시인 등이 포함된다. 그 목적은 점증하는 각종 남북대화 와 교류에 적극 대비하는 동시에, 북한의 민간인들을 대남접촉에서 철저히 분리시켜 남쪽 자본주의 바람이 북쪽에 영향 미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있다.

통일전선부²⁰⁴ 산하 기구도 조정 또는 신설하였다. 통일전선부 본부에는 교양과, 교류1·2과, 연고자과, 대남과, 정책과, 청년1·2과, 미주과 등이 있다. 통일전선부 산하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²⁰⁵ 조국통일연구원(구 남조선연구소),²⁰⁶ 26연락소, 101연락

²⁰³ 새터민 인터뷰, 2005년 6월 8일; 새터민 인터뷰, 2005년 10월 3일.

²⁰⁴ 통일전선부는 통일전선공작과 남북대화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대남사업의 핵심부서로서 1978년 설치되었다. 남북회담, 해외교포공작사업, 대남심리전 및 통일전선 공작사업, 국내 좌익운동권 지도 등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²⁰⁵ 조평통은 1961년 5월 13일 결성된 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 당의 통일·대화 노선관철과 정책수행 및 통일전선 형성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773. 조평통은 통일전선부의 가조직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국내인사 및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통일전선 형성, 남한내 친북여론 선전공세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조직으로는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참사실, 서기국이 있고, 서기국 산하에 조직부, 선전부, 회담부, 조사연구부, 총무부 및 자료종합실 등이 있다.

²⁰⁶ 1959년 12월 노동당 문화부 산하 '남조선연구소'로 신설된 이후, 1978년 1월 통전부 산하기관으로 흡수되었으며, 1991년 남한에 민족통일연구원이 통일부 산하에 신설되자 1992년 '조국통일연구원'으로 개칭되었다. 원장·부원장 밑에 종합정세연구실과 종합편집실이 있으며, 남한의 정치·경제·사회·군사 등 제반 분야 및 남한 주요인물 그리고 한반도 주변국 정세분석 업무를 수행하며, 남조선문제 연구 (격주간지) 등을 발행하고 있다. 약 150여명의 학자들이 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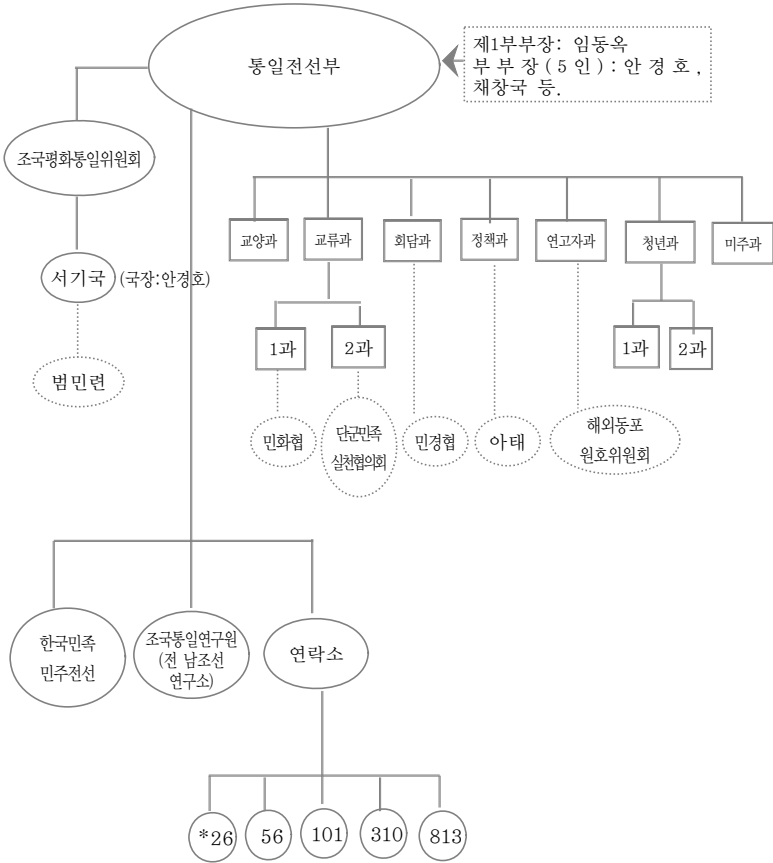
소, 813연락소, 310연락소, 56연락소,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²⁰⁷ 등이 있다. 그리고 다양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사업특성별로 구분하여 전담기구를 가조직화하여 산하에 배치하였다. 예컨대 남한의 언론기관이나 문화·예술단체들과의 교류는 물론 남한 NGO 단체들의 대북사업을 비롯한 사회문화사업 일반을 민족화해협력위원회(민화협)²⁰⁸에서 총괄적으로 맡도록 하였다. 그 동안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²⁰⁹가 담당하던 일부사업도 민화협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민화협은 통전부 교류1과가 지도하도록 하였다. 교류1과는 남한과의 모든 종교교류(개신교·천주교·불교·천도교 등)를 배후에서 전담하고 있다.

²⁰⁷ 과거 남한내 조직되어 있는 것처럼 위장하였던 통일혁명당(1969. 8. 25 창당)의 후신으로 통전부 산하 전위조직으로서, 1985년 7월 27일 개칭되었고, '통혁당의 목소리방송'을 '구국의 소리방송'으로 개칭(1985. 8. 8)하였다. 북한은 '구국의 소리방송'을 2003년 8월 1일부터 중단하고, 8월 15일부터 조선중앙방송을 중계하고 있다.

²⁰⁸ 민화협은 1998년 6월 8일 북한이 8·15대축전 제의에 앞서 북한의 정계·사회문화계·종교계 등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로 구성된 대남단체이다.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방침'(1998. 4)에 언급된 '온 민족의 접촉·대화과 연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²⁰⁹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는 아·태 지역 미수교 국가들과 정·경·문화교류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1994년 5월 설립된 통전부 외곽단체이다. 최근까지 남북 간의 각종 민간교류와 경제협력 업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림 IV-1> 통일전선부 기구도



제1부부장: 임동욱
부부장 (5인): 안경호, 채창국 등.

- * 26연락소: ① 구국의 소리 방송, ② 우리민족끼리 인터넷 사이트, ③ 김일성 방송대학 관할
- * 56연락소: ① 외화벌이 사업, ② 납치범 관할
- * 101연락소: ① 신문·잡지 담당, ② 대남 사상·문화적 침투 담당
- * 310연락소: ① 출판, ② 소설·시 담당
- * 813연락소: ① 뼈라 제작, ② 위조신분증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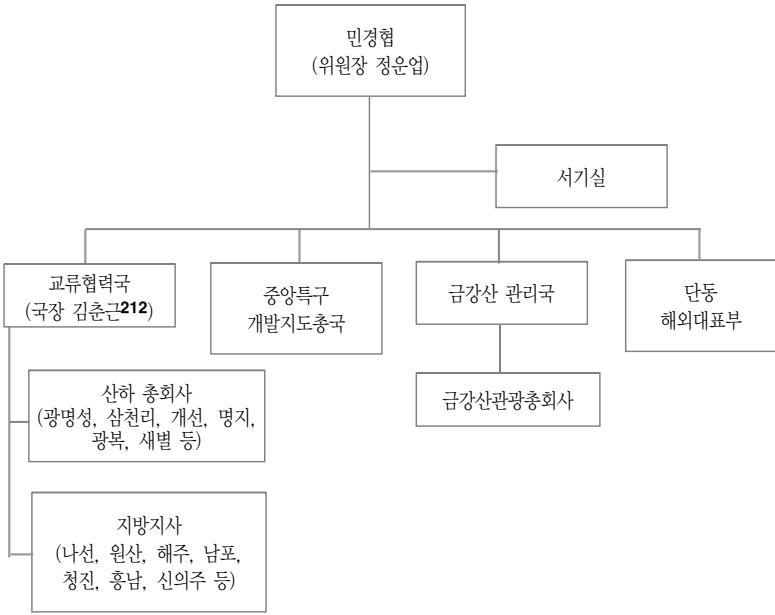
(3)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 설치

그 동안 당·군 등 비경제부문 기관이 운영하던 일부 경제사업체가 내각으로 이관되었다. 남북경협관련 사업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4년 6월 9일 지침에 따라 내각 산하에 민경협(민족경제협력위원회)을 신설(2004. 7)하여 담당케 하였다. 그리고 남북경협사업은 대남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통전부 대남(회담)과에서 이를 지도케 하였다.²¹⁰ 민경협 산하에 남북회담 부서(교류협력국)를 두고, 이를 통전부가 지도하도록 한 것은 남북경협추진위원회 회담도 민경협이 담당케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조선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총27조로 된 「북남경제협력법」을 채택한 것으로 보도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²¹¹ 민경협은 3대 경협사업을 비롯한 대남 경협사업 전반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²¹⁰ 민경련(민족경제협력연합회),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개성공단 담당), 금강산관광총회사(금강산관광특구 담당) 등이 민경협 산하로 들어갔다. 민경협은 내각의 성(省)급 기구로서 무역성보다 상위조직으로 알려진다. 외무성과 무역성 등에서 많은 인원이 충원되었다. 정창현, “내각과 노동당 산하 대남 기관 구조조정,” 민족 21 (2005. 5), pp. 96~101.

²¹¹ 민주조선, 2005년 7월 29일.

<그림 IV-2> 민경협 기구도



이 같이 남북대화의 종류와 횟수가 증가하면서, 통일전선부 자체가 확대되는 동시에 참여하는 북한 대표들 또한 통일전선부 중심에서 경제·군사 및 외교분야 일군 등으로 그 폭이 넓어지는 양상이다. 북한이 체제방어적 차원에서는 경제난과 안보난을 해결하기 위해, 체제확대적 차원에서는 통일사업을 더욱 적극 추진하기 위해 남북대화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북한은 경제적 실리와 대미 협상기반 확보 그리고 대남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경제·군사·외교 및 문학·역사 등 각

²¹² 제7~8차 장관급회담 대표, 민경련 서기장(2002), 남북경협제도실무협의회 제1~4차 회의 북측 수석대표(2003), 제13~14차 장관급회담 대표(2004)

해당분야 실무자들의 참석이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 남북대화를 주도해왔던 조평통 간부들은 정치 분야의 남북대화에는 여전히 직접 참가하여 주도하나, 경제·군사 분야 대화에는 대표단 일원으로만 참석하여 회담 전략과 전술을 뒷받침할 뿐 전면에 나서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물론 대남관계의 큰 틀은 지금도 통전부가 주도하고, 회담대표들을 막후에서 조정한다. 그리고 대신 조평통 간부들은 ‘2001 민족통일대축전’부터 ‘2005 민족대축전’을 주관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간부를 겸함으로써 남북대화 이외에 하층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민간부문의 통일축전 업무분야로 그 역할을 확대하였다.

한편 북한측 대표들은 협상테이블에서 여전히 통제된 발언을 지속하고 있으나, 사안과 협상대표의 비중에 따라 자유로운 발언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관찰된다. 2001년 11월 6차 장관급회담 남한대표는 북한대표가 철두철미하게 회담장 밖에서 오는 메모지에 따라 발언하고 행동했던 것으로 증언하였다.²¹³ 그러나 장관급 및 기타 실무회담을 참석했던 다른 남한대표는 북한대표들의 세대교체²¹⁴와 더불어 통전부 소속이 아닌 타 부서 대표들이 회담에 나오면서 북한대표들의 협상자세가 실무지향 차원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워지고 있는 것으로 증언하였다.²¹⁵

²¹³ 2002년 4월 23일 제5차, 6차 장관급회담 남측대표 인터뷰, 송중환, 북한 협상 행태의 이해, p. 144.

²¹⁴ 대표적인 북측 남북회담일꾼들은 다음과 같다. 1970년대부터 활동하고 있는 전금철(전금진)과 박영수, 안병수(안경호), 허필국(허혁필) 등을, 1980년대 중반부터는 김용순, 림춘길(림동옥), 최성익 등을, 1990년대 후반부터는 김령성, 김완수, 최승철, 권민(권호웅) 등을 들 수 있다.

²¹⁵ 2003년 1월. 장관급 및 실무회담 남측대표 인터뷰

3. 협상행태 특징 : 상인적 협상

가. 협상목표 : 혁신협상(주)과 재분배 협상(종)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전 북한의 협상목표에 대해서도 불변론과 변화론의 두 가지 견해가 있다. 불변론적 시각을 취하는 학자들은 북한의 협상목표를 ‘남조선혁명을 위한 분위기 조성’으로 본다. 송중환은 북한의 대남협상을 대남 혁명전략의 일환으로, 남북대화를 이와 같은 환경조성을 위한 전술적 수단으로 간주하였다.²¹⁶ 강인덕도 남북대화를 노동당이 제시한 ‘남조선혁명전략’의 전술적 차원으로 분석하였으며,²¹⁷ 이동복도 같은 견해를 표명하였다.²¹⁸ 김용희, 김용호 등의 연구결과도 이 같은 입장에 동조한다. 결국 북한의 대남협상행태에 있어 근본적 변화가 없다는 입장으로 귀결된다. 변화론적 시각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북한의 협상목표를 ‘체제보존을 위한 시간벌기’로 규정한다. 임동원은 남북고위급회담을 냉전기 회담들과 구별하고 있다. 그는 남북고위급회담에 임한 북한의 자세는 체제생존전략 차원의 ‘진의협상’적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 이는 탈냉전의 도래와 식량난 등 경제난의 심화로 인해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입장으로 귀결된다.

²¹⁶ Jong-Hwan Song, “How the North Korean Communists Negotiate: A Case Study of South-North Korean Dialogue of the Early 1970s,” *Korea and World Affairs*, vol. 8, no. 3 (Fall 1984), p. 613

²¹⁷ 강인덕, 북한의 남북대화 전략전술 평가 및 전망 (서울: 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1990), p. 12.

²¹⁸ 이동복,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협상전략: 과거 대북회담을 기초로,” p. 216.

남북정상회담이후 2002년 10월 미국이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의혹을 거론하기 이전까지의 북한의 협상행태를 정리해 보면, 북한은 대남협상 목표에 있어서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춰온 것으로 보인다. 1990년 한·소수교와 1991년 소련붕괴, 1992년 한·중수교로 북방삼각관계가 동요하고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북한은 경제난과 체제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에 북한은 ‘유혼통치’(1994. 7), ‘붉은기철학’(1995. 8), ‘고난의 행군과 3대진지 강화론’(1996. 1),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1998. 3), ‘강성대국’(1998. 8), ‘새로운 관점과 사고방식’(2001. 1)을 선포하며, 공산화통일보다 사회주의 체제유지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김정일정권 수호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최근에 ‘심화조 사건’으로 일부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지만, 1997년 말부터 2000년 초까지 북한은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성)을 통해 25,000여명을 숙청시키면서 통제력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알려진다.²¹⁹ 북한은 김정일정권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난과 안보난을 해결해야 했다.²²⁰ 따라서 이 시기 북한의 대남협상 목표는 경제난 해결을 위한 실리확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분단 55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에 응하고, 이후 다양한 실무회담에도 적극 참여한 배경에는 경제난 해결을 위한 실리추구가 그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미 밝혀졌듯이, 북한이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국가로 규정하였던 남한과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과 그 개최일자를 일방적으로 하루 연기하였던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5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남한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었던 것²²¹과 대북송금이

²¹⁹ 신동아 (2005. 10).

²²⁰ 허문영, “북한의 생존전략과 진로,” 정책연구 , 통권 132호 (서울: 국가안보정책연구소, 1999), pp. 153~235.

제 날짜에 완료되지 않은 데 대한 불신표현으로 알려진다. 또한 북한은 중단되었던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의 재개가 현대측의 요청에 따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열린 것임을 밝히면서, 금강산 관광 대가를 당초 약속대로 지급해 줄 것을 촉구한 적도 있다.²²² 이는 북한이 남북 당국대화에 응한 이유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려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결국 이 시기 북한의 협상목표는 남북관계의 재편을 모색하되, 북한의 구도에 따라 일방적인 이익추구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협상목표는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 대외적 차원에서는 외교난 극복(연대성 강화)이다. 6자 회담과 북·미 협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북 압박을 모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전략 수립과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외관계를 개선하고 외화조달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다. 대남적 차원에서는 경제적 실리확보(유효성 제고)이다.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될 경우 통일전선사업을 강화하고,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여 남한으로부터 협력과 지원을 받아내려는 의도다. 마지막으로 대내적 차원에서는 김정일 업적과시(정통성 강화)이다. 김정일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주민들의 숙원인 ‘통일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선전하는 것이다.

²²¹ 2000년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 북경에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남한 국가정보원 대북협상팀과 북한 아태평화위 실무진간의 대북지원문제는 3월 9일 대북 경제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 발표되자, 3월 17일에서 4월 8일 사이 상해와 북경에서 특사(박지원과 송호경) 간의 비공개접촉을 통해 해결되고, 남북한은 남북정상회담에 전격 합의하였다.

²²² 조선일보, 2001년 10월 3일, pp. 1, 3.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과 송호경 북한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의 회담(2001. 9. 15~16, 금강산).

그러나 2002년 10월 이후 농축우라늄 핵무기개발의혹으로 인해 북한이 추진하던 ‘실리 사회주의’ 정책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대일본 ‘(납치자) 시인외교’와 남북대화도 모두 난관에 처하게 되었다. 이후 2002년 12월 대선에서 진보적인 ‘386’세대가 적극 지지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북한은 실리뿐만 아니라 통일전선사업에도 다시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민족공조론’이 그것이다. 2003년 북한은 신년공동사설(1.1)에서 “민족공조로 미국의 전쟁책동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족공조를 대남정책 기조로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후 북한은 그 동안 실무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회담에 소극적이었던 태도를 벗고, 민족공조 노선에 기초하여 남북 당국대화²²³와 준당국대화²²⁴ 그리고 비당국대화²²⁵에도 적극 나서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북한은 민족공조론을 3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다.²²⁶ 안보위기해결 차원에서 미국의 대북 압박 및 강경정책의 예봉을 피하는 것이다. 이는 ‘반미 및 주한미군 철수’ 주장²²⁷ 등 한·미공조 이간전략으로 표출된다. 그리고 경제난 해소 차원에

²²³ 장관급회담, 특사회담, 군사실무회담, 군사실무접촉, 군사통신실무자접촉,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및 실무접촉, 경제협력제도실무위원회, 해운협력 실무접촉 등.

²²⁴ 적십자 실무접촉,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추진단 회의, 이산가족 상봉, 적십자 회담 등.

²²⁵ 3·1절 민족공동통일행사,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 제주도 민족평화축전 및 각종 종교교류.

²²⁶ 흥미있게도, 북한은 2005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민족공조 개념을 세분화하여, ‘3대 공조’라는 새 구호를 제시하고 있다. 한·미·일 공조폐기를 ‘민족자주공조’로, 미군철수와 핵문제 해결에서의 협력을 ‘반전평화공조’로, ‘민족공동리익과 번영’을 위한 남북경협 확대를 ‘통일애국공조’로 언급하였다. “전당·전군·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로동신문, 2005년 1월 1일; 강충희, 조국통일 3대공조.

²²⁷ 강충희·원영수, 6·15자주통일시대 (평양: 평양출판사. 2005).

서 남한정부의 지원 및 기업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6·15 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 등 6·15 이행전략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통일전선사업 차원에서 남한에 친북 우호세력을 구축하여 ‘공존과 적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합법화’ 등 통일전선전략으로 나타난다.²²⁸ 최신판 통전사업은 민족공조론으로 제시되고 있다.²²⁹ 최근 북한이 6자회담에서 북·미 양자회담을 이끌어 내 핵포기대 북·미관계정상화를 도출한 것, 남북관계에서 3대 행사(6·15 통일대축전, 8·15 민족대축전, 10·10 당창건 60주년행사)를 적극 이끌어 가는 것, 그리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문제에 대해 외곽에서 지원하는 것들 또한 바로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통전사업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²³⁰

나. 협상전략 : 혼합전략과 수세적 위기관리전략 운용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남북대화를 다목적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분야별로, 상황별로, 단계별로 문제해결전략, 무행동전략, 경쟁전략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혼합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 비중은 무행동전략(inaction strategy)에서 문제해결전략(problem solving strategy)으로 이동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 고갈등-저협력 남북관계 시절에 경쟁전략(contending strategy)을 취했으나, 남북정상회담이후 문제해결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하

²²⁸ 허문영 외,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 149.

²²⁹ 최기환, 6·15시대와 민족공조 (평양: 평양출판사, 2004).

²³⁰ 허문영, “광복60년, 남북관계 어디까지 왔는가?” (통일동우회 세미나 발표문, 2005. 9. 30).

었다. 그러나 2001년 1월에 출범한 부시 행정부의 강경정책과 악의 축 발언(2002. 1. 30)으로 대미관계가 어려워지고, 한·미간의 대북정책 조율과정에서 남북관계마저 다시 고갈등-저협력 상황에 처하게 되자, 북한은 무행동전략을 구사하였다. 2001년 11월 14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제6차 장관급회담이 아무 합의 없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남북대화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이후 서해 교전(2002. 6. 29)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자, 북한은 남북대화 재개를 제의하고, 고갈등-고협력 상황 가운데 문제해결전략을 적극 선택하는 모습을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분야별로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군사·경제 및 인도(체육) 등 4대 분야의 주요 당국회담이 함께 시작해서 활발히 병행·진행되고 있다. 정치분야의 경우 특사회담과 장관급회담이 개최되어 현재까지 각각 4회와 16회 등 총 20회 진행되었다. 경제분야의 경우 경제협력추진위원회 10회, 경제협력 실무접촉 4회, 전력협력 실무협의회 1회, 임진강수방 실무협의회 3회,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4회와 실무접촉 11회,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 2회, 실무접촉 1회, 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4회, 금강산관광 당국회담 2회, 해운협력 실무접촉 4회, 임남댐공동조사 실무접촉 1회 등 총 58회 진행되고 있다. 인도분야의 경우 적십자회담 6회, 적십자 실무접촉 6회, 면회소 건설추진단 3회, 부산아시아게임 실무접촉 2회,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실무접촉 1회, 아테네올림픽 공동입장 실무접촉 1회 등 총 21회 진행되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되는 군사분야에 있어서도 활발한 접촉과 대화가 있었다. 국방장관 회담 1회, 장성급회담 2회, 군사실무회담 및 수석대표 접촉 10회,

군사실무접촉 10회, 군사통신실무자접촉 1회 등 총 33회 진행되었다.

둘째, 개최지와 관련하여 정리해 보면, 1995년 이래 한반도 내에서 개최되지 못했던 남북회담이 한반도 내에서 다시 개최되기 시작하였고, 그 장소도 판문점에서 여러 지역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국민의 정부의 출범이후 2003년 1월 말 현재 서울 8회, 평양 13회, 금강산 20회, 판문점 15회, 제주도 2회, 중국 7회였다.

셋째, 합의건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북정상회담이후 2003년 1월 말 현재 공동보도문 18건, 합의서 22건이 채택되고 상당부분이 실행됨으로써 내실있는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보도문은 장관급회담 9건, 국방장관회담 1건, 경제분야회담 4건, 적십자회담 2건, 특사방문 2건이다. 합의서는 경제분야 15건, 군사분야 2건, 적십자분야 4건, 체육분야 1건이었다.

넷째, 북한의 핵개발의혹과 국제적 비난 및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북대화에 꾸준히 호응하였다. 2002년 10월 17일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2일 전에 북한의 핵개발의혹이 제기되어 회담전도가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제8차 장관급회담은 합의일정보다 1일밖에 지체됨이 없이 10월 19~23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남한은 북한 핵개발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천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핵문제를 북·미 문제로 주장하고, 남북간의 기존 합의사항을 실천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남북대화를 진행시키고자 하였다.

다섯째, 경제분야에서는 문제해결전략이 많은 경우 선택되었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공사가 각각 재개·착수되었다. 경의선 공사 재개와 동해선 공사 착수는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대단히 의미있는 사업이다. 북한은 남북 중단철도 연결과 서울 방문을 두 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조국통일과업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²³¹ 1994년 7월 7일 김일성 주석은 남북중단철도를 연결하여 서울을 방문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 서명한 직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통일유훈으로 계승되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임동원 특사방문시의 남북공동보도문(2002. 4. 5)에서도 남북교통망 연결사업은 제4항 일반적 당면사업²³²과 달리 제3항에 별도 명시 강조된 바 있다.²³³

여섯째, 북한의 의도대로 남북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시에는 무 행동전략이 구사되었다.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2000. 12. 12~16, 평양)에서 북한은 2000 국방백서 가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한 것과 남한으로부터 전력지원에 보장이 없게 되자, 사과와 전력지원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면서 실질적 토의를 지연시켰다. 그리고 5차 장관급회담을 일방적으로 합의된 일정보다 6개월이나 연기시켰다. 또한 북한은 제6차 장관급회담(2001. 11. 9~14, 금강산)에서 9·11 테러사태이후 남한이 비상경제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요구하다가, 남측대표가 완강한 태도를 취하자 회의 일정을 이틀 연장시켜 북측의사 관철을 추구하다가 7차 장관급회담 개최일정에 대한 합의 없이 회담을 종료시켰다. 이후

²³¹ 한호석, “6.15 공동선언 이후의 통일정세와 조국통일실현의 전망” (2002. 7. 23). <<http://www.onekorea.org>>.

²³² 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가동, ② 금강산관광 활성화, ③ 남북이산가족 상호방문 재개, ④ 북측 경제시찰단의 남측 방문, ⑤ 남북장관급 회담 재개.

²³³ 한호석에 따르면, 5월 통일철도 연결공사 착공 → 6월 월드컵 행사 → 7월 부시 행정부 특사 방북 및 북미 고위급회담 재개 → 7월 말 통일철도 완공 → 8·15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다.

북한은 제7차 장관급회담이 개최되기까지, 9개월 동안 장관급회담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또한 북한은 13차 장관급회담에서 어렵게 합의한 군사당국자회담 개최에 대해 이후 무행동전략을 구사한 바 있다. 그리고 참여정부 하에서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불허와 탈북자 집단입국 상황에 처하게 되자, 북한은 예정되어 있던 15차 장관급회담(2004. 8. 3~6)을 근 10개월 동안 무행동전략에 기초해서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곱째, 군사분야에서는 문제해결전략과 경쟁전략이 병행 추진되었다. 남북군사회담이 총 18회 개최되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한 점과 개성공단 건설과 금강산 육로관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것은 그 동안의 판문점 정전회담이나 군사대표회담에서 비생산적인 경쟁전략이 구사되었던 것보다 진일보한 문제해결전략이 선택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²³⁴ 그러나 북한은 내부적으로 경쟁전략을 지속하여 체제결속을 도모하였다. 2000년 6월 남북공동선언 이후 온민족과 전 세계가 긍정적 시각에서 주시하고 있던 시점인 2000년 10월 말 이후 북한군 병사·사관용 ‘학습참고자료’는 김정일 위원장의 무력통일관을 인용한 뒤, “군인들은 평화통일과 관련한 그 어떤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하며, 적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평화통일에 대해 사소하게나마 미련을 가져서도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오직 총대만이 남녘땅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철석같은 신념과 신조를 가지라”고 강조하였다.²³⁵ 따라서 남한당국은 타도의 대상이며 통일은 무력에 의해

²³⁴ 통일부, 통일백서 2005 (서울: 통일부, 2005), pp. 41~47.

²³⁵ “학습참고자료(조선인민군출판사, 2000. 10),” 월간조선 (2002. 3), p. 76에서 재인용

달성될 수 있다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의 기본입장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대남군사전략 가운데 북한은 1996년 잠수함 침투사건, 1999년 및 2002년 서해교전, 미사일 및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 등 대남 무력혁명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6차 장관급회담(2005. 9. 13~16)에서 남한이 남북상주연락대표부 설치와 군사당국회담 재개를 적극 제기하자, 북한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지로 맞대응함으로써 경쟁전략에 기초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여덟째, 이산가족 재회 및 민간교류와 같은 인도주의적 사업과 사회분야에서 또한 북한은 예상과 달리 문제해결전략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보수적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이 2~3회 호응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산가족 재회의 후유증이 북한주민들과 북한 체제에 미칠 악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남측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일단 이산가족 재회카드를 수용할 것이나, 2~3차례 재회이후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후속상봉은 거절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북한은 2005년 11월 현재 12차례 교환과 상봉에 응하였고, 생사확인과 서신교환에도 합의·실행하였다. 또한 2005년 8·15 광복 60주년 행사 때에는 이산가족 화상상봉도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하여, 건설착공 단계에 들어섰다.

또한 북한은 과거 수십 년간 지속하여 오던 대남비방 및 선전 선동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²³⁶ 동시에, 사회·문화·체육

· 교육·종교·방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활성화에 합의한 이래 교류에 적극 나서는 실리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것은 남한의 공세적인 대북선전선동을 막아내는 동시에, 경제난 해소를 위해 인도적 지원을 최대한으로 받아내는 한편, 대남 통전사업을 구사하려는 의도에 기초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는 그 내용에 있어 비록 근본적 변화²³⁷에까지는 미치지 못하나, 현상적 변화²³⁸ 또는 전술적 변화는 넘어선 전략적 변화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그 성격에 있어 과거 갈등적 공존에서 경쟁적 공존을 거쳐 협력적 공존의 초입단계에 들어선 것이라 할 수 있다.²³⁹

다. 협상전술 : 타협전술과 공격·지연전술 병행²⁴⁰

북한의 협상전술에 대해서도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불변론으로서, 분단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협상전술은 변함이 없다는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변화론으로서, 냉전과 탈냉전시기로 구분하여 근본적 변화는 아니나,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북한의 협상전술이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변화론자들은 1990년대부터 북한의 협상전술이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임

²³⁶ 2000년 11월 대남 ‘국군장병에게 보내는 방송’과 난수표 방송을 중단하였다.

²³⁷ 근본적 변화(fundamental change): 당 규약 전문에서 적화통일 조항 삭제.

²³⁸ 현상적 변화(superficial change): 내부 개혁 없는 대외개방정책 추진.

²³⁹ 허문영, 한반도냉전구조 해체와 남북기본합의서 실천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1999), pp. 9~11.

²⁴⁰ 남북회담 남측대표 인터뷰, 2003년 7월 7일; 남북회담 남측 실무자 인터뷰, 2005년 11월 25일.

동원은 북한이 협상전술에서 부정적인 전술들을 배합 사용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전술들도 새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 ① 양보와 절충의 유화적 전술, ② 단계적 대안제시 전술, ③ 자존심과 체면 중시 전술, ④ 공통·유사한 것만 합의하자는 전술, ⑤ 일괄타결·동시집행 전술, ⑥ 회담형식의 신축적 운용 전술, ⑦ 비공식 접촉활용 전술, ⑧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긍정적 협상전술 등. 홍양호 또한 북한이 그들의 협상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협상의 단계별, 상황별 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전술들을 시의 적절하게 배합·구사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 결과, 북한은 냉전시대 협상전술인 강경한 공격적 전술, 경쟁적 논쟁 전술, 회담파기 전술, 결론이 삽입된 의제포함 전술, 전제조건제시 전술, 기습제의 전술, 추가의제제시 전술, 강탈적 요구 전술, 반복제의 전술, 벼랑끝 전술 등을 지속하였으나, 동시에 탈냉전시대 협상전술인 타협 전술, 대안제시 전술, 일괄타결 전술, 실무관계개발 전술, 협동 전술, 제3자 중개 전술 등 부분적으로 유연하고 문제해결적 전술을 새로 선택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²⁴¹

(1) 변화된 협상전술 : 비공격 흥정 · 온건적 태세 · 문제해결적 논쟁 전술

남북정상회담이후 북한은 남북회담에서 변화된 협상태도와 타협전술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²⁴² 첫째, 북한은 실리를 추구하는 협상 양식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북한주민들과 군

²⁴¹ 홍양호, “탈냉전시대 북한의 협상행태에 관한 연구,” pp. 210~237.

²⁴² 남북회담 남측대표 인터뷰, 2003년 9월 28일; 남북회담 남측 실무자 인터뷰, 2005년 11월 25일.

부에서 물질과 돈 우월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둘째, 남북회담에 임하는 북한측 대표의 자세도 변화하였다. 북측대표들은 김정일 정권에 대한 모독적인 행위를 제외하고는 남측대표의 모든 의견을 청취한다.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한 개인의 견을 설득력있고 논리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셋째, 남북회담 자체의 성격이 실무회담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현재 정치협상적 중요협상은 장관급회담에 국한되고 있다. 군사실무회담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남북회담은 실무협상적 일반협상 성격을 띠고 있다. 군사실무회담은 금강산관광과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개성공단 사업지원을 위한 성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군사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대표들은 협상과정에서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며, 때로는 양보하기도 한다. 이는 비공격전술, 온건적 태세전술, 문제해결적 논쟁전술 등을 주로 구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넷째, 장관급회담의 경우 3차례 회담 중단사태가 발생하였으나, 곧 1년 전후로 다시 재개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한국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이 주요 요인이 되었다. 동시에 남북교류에 따른 북한 군부의 불안감과 이산가족 상봉이후 북한주민들의 동요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북한군부도 금강산관광과 정상회담 및 각종 회담으로 인해 현금과 대량의 물자지원이 들어오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남 대화전략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진다.²⁴³

다섯째, 북한의 협상대표들과 수행원들은 과거에 협상관련 문

²⁴³ 대북사업 기업임원 인터뷰, 2003년 10월 25일, 2005년 11월 30일.

제점들을 남한에 책임전가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근래에 와서는 북한 내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책임으로 돌리는 발언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이산가족을 못 찾는 이유는 북한사회가 컴퓨터화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과 고난의 행군 이후 실종·사망 등 북한주민의 이동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데 기인하는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여섯째, 북한 협상대표들은 과거와 달리 남한의 체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예컨대 개인적으로 만날 때, 정보와 직위를 묻기보다, 남한경제의 실상을 먼저 물어본다. 그리고 남북경협 활성화 및 지원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협력기금 등 남한의 내부 사정과 여론을 물어보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정상회담이후 북한이 보여준 협상전술들을 정리해 볼 때, 남북관계와 북한 내부 및 미국의 대북정책에 결정적인 변화가 없는 한 남북대화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지속적인 협상전술 : 회담 주도권 장악 및 속도조절 전술

그러나 6·15 남북공동선언이후에도 북한은 주도권 장악과 속도조절을 위한 전술들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비공개·비공식 회담을 통해서 합의되었다. 그리고 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박준규 통일부장관의 김정일 위원장 비공개 방문(2000. 9. 1, 함경도)과 임동원 특사의 방북 및 김정일 위원장 면담(2002. 4. 3~6)을 통한 돌파구 마련도 그 실례가 된다.

김정일 위원장은 회담주도권 확보전술과 관련하여 새로운 모습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그는 2000년 8월 12일 한국 언론사장

단과의 대화에서 세계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 해외여행을 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내가 무엇 때문에 큰 나라들을 찾아다니나요. 내가 평양에 앉아 있어도 여러 열강에서 나를 찾아오지요”라고 답했다.²⁴⁴ 북한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21세기 태양’으로 일컬어진다. 따라서 세계 지도자들은 별에 불과한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이나, 장쩌민 중국 주석·푸틴 러시아 대통령·고이즈미 일본 수상의 방북은 모두 ‘태양을 향한 별들의 행진’이 될 따름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자기측 지역에서의 회담을 개최함으로써 회담 상대방에 대한 우월적 지위 확보를 통해 회담 주도권을 장악하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북한주민들에게 김정일 위원장의 국제적 지위를 홍보하여 체제정통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정상회담이후 북한은 남한 대표단에 대해 일반적으로 정중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북한측 입장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과거와 같은 인신공격을 재개하였다. 2000년 11월 30일 장재언 북적 중앙위원장은 장충식 한적 총재의 월간조선 인터뷰 내용을 비난하고 대죄를 거부하였다.²⁴⁵ 또한 2001년 11월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되자, 북한은 그 책임을 남측 수석대표인 홍순영 통일부장관의 반북대결적 태도로 전가하였다.²⁴⁶

²⁴⁴ 중앙일보, 2000년 8월 14일; 조선일보, 2000년 8월 14일.

²⁴⁵ “그와 같은 도발자가 남조선 적십자 총재로 있는 한 상대하지 않을 것이며, 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2000. 11. 30~12. 2)과 북남적십자회담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 2001년 1월 4일. p. 1, 8.

²⁴⁶ “전적으로 남측의 무성의와 특히 남측 수석대표의 전횡과 불순한 태도에 있다.” 로동신문, 2001년 11월 5일 통일부, 북한동향, 제567호(서울: 통일부 정보분석국, 2001. 11. 24~30), p. 15.

또한 북한은 정상회담 이후에도 회담장 퇴장과 회담연기 전술을 수차례 보여주었다. 다만 회담 연기의 경우, 과거와는 달리 그 사유를 분명히 하지 않는 점은 차이가 있다.²⁴⁷ 제6차 장관급회담(2001. 11, 금강산)에서 북한은 통일문제에 대한 자주적 해결과 비상경제조치 해제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요구하고, 각종 회담의 금강산 개최를 주장하면서 납측의 수락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남한대표가 응하지 않자, 북한은 아무런 합의없이 회담을 종료시키고, 이에 대한 책임을 남한대표에게 전가한 뒤, 7차 회담을 연기시켰다. 그 외 2000년 6월 10일에도 북한은 6월 12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기술적 준비 관계’라는 이유로 연기한 바 있다. 그리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합의서 교환을 위한 접촉은 ‘행정상의 이유’로, 2001년 3월 13일 제5차 장관급회담은 ‘여러 가지 이유를 고려해서’라는 불분명 사유로 연기되었다. 또한 2003년 1월 노무현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은 10차 장관급회담을 지연시키면서 남북대화 주도권 장악전술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속도조절을 위해 일반원칙 합의전술과 양보·절충 전술 등 기존 기법을 계속 구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6·15 남북공동선언』의 1항과 2항에 자주통일과 연방제 통일원칙을 명기하도록 주장·관철한 것은 냉전기 때 구사하였던 일반원칙 합의전술의 반복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향후 남북회담과 공동선언 이행과정에서 북한의 의도대로 회담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동 원칙들을 일방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남한의 대내외정책을 비난하는 동시에 정책변경을 요구함으로써 회담의 주도권을

²⁴⁷ 북한이 ‘불가피한 상황’을 이유로 남북조절위를 연기한 경우(1973. 3)가 있으나, 이후 완전히 중단되었다.

지속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남북정상 회담이후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강조하면서,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과 연방제 추진·주한미군 철수 등을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²⁴⁸ 또한 6·15 공동선언 채택 시 북한은 당초 ‘높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한 통일 실현을 고집하였으나, 한국의 반대에 부딪치자 양보와 절충 전술을 통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합의함으로써 실리를 확보하였다.²⁴⁹ 지연 전술 또한 6·15 공동선언이후에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은 3차 회담까지 매월 1회씩 진행되었다. 그러나 4차 회담 이후 그 간격이 늘어지기 시작하였고, 6차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는 근 8개월 가량 중단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15차 장관급회담을 남한정부의 비우호적 대북정책을 빌미로 근 1년간 중단시켰다. 사실 이 기간 북한은 2002년 7월 1일에 채택한 경제관리개선 조치와 2000년 6월 이후 진행된 다양한 남북대화와 교류가 북한 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체평가를 토대로 체제정비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회담속도전술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협상성격: 진의·의사협상의 병행, (남한 우위)균형·실무협상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은 6·15 공동선언 이행 차원에서 진의협상 자세를 보여주었으나, 주·객관적 상황이 불리할 때는 의사

²⁴⁸ 로동신문, 2001년 9월 26일.

²⁴⁹ 최원기·정창현, 남북정상회담 600일 (서울: 김영사, 2000), pp. 73~75.

협상적 자세도 여전히 병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은 남북정상 회담과 6·15 공동선언을 김일성 주석의 유훈관철이자, 김정일 위원장의 영도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선전한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후속 남북대화를 통해 6·15 공동선언을 이행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자기 식의 이행을 위해 진의협상자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급속한 남북관계개선으로 인해 부작용과 북한 고위간부들의 우려가 나타나는 가운데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지속되면서 남한으로부터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북한은 남북장관급회담 등 각종 회담을 겉돌게 함으로써 의사협상적 자세도 다시 보여주었다.

또한 북한은 남북회담을 대미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의협상과 의사협상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대미협상을 체제생존의 사활적 관건으로 판단하고, 남북대화를 대미 협상력 기반강화(긍정적 진전 시) 및 구축(부정적 사태발생 시 대비) 차원에서 진행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4년 이후부터는 남북대화를 통해 통일전선사업을 다시 적극적으로 모색·추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8·15 통일대축전은 상·하층부 통일전선의 연계전술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협상지위와 관련, 북한은 북한 일방우위의 불균형협상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난 같은 불리한 협상상황으로 인해 오히려 남한의 상대적 우위의 균형협상으로 왕왕 돌입하였다.

협상중요도와 관련, 북한은 6·15 공동선언 이행 차원에서 실무중심의 협상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김일성시대 정치중심

의 중요협상 태도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은 자신들도 많은 협력사업 구상이 있음을 밝히면서도, 매 회담시마다 많은 합의를 내기보다는 이미 합의한 협력사업들의 이행을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문제해결전략적 실무중심의 협상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마. 협상방식 : 상인적 협상 수용과 전사적 협상 지속

북한은 상인적 협상스타일을 천천히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남북장관급회담 개최에 임하는 북한 태도가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보인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간격이 3차 회담까지는 매월 1회 있었으나, 이후 2001년 3월 12일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제5차 북남상급회담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연기하였고, 그 후 9개월 만에 재개되었고, 6차 회담은 2개월 만에, 제7차 회담은 9개월 후인 2002년 8월에 개최된 데 근거한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 16차 장관급회담까지 응하였으며, 현재 17차 장관급회담 개최에 합의한 채, 다양한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나오고 있다. 따라서 ‘합의사항 이행 협의에 소극적 반응’이라는 김일성시대의 남북협상 방식에서는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북한은 협상과 선전을 병행하는 협상방식을 남북정상 회담이후에도 지속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은 6·15 공동선언 발표이후 제1항 및 2항과 관련하여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자, **로동신문** 과 **조선중앙방송** · **평양방송**

등을 통하여 변경된 것이 아님을 선전하고, 연방제 실현과 6·15 공동선언 이행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다. 또한 6차 남북장관급회담(2001. 11. 9~14, 금강산)에 임해서 북한은 중방과 평방을 통해 남한의 외세공조, 주적론, 비상경계조치, 통일운동단체 및 애국인사 구속, 개혁개방 유도 등을 지적한 북측 단장의 기초발언을 반복적으로 방송하였다. 그리고 회담이 결렬되자 조평통 서기국 보도(11. 24)를 통해 책임을 남측 수석대표에게 전가·비난하였다. 이 같은 북한의 협상과 선전을 병행하는 스타일은 해외 친북인사나 언론을 활용하는 한편²⁵⁰ 조선일보 기자 취재입북을 거부하는 방식²⁵¹으로도 나타났다.

²⁵⁰ Selig Harrison, CNN 등

²⁵¹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2000. 6. 27~30, 금강산) 공동취재단에 포함된 조선일보기자의 입북 거부. 조선일보, 2000년 7월 10일, pp. 1~2.

V

6·15 공동선언 이전과 이후 대남협상 형태 비교 : 공세적 의사협상에서 방어적 진의협상으로 부분적 변화

앞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정리해 볼 때,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행태는 비록 근본적 변화에까지는 미치지 못하나, 피상적(현상적) 변화는 넘어선 부분적 변화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협상목표에 있어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으나, 추구하는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15 공동선언 이전에 공산화통일과 체제강화를 중시함으로써 외양으로는 정상화협상을 지향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재분배협상을 추구하였던 데 비해, 6·15 이후에는 3대 혁명역량의 전반적 약화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김정일정권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효성과 연대성을 제고하려는 정상화협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되, 장기적으로 공산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재분배협상의지도 비록 낮은 수준이나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협상전략과 관련해서는 지속과 변화의 양 측면이 모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15 이전 북한은 ‘조국통일’(한반도 공산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무력해방·남조선혁명·남북대화 등의 방식을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선택하였다. 남북대화가 진행될 때는 남한을 설득하려는 경쟁전략을 자주 사용하였고, 북한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담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키는 무행동전략을 구사하였다. 그리고 위기상황이 도래할 시에는 공세적 위기관리전략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6·15 이후 북한은 남북 대화를 다목적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문제해결전략과 무행동전략 그리고 경쟁전략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혼합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 북한은 6·15 공동선

언이후 초기에는 문제해결전략을 통해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전략을 지속하여 체제결속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에는 문제해결전략과 때로는 양보 전략까지 취하면서 민족공조를 강조하면서 안보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김정일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위기관리전략도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참여정부 출범이후에는 혼합전략을 구사하면서 경제적 실리와 안보난 해소 그리고 대남 통전사업을 모두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북한의 '알 먹고, 핑 먹고, 둥지 털어 불때기 전략'으로 명명될 수 있다.

셋째, 협상전술과 관련해서도 변화와 지속의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6·15 이전 북한은 공격적 흥정전술과 경쟁적 논쟁전술을 병행 전개함으로써 남북회담의 주도권과 속도조절을 장악하려 하였다. 이에 비해 6·15 이후 북한은 비록 공격전술과 지연전술을 지속하되, 변화된 협상태도와 타협전술을 병행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넷째, 그 결과 협상성격에 있어서도 비록 지속성이 크나, 변화의 측면도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6·15 이전 북한은 남북대화를 의사협상과 북한우위의 불균형협상 그리고 정치중심의 중요협상으로 다뤘다. 그러나 6·15 이후 북한은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진의협상적 자세를 적극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한의 상대적 우위에 기초한 균형협상과 경제적 실리확보 차원에서 실무협상에도 적극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협상스타일에 있어서도 지속성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15 이전 북한은 강력한 중앙 통제

하에서 협상과 선전을 병행하는 전사적 협상스타일을 보여주었다. 이에 비해 6·15 이후 북한은 기본 틀에 있어서는 여전히 협상과 선전을 병행하고 있으나, 강력한 중앙통제에서 상대적으로 완화된 모습과 더불어 상인적 협상행태를 천천히 수용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볼 때, 6·15 이전 북한의 협상행태는 남조선혁명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 차원에서 전개된 공세적 의사협상이 그 기초라면, 6·15 이후 협상행태는 체제유지·도약을 위한 실리추구 차원에서 전개된 방어적 진의협상이 그 기초라 할 수 있겠다.

북한의 대남협상행태 결정요인 또한 정리해보면, 지속과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협상관과 관련해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15 이전 북한은 대남협상을 공산화통일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특수협상관을 보여주었다. 6·15 이후에도 북한은 대남전략과 연방제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김일성 유훈을 받들어 혁명적 대남관과 협상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둘째, 협상상황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6·15 이전 북한은 1970년대 냉전·1980년대 신냉전·1990년대 탈냉전의 변화된 국제정세에 조용해서 공세적으로 공산화통일을 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6·15 이후 북한은 경제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따른 안보난 지속으로 말미암아 체제위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정권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그 차이점이 노정되었다.

셋째, 협상능력과 관련해서는 지속과 변화의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6·15 이전 북한은 협상과정에서 최고책임자의 개입이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일반적인 업무는 통일전선부에서 유관기관과 협조 하에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15 이후 북한은 최고책임자의 개입이 지속되고 있으나, 다양한 분야의 남북회담이 진행됨에 따라 600명 이상의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통일전선부에 들어와서 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므로 북한의 대남협상행태는 협상전술차원에서만의 변화에 불과한 피상적(현상적) 변화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협상전략·전술차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협상목표의 우선순위 변화까지 있는 부분적 변화로 돌입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북한은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화해 협력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당분간 남북관계를 급속히 진전시키기보다는 속도조절을 통해 보다 많은 실리를 챙기는 한편, 남북협력 증진에 따른 내부 이완의 위험성을 차단하려 할 것이다. 한편 6·15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행태는 북한의 경제난과 안보난이 해결될 경우, 다시 6·15 이전 협상행태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향후 북한이 스스로 안정적으로 변화를 이뤄내, 대남협상행태 뿐만 아니라 대남정책 전반에 걸쳐 근본적 변화²⁵²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²⁵² 필자의 경우 대남정책에서의 근본적 변화(fundamental change)는 당 규약 전문에서 적화통일 조항 삭제를 뜻하고, 피상적(전술적) 변화는 공산화 통일을 위한 무력, 위장평화, 혁명, 대화 수단을 선별적 구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부분적(전략적) 변화는 목표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최대목표인 공산화 통일과 최소목표 사회주의 체제유지 가운데 상대적 비중의 변화, 즉 목표 내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공산화 통일전략에서 생존전략으로의 변화를 뜻한다.

며, 이를 세밀하게 추진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북한 당국의 신뢰를 사는 일이 될 것이다. 이는 구호에 의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관성있는 대북정책 추진노력에 기초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일구어낸 것이 아닌 정직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당국에게 보장해 줄 것은 확실하게 보장해주되, 우리가 북한당국에게 원하는 변화와 교정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표 V-1> 북한의 대남협상행태 비교

구분		시기	6·15공동선언 이전				6·15공동선언 이후			
		특징	공세적 의사(擬似)협상				방어적 진의(眞意) 협상			
협상 협태	협상목표	정상화 협상(현상), 재분배협상(본질)	혁신협상(주), 재분배협상(중)							
	협상전략	경쟁전략 무행동전략 공세적 위기관계전략	정치 문제해결전략 무행동전략	경제 문제해결 전략	군사 문제해결 및 경쟁전략	사회 문제해결 전략				
		협상전술	공격적 흥정 전술 경쟁적 논쟁 전술	비공격 흥정전술	태세적 온건전술/문 제해결 논쟁전술	경쟁적 논쟁전술	문제해결적 논쟁전술			
	협상스타일	전사적 협상	주도권 장악 전술/ 회담 속도조절 전술							
	협상성격	의사협상 (북한우위)불균형 협상 중요협상	상인적 협상 수용 진의 협상, (남한우위)균형협상							
	협상관	특수협상관	중요협상	일반협상	실무협상	일반협상	특수협상관 지속, 일반협상관 점진 수용			
	협상 행태 결정 요인	협상 상황	국제	냉전·신냉전·탈냉전의 변화된 국제정세 조응				9·11테러와 부시행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북한			경제난 심화				경제난 지속			
남한		산업화·민주화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				
협상능력		최고지도자 개입 통일전선부 주도	최고지도자 개입 지속 통전부 확대와 실행기관 다변화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강인덕. 북한의 남북대화 전략전술 평가 및 전망 . 서울: 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1990.
- 구영록. 한국의 국가이익: 외교정책의 현실과 이상 . 서울: 법문사, 1995.
- 김도태. 남북한 협상형태 비교연구 .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김도태·제성호. 핵관련 북한의 협상전략전술 분석 .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김도태·차재훈.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 .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김부성. 내가 판 땅굴 . 서울: 갑자문화사, 1976.
- 송종환. 북한 협상형태의 의해 . 서울: 오름, 2002.
- 양영식. 북한의 협상전술: 남북대화 20년사를 중심으로 . 서울: 통일연수원, 1990.
- 이기택. 한반도의 정치와 군사: 이론과 실제 . 서울: 가남사, 1984.
- 이달곤. 협상론 . 서울: 법문사, 1995.
- 전현준. 북한의 대남정책 특징 .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최원기·정창현. 남북정상회담 600일 . 서울: 김영사, 2000.
- 최은희·신상옥. 내레 김정일입네다 . 서울: 행림, 1994.
- 통일부. 2004 북한개요 . 서울: 통일부, 2004.

- _____. 통일백서 2003~2005 . 서울: 통일부, 2003~2005.
 합참전략기획본부. 북한의 협상행태 . 1993.
 해롤드 니콜슨. 신복룡 역. 외교론 . 서울: 평민사, 1992.
 허만호 외. 북한의 군사협상전략과 기술분석 및 대비방향 .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3.
 허문영. 북한의 핵개발계획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 . 서울: 통일연구원, 2002.
 _____. 한반도냉전구조 해체와 남북기본합의서 실천방안 .
 서울: 통일연구원, 1999.
 _____.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 서울: 통일연구원, 2003.
 흥관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 . 서울: 통일연구원, 2002.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 서울: 한울, 1999.
 강충희. 조국통일 3대공조 . 평양: 평양출판사, 2005.
 강충희·원영수. 6·15자주통일시대 . 평양: 평양출판사, 2005.
 장석. 김정일장군 조국통일론연구 . 평양: 평양출판사, 2002.
 최기환. 6·15시대와 민족공조 . 평양: 평양출판사, 2004.

Axelrod, Robert.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1984.

Churchman, David. *Negotiation Tactics : Process, Tactics, Theory*. Bost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3.

Downs, Chuk. *Over the Line: North Korea's Negotiating Strategy*. Washington, D.C.: AEI Press, 1999(송승중 옮김,

- 북한의 협상전략 . 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9).
- Evans, Graham & Jeffrey Newnham. *The Penguin Dictiona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Penguin Books.Ltd., 1998.
- Fisher, Roger & William Ury. *Getting to Yes: Negotiating Agreement without Giving in*. Boston: Houghton Mifflin, 1991(박영환 역, Yes를 이끌어내는 협상법 . 서울: 장락, 1994).
- Freeman Jr., Chas W. *The Diplomat's Dictionary*.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2001.
- Goldstein, Joshua S. *International Relations*, 4th. New York: Longman, 2001(김연각 외 역, 국제관계의 이해 . 서울: 인간사랑, 2002).
- Habeeb, William Mark. *Power and Tactics in International Negotiation: How Weak Nation Bargain with Strong Nation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8.
- Holsti, K. J. *International Politics: A Framework for Analysi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72.
- Ikle, Fred Charles. *How Nations Negotiate*. New York: Harper & Law Publisher, 1964(이영일 · 이형래 공역, 협상의 전략 . 서울: 한얼문고, 1972).
- Lewicki, Roy J. and Joseph A. Litterer. *Negotiation*. Homewood, Illinois: Irwin, 1985.
- Osgood, Charles. *An Alternative to War or Surrender*. Urbana: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2.
- Rubin, Jeffrey Z. and Bert R. Brown. *The Social Psychology of Bargaining and Negoti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1975.
- Schecter, Jerrold L. *Russian Negotiating Behavior: Continuity and Transition*.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1998.
- Snyder, Scott. *Negotiating on the Edge: North Korean Negotiating Behavior*. Washington D.C.: USIP, 1999(안진환 · 이재봉 역, *벼랑끝 협상*. 서울: 청년정신, 2003).
- Solomon, Richard. H. *Chinese Negotiating Behavior: Pursuing Interests Through 'Old Friend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1999.
- Wall Jr., James A. *Negotiations: Theory and Practice*. Glenview: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85.

2. 논문

- 김도태. “탈냉전기 북한의 대남협상행태: 지속성과 변화.”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 김용호. “공산주의국가의 협상 스타일 비교: 북한, 중국, 구소련.”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서울: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95.
- 김용희. “북한의 협상전략전술에 관한 연구.” 국토통일원. *민*

- 족통일의 모색 , 통일가족논문집 제2집. 1990.
- 동용승. “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의내용 점검 및 향후 추진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 2005. 7.
- 문광진. “북한식 협상행태의 변화 전망과 대북협상원칙.” 국방논집 , 제26호. 1994.
- 송종환. “구소련과 러시아의 협상행태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 제40집 3호. 2000.
- 양무진. “북한의 대남협상전략 유형.”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이동복.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협상전략: 과거 대북회담을 기초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제4기 고위정책과정 강의 자료집 . 서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0.
- 이수석. “6·15 공동선언이 북한의 대남정책에 미친 영향.” 남북교류협력과 북한의 변화 .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2005. 4. 15.
- 이영중. “햇볕정책 최후의 빅카드가 무르익고 있다.” 월간중앙 , 5월호. 2002.
- 임동원. “남북고위급회담과 북한의 협상전략.” 곽태환 외.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 관계 .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7.
- 전인영. “북한의 대미 협상행태의 특징.” 북한의 협상행태와 한국의 대응방안 . 서울: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95.
- 정세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5년: 회고와 전망.” 6·15 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 서울: 통일연구원, 2005. 6. 9.

- 정창현. “내각과 노동당 산하 대남기관 구조조정.” 민족 21, 5월호. 2005.
- _____. “4차 6자회담 휴회 이후의 남북관계 전망.” 6자회담으로 본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전망. 개혁전략연구소 세미나 발표문, 2005. 8. 25.
- 한호석. “6.15 공동선언 이후의 통일정세와 조국통일실현의 전망.” 2002. 7. 23 <www.onekorea.org>.
- 허문영. “광복60년, 남북관계 어디까지 왔는가?” 통일동우회 세미나 발표문, 2005. 9. 30.
- _____. “북한의 생존전략과 진로.” 정책연구 통권 132호. 서울: 국가안보정책연구소, 1999.
- _____. “북한의 통일정책.” 북한외교정책. 서울: 서울프레스, 1996.
- _____. “6자회담과 남북한관계 전망.” 성균관대학교 국가경영전략연구소 2005년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 2005. 11. 24.
- 홍양호. “탈냉전시대 북한의 협상행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황장엽.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월간조선, 12월호. 2000.
- 황진환. “북한의 대남·대미 협상행태 분석: 핵 협상을 중심으로.” 한반도군비통제. 국방부, 1995.
- 김일성. “미국 씨엔엔 텔레비존방송회사 기자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94년 4월 17일).”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_____. “조국통일의 유일한 출로는 전민족의 대단결이다(1994년 4월 10일).” 김일성저작집 44 .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김정일.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월 1일).” 김정일선집 12 .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_____.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1987년9월 25일).” 김정일선집 9 .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_____.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1998년 4월 18일).” 김정일선집 14 .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_____. “올해 당사업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가지 중심적 과업에 대하여(도당책임비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6년 1월 1일).” 김정일선집 5 .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_____.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2년 9월 9일).” 김정일선집 7 .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_____.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할데 대하여(1994년 5월 24일).” 김정일선집 13 .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George, Alexander L. “Strategies for Crisis Management,” Alexander L. George ed. *Avoiding War: Problems of Crisis Management*. Boulder: Westview Press, 1991.
- Lindskold, S. “Trust Development, the GRIT Proposal and Effect of Conciliatory Acts on Conflict and Cooperation.” *Psychological Bulletin*, Vol 85. 1978.
- Pruitt, Dean G. “Strategic Choice in Negotia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27, no. 2. Nov. 1983.
- Song, Jong-Hwan. “How the North Korean Communists Negotiate: A Case Study of South-North Korean Dialogue of the Early 1970s.” *Korea and World Affairs*, vol. 8, no. 3. Fall 1984.
- Zartman, I. William. “The Structure of Negotiation.” Victor A. Kremenyuk ed. *International Negoti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1991.

3. 기타

- 로동신문
- 민주조선 .
- 연합뉴스 .
- 조선일보 .
- 조선중앙통신 .
- 중앙일보 .

통일부. 남북대화 , 제68~70호. 2002~2004.

_____. 주간북한동향 . 각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현대조선말사전 , 제12판. 평양: 종합인쇄공장, 1981.

사회과학원. 정치용어사전 . 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1971.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 평양: 종합인쇄공장, 1992.

통일부.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해설자료』. 2005. 6. 24.

_____.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해설자료』. 2005. 9. 16.

_____. 『평화번영정책 추진현황』. 2005. 11. 15.

“학습참고자료(조선인민군출판사, 2000. 10),” 월간조선 , 3월호.
2002.

남북장관급회담 남측대표 인터뷰, 2005. 11. 29.

새터민 인터뷰, 2005. 11. 3.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면담, 2005. 11. 10.

〈부 록〉

1. 6·15 공동선언 후 남북관계일지

◇ 2000년

- ▲ 6. 13~15 = 남북정상회담(평양), 공동선언문 채택
- ▲ 6. 27~30 = 1차 남북적십자회담(금강산)
- ▲ 7. 29~31 =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
- ▲ 8. 15~18 = 제1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서울, 평양)
- ▲ 8. 29~9. 1 = 제2차 장관급회담(평양)
- ▲ 9. 2 = 비전향 장기수 63명 송환
- ▲ 9. 11~14 = 북한 김용순 비서 '특사' 자격 남한 방문
- ▲ 9. 18 = 경의선 기공식(임진각)
- ▲ 9. 20~23 = 제2차 적십자회담(금강산)
- ▲ 9. 25~26 =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제주)
- ▲ 9. 27~30 =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제주)
- ▲ 11. 30~12. 2 = 제2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서울, 평양)
- ▲ 12. 12~16 =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평양)

◇ 2001년

- ▲ 1. 29~31 =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금강산)
- ▲ 2. 26~28 =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서울, 평양)
- ▲ 3. 10~14 =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 방북
- ▲ 3. 15 = 남북 첫 이산가족 서신교환(각 300통)
- ▲ 4. 9 = 북 경비정,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 ▲ 4. 26 = 정부, 북한에 비료지원(20만 톤) 발표
- ▲ 5. 3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미사일 발사유예 선언
- ▲ 6.2~4 = 북한 상선 3척 제주해협 무단 통과
- ▲ 6. 24 = 북한 선박 서해 NLL 침범
- ▲ 8. 15~21 = 8.15 민족통일대축전 평양 행사
- ▲ 9. 15~18 =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
- ▲ 10. 3~5 =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당국간회담 1차회의
- ▲ 11. 14 =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 결렬(금강산)
- ▲ 11. 18 = 북한 경비정, NLL 침범

◇ 2002년

- ▲ 1. 30 = 미 부시 대통령, '악의 축' 발언
- ▲ 4. 3~6 = 임동원 특사 방북
- ▲ 4. 28~5. 3 = 이산가족 방문단 금강산 순차 방문
- ▲ 5. 11~14 = 박근혜 의원 방북
- ▲ 6. 29 = 서해교전 발발
- ▲ 7. 31 = 백남순 북한 외무상 ARF 외무회의 참가
- ▲ 8. 2~4 = 남북 금강산 실무대표 접촉
- ▲ 8. 12~14 = 제7차 장관급 회담 서울 개최
- ▲ 8. 14~17 = 8·15 서울 민족통일행사
- ▲ 9. 5~8 = 남북통일축구대회(서울)
- ▲ 9. 6~8 =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금강산)
- ▲ 9. 12 = 북,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채택
- ▲ 9. 13~18 = 제5차 이산가족상봉(금강산)
- ▲ 9. 17 = 제7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 ▲ 9. 18 =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 ▲ 9. 19~12. 14 = 남북, DMZ 지뢰제거 작업
- ▲ 9. 29~10. 14 =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 북측 선수단 참가(668명)
- ▲ 10. 3~4 = 켈리 미 차관보 방북
- ▲ 10. 19~22 =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평양)
- ▲ 10. 25 = 북, 미에 불가침조약 제의
- ▲ 10. 26~11. 3 = 북한 경제시찰단 방문
- ▲ 11. 29 =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공동측량 완료
- ▲ 12. 12 = 북, 핵동결 해제 및 핵시설 재가동 선언

◇ 2003년

- ▲ 1. 10 = 북,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
- ▲ 1. 21~24 =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
- ▲ 1. 27 =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판문점)
- ▲ 1. 27~29 = 임동원 특보 특사 자격으로 방북
- ▲ 2. 20~25 = 제6차 남북 이산가족상봉
- ▲ 2. 24 = 북 지대함 미사일 동해상 발사
- ▲ 2. 25 = 참여정부 출범
- ▲ 3. 1 =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 민족대회(서울)
- ▲ 3. 2 = 북 미그기 미군 정찰기 근접비행
- ▲ 4. 27~29 =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평양)
- ▲ 7. 9~12 = 제11차 남북장관급 회담(서울)
- ▲ 10. 14~17 = 제12차 남북장관급 회담(평양)

◇ 2004년

- ▲ 2. 3~6 = 제13차 남북장관급 회담(서울)
- ▲ 5. 4~7 = 제14차 남북장관급 회담(평양)
- ▲ 5. 26 = 제1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금강산)
- ▲ 6. 3~4 = 제2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설악산)
- ▲ 6. 9 = 제10차 이산가족 생사 확인 의뢰서 교환
- ▲ 6. 14 = 남북 경비정 국제공용주파수 무선교신 성공
- ▲ 6. 23~26 = 제3차 6자회담(베이징)
- ▲ 7. 1 = 정동영 통일부 장관 취임
- ▲ 7. 3 = 금강산 당일 관광 시작
- ▲ 7. 8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김일성 10주기 납축 조문 불허 비난 담화
- ▲ 7. 9 = 북,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7. 13~15, 속초) 연기
통보
- ▲ 7. 11~16 = 제10차 이산가족상봉(금강산)
- ▲ 7. 19 =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제3차 실무대표회담 무산
- ▲ 7. 27~28 = 베트남에서 탈북자 468명 입국
- ▲ 7. 29 = 조평통 대변인, 탈북자 입국 비난 성명
- ▲ 8. 14 = 남북, 아테네 올림픽 공동입장
- ▲ 9. 5 = 북, 조문불허와 탈북자 입국 이유로 민주노동당 대표단
방북 불허
- ▲ 11. 25~27 = 금강산 면회소건설 실무협의
- ▲ 12. 15 = 리빙아트,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 중 첫 준공식
및 시제품 생산, 정동영 통일부 장관(남), 주동창 당중앙특구
영도소조 국장(북) 행사 참관.

▲ 12. 30 = KT-조선체신회사, ‘개성공업지구 통신공급에 관한 합의서’ 체결

◇ 2005년

- ▲ 1. 13 = 조선적십자회, 비료 50만 톤 지원 요청
- ▲ 1. 20 = 북, 북한수역 침몰 남한 화물선 구조선박 진입 허용
- ▲ 1. 25 = 북, 화물선 구조 경비정 재투입 허용
- ▲ 2. 10 = 북 외무성 성명 통해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불참 선언
- ▲ 3. 25 = 남북 불교계, ‘일 약탈 북관대첩비 북에 복원’ 합의
- ▲ 4. 18 = 월북 어선 및 어민 남측에 인계
- ▲ 4. 23 = 이해찬 총리-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남북 당국자 회담 재개 필요성 공감(자카르타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 ▲ 5. 12 = 유홍준 문화재청장, 북관대첩비 반환 협의 문화재당 국간 회담 제의
- ▲ 5. 14 = 북, 남북당국간 실무회담(5. 16~17, 개성) 제의
- ▲ 5. 16~17 = 남북 차관급 회담(개성), 6. 21~24 제15차 장관급 회담 개최 합의
- ▲ 6. 21~24 = 남북 제15차 장관급 회담(서울)

2. 남북장관급회담 대표

구분	1차 (2000.7.29~ 7.31: 서울)	2차 (2000.8.29~ 9.2: 평양)	3차 (2000.9.27~ 9.30: 제주)	4차 (2000.12.12~ 12.16: 평양)	5차 (2001.9.15~ 9.18: 서울)
북한 수석대표	전금진 (내각책임차사)	"	"	"	김령성 (내각책임차사)
남한 수석대표	박재규 (통일부장관)	"	"	"	홍순영 (통일부장관)
북한 대표	김영신 (문화성 부상경무 대작품 국가심의 위 위원장)	"	허수림 (민족경제협력 련 합회 총사장경무 역성 광병지도국 차장)	"	③ "
	유영선 (교육성 국장)	"	"	"	④ 김만길 (문화성 국장)
	최성익 (조평통서기국 부장)	"	"	"	② "
	량태현 (내각사무국과장)	"	"	"	① 조성발 (내각사무국참사)
남한 수석대표	임낙용 (재정경제부 차관)	이정재 (재정경제부 차관)	"	"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김순규 (문화관광부 차관)	"	"	"	윤형규 (문화관광부 차관)
	김종환 (국방부 정책보좌관)	"	김형기 (통일부 실장)	"	이봉조 (통일부 실장)
	서영교 (통일부 국장)	"	"	"	"

구분	6차 (2001.11.9~ 11.14: 금강산)	7차 (2002.8.12~8.14: 서울신라호텔)	8차 (2002.10.19~ 10.22: 평양)	9차 (2003.1.21~1.24: 서울위커킬호텔)	10차 (2003.4.27~ 4.29: 평양)
북한 수석대표	김령성 (내각책임차사)	"	"	"	"
남한 수석대표	홍순영 (통일부장관)	정세현 (통일부 장관)	"	"	"
북한 대표	③ 허수림 (민족경제협력 연합회 총시장경무역성 광병지도국차장)	③ 김춘근 (민경련 서기장)	"	"	④ 허수림 (민족경제협력 연합회 총시장경무역성 광병지도국 처장)
	④ 김만길 (문화성 국장)	④ "	"	"	③ "
	② 최성익 (조평통서기국 부장)	② "	"	"	② "
	① 조성발 (내각사무국차사)	① "	"	"	① "
남한 수석대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	"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윤형규 (문화관광부 차관)	박문석 (문화관광부 차관)	"	"	오지철 (문화관광부 차관)
	이봉조 (통일부 실장)	"	"	"	신언상 (통일부 실장)
	서영교 (통일부 국장)	"	"	"	"

구분	11차 (2003.7.9~7.12 : 서울신라호텔)	12차 (2003.10.14~17 : 평양)	13차 (2004.2.3~2.6 : 서울신라호텔)	14차 (2004.5.4~5.7 : 평양)	15차 (2005.6.21~24 : 서울)
북한 수석대표	김령성 (내각책임참사)	"	"	권호웅 (내각책임참사)	"
남한 수석대표	정세현 (통일부 장관)	"	"	"	정동영 (통일부 장관)
북한 대표	허수림 (민족경제협력 연합회 총시장경무역성 광명지도국 처장)	④ "	④ 김춘근 (민경련 서기장)	"	② 김만길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김만길 (문화성 국장)	③ 전종수 (조평통 서기국 부장)	③ "	"	④ "
	최성익 (조평통서기국 부장)	② "	② 신병철 (내각참사)	"	③ "
	조성발 (내각사무국참사)	① 최영건 (건설건재공업 성 부상)	① "	"	① "
남한 수석대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	"	"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오지철 (문화관광부 차관)	"	"	"	배종신 (문화관광부 차관)
	신언상 (통일부 실장)	"	"	"	김천식 (통일부 국장)
	서영교 (통일부 국장)	"	"	"	한기범 (통일부 국장)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0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 중, 일, 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근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헌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항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에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운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F/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연례 정세 보고서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 · 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협동연구총서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적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성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I)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I)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 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형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C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I)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향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세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정세분석보고서」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